



연구보고서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박정호
정민현
강부균
정동연
김초롱
제성훈

세르게이 루코닌
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박정호·정민현·강부균·정동연·김초롱·제성훈·
세르게이 루코닌·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

연구보고서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 쇄 2019년 12월 24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744-4 94320
978-89-322-1072-8(세트)



국문요약

한·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

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 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 때문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

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

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러 관계의 경색, 북·미 갈등과 남·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목적 18

 2. 선행연구 검토 21

 3. 연구의 방법 23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24

제2장 이론적 검토 27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8

 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전략 28

 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30

 다.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 31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9

 가. 이론모형의 개관 39

 나. 거래비용의 결정 46

 다. 균형 조건 50

 라. 일반 균형 분석 54

 3. 요약 및 함의 60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63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64

 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과 방향 64

 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 67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70

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70
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주요 조직과 운영	72
3. 요약 및 함의	88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91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92
가.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92
나.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94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04
가.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104
나.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08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19
가.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119
나.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23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37
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137
나.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40
5. 요약 및 함의	149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53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154
가. 박근혜 정부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154
나. 문재인 정부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158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164
가. 현황	164
나. 평가	174

제6장 결론	181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합의	182
2. 정책 제언	188
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189
나.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192
다.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195
라.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196
마.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	198
 참고문헌	 200
 Executive Summary	 220



표 차례

표 3-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	67
표 3-2.	러시아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대외경제 전략 2020) ...	68
표 3-3.	러시아의 지역 및 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성과 (2018년)와 과제(2019년)	69
표 3-4.	경제개발부의 대외경제협력 관련 주요 부서의 활동 내용	74
표 3-5.	산업통상부의 최근 주요 대외경제협력 현황	76
표 3-6.	러시아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 목적과 기대효과	83
표 3-7.	러시아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 현황	84
표 3-8.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추진 내용	87
표 4-1.	중·러 총리회담 위원회 및 주요 소위원회	96
표 4-2.	중·러 간 주요 투자펀드	101
표 4-3.	일·러 정부간 주요 협의체	111
표 4-4.	‘러·독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및 주요 회의 의제	127
표 4-5.	‘러·독 정부간 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129
표 4-6.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130
표 4-7.	러·독 공공포럼 ‘페테르부르크 대화’의 경제 분과 구조· 운영·역할 및 주요 회의 내용	132
표 4-8.	‘러·독 상공회의소’의 구조·운영·역할	134
표 4-9.	‘동구무역위원회’의 구조·운영·역할	136
표 4-10.	러·독 경제협력 주요 거버넌스 구조·운영·역할	136
표 4-11.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 협의회’의 구조· 운영·역할 주요 협의 사항	142
표 4-12.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및 주요 협의 사항	143

표 4-13. ‘러·베트남 우선 투자사업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	144
표 4-14.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의 구조·운영·역할 ……………	144
표 4-15. ‘러·베트남 공동투자펀드’의 구조·운영·역할 ……………	145
표 4-16. ‘EAEU·베트남 FTA’의 구조·운영·역할 ……………	146
표 4-17. 러·베트남 주요 거버넌스 구조·운영·역할 ……………	147
표 5-1.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 ……………	165
표 5-2. 공동위 외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 ……………	169
표 5-3. 한·러 민관(1.5트랙)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 ……………	170
표 5-4. 한·러 양자간 금융지원체계 ……………	172
표 5-5.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 ……………	173



그림 차례

그림 2-1.	균형역량의 결정과 대외투자자의 수	45
그림 2-2.	거버넌스의 질과 대외경제협력의 관계	56
그림 2-3.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을 때 거버넌스의 질과 대외경제협력의 관계	59
그림 3-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72
그림 3-2.	러시아수출센터의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방향	79
그림 4-1.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2013~18년)	93
그림 4-2.	중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93
그림 4-3.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95
그림 4-4.	러시아의 대일본 교역(2013~17년)	106
그림 4-5.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106
그림 4-6.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10
그림 4-7.	일·러 투자 플랫폼 개념도	117
그림 4-8.	러시아의 대독일 무역(2014~18년)	121
그림 4-9.	독일의 대러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121
그림 4-10.	노르드스트림-1,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노선	123
그림 4-11.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24
그림 4-12.	러시아의 대베트남 교역액(2014~18년)	138
그림 4-13.	베트남의 대러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138
그림 4-1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140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러·중 교역 및 투자 현황	92
글상자 4-2. 러·일 교역 및 투자 현황	105
글상자 4-3. 러·독 교역 및 투자 현황(2014~18년)	120
글상자 4-4. 러·베트남 교역 및 투자 현황(2014~18년)	137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관계는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상호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왔다. 당시 한국정부는 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동시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한·러 관계 30년 동안 경제협력(교역, 투자 등)과 인적교류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 발발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발생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16년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나진·하산 프로젝트 및 남·북·러 삼각협력 무산 등이 양국의 관계 발전에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지역 국가들(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5개국, 코카서스 3개국, 몰도바, 몽골 등)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연계성 강화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북방정책'을 제안했다.¹⁾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방경제협력 위원회가 역사상 최초로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신북방정책 비전 선언 및 '9-Bridge' 전략 구상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 한·러 기업협의회가 출범하고 2019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등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토대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금융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한계, 미·중 통상

1) 「신북방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30).

분쟁의 확대 및 심화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중동(시리아, 이란, 예멘 등)의 안보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흐름과 함께, 한국정부는 다양한 대내적 도전과제(4차 산업혁명 시기 산업 전환과 디지털 경제 발전, 주력 산업의 성숙단계 도달에 따른 새로운 미래 경제성장 동력 마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극복,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수급선 다변화, 북방경제 공간 창출 및 유라시아 신흥시장 개척 등)에 직면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의 미래 국가 비전인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를 건설하는 작업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과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연계성 강화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양국 정부는 한·러 관계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한·러 관계 발전에는 중요한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한·러 관계가 미·러 관계의 변화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미·러 관계 악화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외적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러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런 동조화 경향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대러 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차원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국간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정부간 협의체, 지방 협력 채널, 상공회의소 및 기업간 협의회 등에 대한 재편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기존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대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총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을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째, 대러 협력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비참여국(중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참여국(독일과 일본)도 포함시켜 2개국씩을 선정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기점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정체되었던 데 비해, 이 국가들은 제재 참여국임에도 오히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 전략을 소개하고,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함과 동시에 대외경제협력과 거버넌스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더불어,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비교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한국의 대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줌으로써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 내실화, 즉 새로운 대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이다.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 및 해외 학계에서 사실상 부재하다. 최근의 러시아 경제 관련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주요 경제 이슈와 대외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체로 많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경제체제 전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 러시아의 극동지역 발전 정책, 북극 항로 개발, 극동지역의 경제특구(선도개발지구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유라시아 경제연합,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평가,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성과, 남·북·러 삼각협력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들이 발간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재영 외(2015)는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및 투자협력, 지역개발협력(극동지역) 등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²⁾ 제성훈 외(2014)는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이

2) 이재영 외(2015).

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제반 상황과 지역개발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의미, 푸틴 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소개,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주요 국가들(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북한 등)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푸틴 집권 3기 한국의 구체적 대응 방안과 주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³⁾ 2017년 조영관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라는 단행본에서 극동지역의 투자환경과 경제 동향을 고찰하고,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 현황과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3가지(제조업, 항만물류,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자협력 방안을 제시했다.⁴⁾ 상기 연구들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유용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는 공통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토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본질적인 차별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고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최초의 연구 성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난 30년간의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한·러 경제협력 2.0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유럽(독일), 동북아(중국과 일본), 아세안(베트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제재 참여국(독일과 일본)과 제재 비참여국(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셋째,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존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3) 제성훈 외(2014).

4) 조영관(2017).

동시에, 주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러시아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출장(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을 통해 현지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4개국 경제협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3. 연구의 방법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이 연구의 추진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

먼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1차 및 2차 문헌연구와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학술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대외경제협력과 거버넌스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본 연구 주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4개국 정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둘째, 연구의 적실성과 분석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했다. 특히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론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모형에 기초해서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3가지 측면(구조, 역할, 운영)에서 진행했다.

셋째, 담당 연구진이 4개국(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해외출장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

을 뿐 아니라,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⁵⁾ 현지 학계 전문가, 정부 관리, 상공 회의소 담당자, 한국 기업인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이 보고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넷째, 국내 대학과 정책연구원 소속 러시아 전문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러시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⁶⁾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다섯째, 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2명의 러시아 전문가에게 외부 위탁⁷⁾을 했다.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했다. 먼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또한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개발했으며, 모형 분석을 통해 특정 경제 현상의 핵심적 작동원리를 명확하게 식별해내고자 했다.

5)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사회과학정보연구원, 극동연구원 아세안센터, 고등경제대학, 러시아-독일 상공회의소 등), 베트남(경제연구소, 상공회의소 산하 WTO 센터, 경제전망정보센터), 중국(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유라시아연구소,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중국인민대 총양금융연구원),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국제경제본부, 사단법인 러시아·NIS 무역회 러시아·NIS 경제연구소) 등 4개국의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6) 한국의 대외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 러시아 전문가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7) 프리마코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IMEMO) 소속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 중국센터 장과 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Ekaterina Zaklyazminskaya) 연구위원이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둘째,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기관(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극동북극개발부 등)과 관련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등)의 대외경제협력 조직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금융 플랫폼(투·융자 플랫폼, 부문별 펀드 등)과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협의체, 국제포럼 등) 등의 주요 내용과 특징도 상세하게 고찰했다.

셋째,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이후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특히 3가지(구조, 운영, 역할) 측면에서 유럽(독일), 동북아(중국, 일본), 아세안(베트남) 지역 국가들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국의 주요 특징과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시도했다.

넷째,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조의 체계성, 구성단위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성, 구성단위 역할의 상호보완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이다. 본고는 주요 4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의 체계화와 내실화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러 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유용한 학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검토

-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분석 전략

198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인 ‘거버넌스(governance)’는 분야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거버넌스는 법, 규범, 권력, 또는 언어를 통해 가족, 부족,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가, 시장,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시도되는 통치(governing)의 모든 과정을 총칭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또한 거버넌스는 국가와 그 제도보다 사회적 실천 및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부(government)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⁸⁾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거버넌스란 정부가 속한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반적인 국정관리체계를 의미한다.⁹⁾ 따라서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 또는 체제라 할 수 있다.¹⁰⁾ 결국 거버넌스란 학문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어왔으며, 분야별로 연구의 주제 및 범위가 상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 넓게 봤을 때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책의 실행 및 성취(implementation)와 관련하여 명문화되거나 비명문화된 모든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이렇듯 거버넌스의 정의는 비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불명확하다. 그러나 한

8) Bevir(2012), p. 1.

9) 기획재정부(a), 『시사 경제용어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3).

10) 오승은(2006), p. 51.

11) 우창빈(2014), pp. 221~222.

12) UNDP(2014), pp. 2-14.

국의 대외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본고의 목적을 감안하면, 분석 대상이 되는 거버넌스 개념을 '다른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명문화되었거나 비명문화된 모든 제도적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국가간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규정, 정책, 행정 시스템과 같은 공식적 제도(formal institutions)뿐 아니라 관습, 규범, 언어 및 상호신뢰 등의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s)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우 일반적인 경제학 모형을 개발하여 엄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경제학적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본고의 목적은 특정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의 대외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엄밀하고 논리적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 또는 거래 활동의 배후에 존재하는 경제적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그리고 이에 기반한 경제주체의 최적 의사결정(optimal decision)을 논리적으로 명철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경제모형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특정 경제 현상의 핵심적 작동원리를 명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개념적 정의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경제협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적 정의에서 비롯되는 거버넌스의 무수히 많은 역할 가운데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낸 후에

야, 비로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경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 경제학(neo-institutional economics)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개념을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경제협력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 소개하는 이론모형을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경제협력에 있어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과 그러한 역할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했다.

그러나 경제모형의 분석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경제모형에 내재하는 단순성(parsimoniousness)과 추상성(abstractness)의 미덕은 모형을 통한 결론과 설명력에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현실성(reality)과 지역성(regionality)의 부재를 필연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론모형의 분석에서 얻어낸 결론과 일관되는 경험적 실례 및 실체적 증거를 현실에서 찾아낸 후, 이를 도대로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주요국의 대외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은 제4장과 제6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에서 정의하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다른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제도 일반을 통칭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정의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공식 제도인 법령, 정책, 규정, 행정 시스템 그리고 비공식 제

도인 관습, 규범, 언어 및 상호 신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질뿐 아니라 대외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입안,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단위로서 정부 또는 민간 주도의 결사체(association), 그리고 이러한 결사체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시 제도의 시스템적 구성요소로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속한다. 예를 들면 정부부처와 국회,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각각의 결사체뿐 아니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더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가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도 포괄한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질(quality)은 위에서 나열한 제도적 특질뿐 아니라, 시스템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결사체 및 이 네트워크의 구조, 운영, 역할 등에 의해 매우 다채로운 방식으로 결정된다. 물론 이론모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가 대외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경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가 지녀야 할 핵심적인 조건을 추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려낸 핵심적인 조건을 현실에서 충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보유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보유한 국가의 대외경제협력 조직, 정부간 대외경제협력 조직, 민간(또는 민관) 대외경제협력 조직, 현지 거점 및 금융지원체계 등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내에서 이러한 구성단위들의 운영 메커니즘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대외경제협력 간의 핵심적 연결고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경제협력이 주로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협력은 결국 민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의미

한다. 협력은 그 정의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혹은 다자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제협력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 당사자 모두가 소기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협력 당사자가 경제협력을 통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상호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제협력은 협력에 참여한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쌍방 혹은 다자간의 자발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발적 경제협력은 자발적 거래의 한 부분집합이 된다.

경제협력을 거래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은 거래비용일 것이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자발적 거래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일컫는다. 따라서 같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경제적 거래, 혹은 경제적 협력은 더욱 어려워진다. 높은 거래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거래를 통해 보장될 때 비로소 거래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외경제협력의 거래비용이 낮아(높아)질수록 대외경제협력은 활성화(위축)된다.

종합하면, 대외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제도적 시스템의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원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민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일종의 경제적 마찰(friction)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그리고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자발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적 마찰이 현실에 존재하는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¹⁴⁾ 조지 애컬로프의 유명한 중고차 시장 예시는 중고차 구매자보다 중고차 판매자

13) Williamson(1981), pp. 548-577.

14) Akerlof(1970), pp. 488-500.

가 거래 대상인 중고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판매가격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나쁜 중고차, 소위 '레몬(lemon)'만 남게 되어 중고차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로 인해 훌륭한 상품이 선택되지 않고, 좋지 못한 상품만 선택되는 이른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로서 역선택 현상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란 거래의 한 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정보 우위를 악용하여 정보 열위에 있는 행위자에게 경제적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러시아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기술의 소유권(지식재산권) 일부를 이전받아 자신의 자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대방이 새로운 기술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공동 기술 개발이라는 협력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계약 상대방의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은 새로운 기술의 소유권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러시아 기업은 러시아에서 자신이 갖는 정보의 우위를 활용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기술 개발이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관련 법령 등 현지 제도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원래의 계약보다 제한적인 소유권만 이전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다. 즉 러시아에 진출(투자)하는 경우 현지의 협력 대상자가 갖는 정보의 우위로 인해 사업계약이 사전에 설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역선택 현상에서 발생하는 거래 제한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야 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제주체는 적절한 협력(거래) 대상 및 사업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거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를 추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합한 협력 상대를 찾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기회비용을 정보 탐색비용(search cost)이라고 한다면, 탐색비용은 정보 비대칭하에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보수집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탐색비용이 매우 크다면, 역선택 현상을 피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므로 거래(협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잘 작동하는 기관,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가 존재하여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각종 법, 금융 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거나 국가에서 적절한 협력 사업 및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매칭(matching)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탐색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결국 불완전 정보에서 비롯되는 탐색비용은 대외경제협력 수준을 결정하는 대외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 주요 이유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거래가 이루어진 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정보를 추적해 활용하는 행위를 감시(monitoring)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감시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된다. 감시비용은 법, 행정 시스템 등의 제도적 변수뿐 아니라 언어, 규범, 관습과 같은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 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과 관련한 법령이 매우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경우, 또는 행정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감시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약 이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거나 언어,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경우, 역사

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로 뒷받침되는 협력관계를 쌓았을 경우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감시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은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원래 설정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꾸준히 수집, 축적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바로 자발적 거래, 또는 자발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거래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국 거래비용의 주요한 원천은 현실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다음 절에서는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이 거래비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론 모형을 통해 엄밀하게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이 높아(낮아)질수록 거래비용은 상승(하락)함을 논증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조건은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을 낮추는 것이고,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을 매우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일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러시아 경제제재처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에도 대외경제협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거래비용이 상승하여 대외경제협력이 위축되는데,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이러한 거래비용의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감시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경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대외경제협력이 덜 위축된다. 즉 바람직한 거버넌

15) 계약 이행을 가로막는 이른바 속박(hold-up) 문제 역시 거래비용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속박 문제란 원청-하청 관계와 같이 경제적 예측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거래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문제를 말한다(Schmitz 2001, pp. 2-14). 속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래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안전장치는 거래비용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거래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속박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스에는 대외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직접효과는 물론이고,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대외경제협력을 안정화하는 간접효과도 존재한다.

또한 본 장에서 고려한 이론모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을 제약하는 거래비용의 두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 중에서 거래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탐색비용이 아닌 감시비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탐색비용은 대외협력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가의 선택 문제에서 이윤을 통해 거래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시비용은 거래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탐색비용이 낮아도 감시비용이 높으면 거래비용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 이는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정보 제공, 매칭 활성화 등의 탐색비용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경제주체의 감시비용을 낮게 만들어 원활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요체는 효과적인 감시 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기술(artificial commitment technology)’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대외경제협력에 있어 상호 신뢰라는 비공식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비즈니스 관행상 사적 신뢰감을 형성한 상대방과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면 공식 계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약 상대방이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자와 맺은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공식 계약 이외에도 사적 연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¹⁶⁾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러시아 사회의 높은 위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및 집단주의(collectivism) 특성과 연관해 설명한

16) 예를 들어 핀란드의 한 기업이 러시아에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2,000만 유로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었으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주지사를 대신하여 새로 부임한 후임 주지사가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다. 17) 높은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사적 신뢰를 형성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의 판단과 결정에 순순히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및 언어적 동질감 또는 상호 신뢰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법, 규정, 정책, 행정 시스템과 같은 공식적 제도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 제도는 많은 경우 비공식적 제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감시비용을 완화하는 공식 제도의 구축 과정뿐 아니라, 이미 구축된 공식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비효율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턱대고 공식 제도만을 통해 감시비용을 낮추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겨우 공식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시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없다. 예를 들어 통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공식 제도 마련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관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으로 여전히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만큼 협력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 공식적 제도를 통해 감시비용을 낮추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두 가지 추론을 함축한다. 첫째, 러시아와의 초기 협력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상술한 러시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협력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공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초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협력을 주도하거나 기술과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

17) 여기서 언급한 '위험 회피', '집단주의'라는 사회문화적 특질은 사회심리학자 Hofstede(2001)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그가 측정한 국가별 위험 회피와 집단주의 정도는 러시아와 같은 구 공산권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위주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언어, 문화, 관습, 상호 신뢰 등의 비공식적 제도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한다. 특히 공식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협력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 초기 단계에서 감시비용을 낮춰 원활한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 제도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독일, 중국, 베트남 등은 상호 신뢰 자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러시아와 안정적인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특수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국가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다양한 민·관 교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이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1950년대부터 양국의 정부 주도로 학자, 학생, 기술자 교류 등의 밀도 있는 민간 교류를 지속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폭넓은 동반자 의식과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매우 모범적인 대외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은 협력 경험을 충분히 축적한 2015년에 더 예측 가능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EAEU와 FTA를 체결했다. 공식적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협정은 2016년에 발효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독일 역시 러시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양국 정부가 주도한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를 지속해왔다. 양국 정부간 협의체를 제외하면 별다른 공식적 거버넌스가 없었음에도, 이들간에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 역시 최근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위 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 소극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방 영토 및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최근 양국 정상들이 매우 빈번하게 회동하고 있다. 국가주 의적 색채를 띠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협력 초기 단계에서 국가 정상이 주도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가 정상 주

도의 협력 사업을 통해 민·관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경험이 축적된다면, 앞의 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비공식 제도로서 상호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안정적인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가. 이론모형의 개관

본 절에서 소개하는 이론모형¹⁸⁾은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비용이 대외경제협력 수준을 결정함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경제모형이다.¹⁹⁾ 모형의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 A와 이에 인접한 다른 소규모 개방경제 B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A와 경제 B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두 국가 사이의 자본 이동은 자유롭다.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양국의 노동력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²⁰⁾ 이때 경제 A는 서로 다른 자체적 기업 역량(capability) z 를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민간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가 i 의 기업 역량 z_i 는 개별 기업이 소유한 유·무형의 기업자산 및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설

18) 본 모형은 Jeong(2018)에서 개발한 모형을 참고하였다.

19)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 기(one-period)만 고려하는 정태적 일반균형(sta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 모형을 다기간(multiple-period)으로 확장하여도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이론모형을 2기간 중첩세대(two-period OLG) 성장모형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는 동태적 일반균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에서도 정성적으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식 2-2]에 나오는 비용함수 ψ 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나타내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 A 에 대해 선형성(linearity)을 가지면, 모형 내에서 가격변수가 시간에 대해 고정되고 실물변수(quantity variable)의 성장률이 일정한 정상성(stationary)이 보장됨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

20) 경제 A를 한국, 경제 B를 러시아로 상정한다면, 양국 경제는 실제로 소규모 개방 경제적 특성을 보이므로 무리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양국의 노동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이 없어도 본 장의 이론적 결론은 정성적인 측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명하는 파라미터(parameter)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A의 기업 분포를 기업 역량 $z \in [z_L, z_H]$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z)$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분포함수 $F(z)$ 는 z 에 대해 연속이며(continuous) 강단조성(strict monotonicity)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 기업가의 역량 z 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세밀하게 순서 지을 수 있다는 암묵적 가정에 기초한다.²¹⁾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질적인(heterogeneous) 기업 역량 z 에 따라 경제 B와의 경제협력 여부가 결정된다.

각 기업가 i 는 자신의 고유한 생산성 A_i 를 가지고 생산함수 $f(k, l)$ 로 표현되는 경제 A와 B의 공통 생산기술에 이를 활용하여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을 생산한다. 여기서는 문헌에서의 표준적인 관례에 따라 $f(k, l) = [k^\alpha l^{(1-\alpha)}]^\nu$ 의 콥-더글라스(Cobb-Douglas)형 ν 차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본고에서 가정하는 생산함수 $f(k, l)$ 에서 $\alpha \in (0, 1)$ 는 소득의 자본소득분배율을 의미하며, $\nu \in (0, 1)$ 는 Lucas(1978)²²⁾를 따라 모든 기업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생산요소 통제력(span of control)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기업가 i 의 생산량 y_i 는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y_i = A_i^{1-\nu} f(k_i, l_i) = A_i^{1-\nu} [k_i^\alpha l_i^{(1-\alpha)}]^\nu \quad [\text{식 2-1}]$$

여기서 k_i 와 l_i 는 기업가 i 가 시장에서 고용한 자본과 노동을 나타낸다.

생산을 앞두고 각각의 기업가는 경제 B에 대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진출이란 시장 진입,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의 모든 직·간접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경제 A의 기업가 i 는 경제 B의 적절한 사업 대상을 탐색하여 현지에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다. 또한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경제 B에서 적절한 협력 대상을 탐색한 후 공동의 기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경제협력에는 크게 두 가지

21) 즉 서로 다른 어떤 기업 i 와 j 에 대해 $z_i \neq z_j$ 를 의미한다.

22) Lucas(1978), pp. 508-523.

종류의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현실의 불완전한 정보라는 제약 아래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 대상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데 소요되는 이른바 정보 탐색비용(search cost)이다. 둘째, 적절한 사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자체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투자비용이다. 즉 경제 B에 대한 시장 진입, 기술 투자, 판로 개척 등의 실질적인 투자에서 비롯되는 협력 비용이다. 즉 전자가 협력 이전에 적합한 사업 대상을 찾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본 모형에서는 기업 역량 z 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경제 B의 어떤 경제주체와 협력하는 데 드는 비용을 $\psi(z)$ 로 표시하기로 한다. 위의 논의에 따라 $\psi(z)$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si(z) = \lambda(z) + \sigma\chi(z) \quad \text{[식 2-2]}$$

[식 2-2] 우변의 둘째 항에서 $\chi(z)$ 는 z 의 기업 역량을 가진 경제 A의 기업가가 경제 B에 진출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 프로젝트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역량이 좋은 기업일수록 자신에게 잘 맞는 적절한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쉬운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B에 대한 정보 수집을 수월하게 하는 더욱 효율적인 정보 조직이 기업 내에 갖추어져 있거나, 그러한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적은 탐색비용 $\chi(z)$ 이 요구될 것이다. 이때 탐색비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서 σ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값이 작을수록(클수록) 모든 기업가의 탐색비용이 동시에 낮아지는(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chi(z)$ 로 대표되는 탐색비용은 개별 기업의 역량 z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데 반해, σ 는 개별 기업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탐색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A에 잘 작동하는 상공회의소가 존재하여 경제 B와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각종 법, 금융 제도에 대한 신뢰할 만

한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면 σ 는 비교적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 A 또는 경제 B에서 양국 기업가들 사이의 적절한 협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매칭(matching)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σ 의 값은 작아질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경제 A의 모든 기업가는 각자에게 적합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더 적은 탐색비용 $\sigma\chi(z)$ 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σ 는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는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탐색비용을 대변하는 대외협력 거버넌스의 한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식 2-2] 우변의 첫째 항 $\lambda(z)$ 는 정보탐색으로 선정된 협력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조달하여야만 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정보탐색 결과 특정 사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 B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판매했을 때 더욱 높은 이윤이 창출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설비 건설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비슷한 예로 어떤 기업이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 B의 어떤 경제주체와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면, $\lambda(z)$ 는 이러한 기술 협력에 필요한 R&D 투자, 합법적 기술 이전에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이때 탐색비용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체 역량 z 가 높을수록 실제 투자비용 $\lambda(z)$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일수록 경제 B에 생산 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드는 유·무형의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유사한 예로 특정 상품 생산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를 탐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경험 등을 포함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적인 기술 흡수 역량이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역량이 우수할수록 기술의 습득 및 이전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B에 진출(협력)하는 데 필요한 탐색비용과 실제 투자비용을 모두 합한 총투자비용 $\psi(z)$ 는 개별 기업의 역량 z 가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토대로 협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 $\psi(z)$ 이 z 에 대해 강한 감소함수(strictly decreasing function)라고 가정하기로 한다.²³⁾ 보다 구체적으로 비용함수 $\psi(z)$ 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lim_{z \rightarrow z_L} \psi(z) = \infty; \lim_{z \rightarrow z_H} \psi(z) = 0 \quad [\text{식 2-3}]$$

현실에서 투자란 기본적으로 더 높은 미래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투자의 기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 B와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는 p 의 확률로 성공하고 $1-p$ 의 확률로 실패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기업 i 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성 A_i 는 γA 가 된다. 여기서 γ 는 1보다 큰 정수이며, A 는 경제 A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일컫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 즉 p 의 확률로 기업 i 가 대외진출(협력)에 성공하였을 경우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 A 보다 더 높은 γA 만큼의 생산성을 개별 생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1-p$ 의 확률로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생산성은 0이 된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업 i 가 경제 B에 진출(투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은 경제 A의 평균적인 생산성 A 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²⁴⁾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듯이, 모든 기업가는 위험 중립적(risk-neutral)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z 의 기업 역량을 가진 기업가는 아래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것이다:

23) 기술적인 측면에서, $\psi(z)$ 를 z 에 대해 강한 감소함수로 가정하는 이유는 균형의 유일성(uniquness)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가정은 경제 B에 진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한계기업의 역량 z^* 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4) 이러한 가정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으로, 경제 B에 진출(협력)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생산성이 진출에 성공했을 때의 생산성보다 작고 진출에 실패했을 때의 생산성보다 크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분석의 결론은 정성적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pi(z) = \max\{p[\pi_1 - (1 + \tau)\psi(z)], \pi_0\} \quad [\text{식 2-4}]$$

$$\begin{aligned} s.t. \quad \pi_1 &= \max_{\{k_1 > 0, l_1 > 0\}} (\gamma A)^{1-\nu} f(k_1, l_1) - rk_1 - wl_1, \\ \pi_0 &= \max_{\{k_0 > 0, l_0 > 0\}} A^{1-\nu} f(k_0, l_0) - rk_0 - wl_0. \end{aligned}$$

여기서 π_1 은 해당 기업가가 경제 B에 진출(투자)하고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을 때 생산활동을 통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나타낸다. 반대로 π_0 는 경제 B에 진출하지 않기로 했을 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π 는 경제 B에 진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측한 최대의 이윤을 의미한다. 여기서 첫째 항의 $\pi_1 - (1 + \tau)\psi(z)$ 는 기업 역량 z 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경제 B에 투자하였을 때 그 투자가 성공하여 π_1 의 이윤을 얻은 후, 투자에 든 $(1 + \tau)\psi(z)$ 를 빼고 남은 이윤(profit)을 의미한다. 이때 투자비용 $\psi(z)$ 대신 $(1 + \tau)\psi(z)$ 를 빼는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하에서는 거래 이행(commitment)을 강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즉 $1 + \tau$ 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모되는 계약이행비용 혹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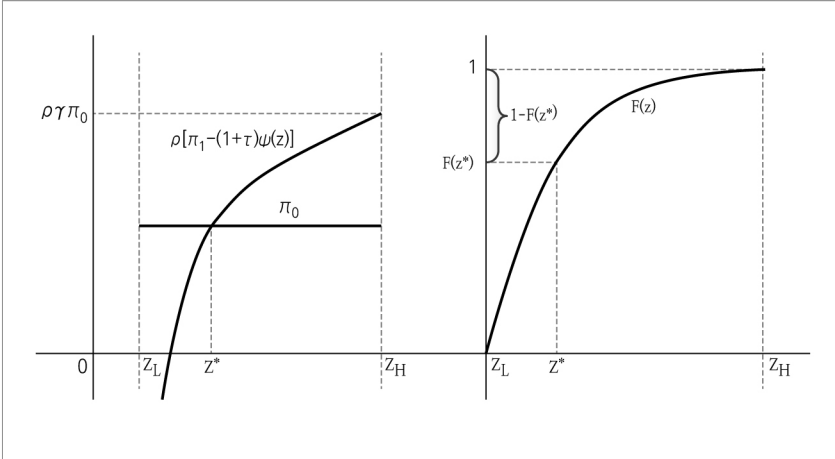
위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토대로 모형 분석을 위한 균형의 유일성을 담보하는 아래와 같은 보조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²⁵⁾:

보조 정리 1: $p\gamma > 1$ 을 만족하면, 어떤 가격 벡터 $(r, w, \tau) \in R_{++}^3$ 가 주어졌을 때 z^* 보다 더욱 큰 z 를 가진 모든 기업가는 경제 B에 투자하고 그보다 작은 z 를 가진 기업가는 투자하지 않는 균형역량 $z^* \in (z_L, z_H)$ 가 유일하게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그 역(逆)도 성립한다.

보조 정리 1은 임의의 가격체계 (r, w, τ) 이 주어졌을 때, 경제 B와의 협력(투자) 성공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히 큰 이상($p\gamma > 1$) 경제 A에는 경제 B에 협력하는(투자하는) 기업가가 항상 존재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5) 본 장에서 도출하는 모든 정리의 증명은 저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

그림 2-1. 균형역량의 결정과 대외투자자의 수



자료: 저자 작성.

각각의 가격체계 (r, w, τ) 에는 단 하나의 균형역량(equilibrium capability threshold) z^* 만이 존재하고, 그러한 균형역량 z^* 보다 더욱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가는 경제 B와의 협력(투자)을 시도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가는 협력(투자)하지 않는다.

[그림 2-1]은 보조 정리 1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1]의 왼쪽 그림을 보면, 보조 정리 1에 정리된 것처럼 주어진 가격하에서 균형역량 z^* 가 유일하게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의 역량 z 가 높아질수록 경제 B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균형역량 z^* 가 결정되면, 균형에서 경제 B에 투자하는 기업가의 수(mass)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1]의 우측 그림은 경제 A의 기업가 분포를 기업 역량 z 의 분포 $F(z)$ 를 활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보조 정리 1에 요약된 것처럼 기업 역량 z 가 균형역량 z^* 보다 더욱 높은 모든 기업가는 경제 B에 투자하게 되므로 대외투자자의 수는 }로 표시한 $1 - F(z^*)$ 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경제 B에서 실제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총액 $\Lambda(z^*)$ 는 다음과 같다:

$$A(z^*) = \int_{z^*}^{z_H} \lambda(z) dF(z) \quad [\text{식 2-5}]$$

따라서 경제 A에서 경제 B에 투자하는 투자 총액 $A(z^*)$ 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균형역량 z^* 가 낮을수록 커지게 된다. 이는 균형역량 z^* 가 낮을수록 경제 B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장에서는 거버넌스가 정보의 불완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수록 균형역량 z^* 가 낮아져 대외경제협력에 확대됨을 이론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나. 거래비용의 결정

경제 A의 기업가가 경제 B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기업의 역량 z 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psi(z)$ 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해당 협력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그 보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외경제협력에 계약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사전에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 i 가 경제 B의 어떤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 i 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lambda(z)$ 를 지불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기술의 소유권(지식재산권) 일부를 이전하여 자신의 자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문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새로운 기술의 소유권을 순순히 이전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즉 공동 기술 개발이라는 협력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계약 상대방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은 새로운 기술의 소유권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경제 B에서 자신이 갖는 정보의 우위를 활용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실패했다고 거짓말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다. 다시 말해 탐색비용을 지출하고 적절한 협력 상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협력 상대방과 거래(계약)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B에 진출(투자)하는 경우 현지의 협력 대상자가 갖는 정보의 우위로 인해 사업 계약이 사전에 설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계약 이후의 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제주체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축적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를 축적하는 행위를 감시(monitoring)라고 부를 수 있다.

감시에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은 법, 행정 시스템 등의 제도적 변수뿐 아니라 언어, 규범, 관습과 같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과 관련한 법령이 매우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경우, 또는 행정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감시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약 이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거나 언어,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감시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여야 하는 감시비용이 균형에서 거래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시비용이 대외경제협력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경제 B의 계약 당사자가 협력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실패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정보의 열위에 있는 기업가 i 가 $\rho(z)$ 의 확률로 감시비용 μ 를 들여 감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감시를 통해 거짓으로 보고

한 것이 적발되면, 경제 B의 계약 당사자는 기업가 i 에게 피해보상으로 협력이 성공했을 때 기업가 i 가 얻어야 할 순이익 $\pi_1 - (1 + \tau)\psi(z)$ 를 지불한다. 만약 기업가 i 가 감시를 하지 않아 거짓 보고가 들키지 않았다면, 경제 B의 계약 당사자는 기업가 i 의 생산기술(생산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π_1 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B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 i 의 기업 역량이 z 일 때, 기업가 i 는 아래의 문제를 풀어 최적 수준의 거래이행비용 $1 + \tau(z)$ 와 감시 확률(probability to monitor) $\rho(z)$ 를 결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 \max_{\{\tau(z) > 0, \rho(z) \in [0,1]\}} p\{\pi_1 - [1 + \tau(z)]\psi(z)\} && \text{[식 2-6]} \\ \text{s.t. } & p[1 + \tau(z)]\psi(z) - (1 - p)\rho(z)\mu \leq (1 + r - \delta)\psi(z), && \dots \text{ (PC)} \\ & \pi_1 - [1 + \tau(z)]\psi(z) \leq [1 - \rho(z)]\pi_1. && \dots \text{ (IC)} \end{aligned}$$

여기서 r 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며, δ 는 자본의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을 나타낸다. 우선 이벤트의 순서(timing)에 따라, [식 2-6]으로 표현된 기업가의 거래비용 최적화 문제는 이미 경제 B에 협력하기로 결정한 다음의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식 2-6]은 [식 2-4]로 표현된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푼 기업가가 경제 B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거래비용 $1 + \tau(z)$ 를 최소화하여 계획된 투자비용 $\psi(z)$ 가 그것의 기회비용과 같거나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문제이다.

먼저 위 식 (PC)의 우변은 기업 i 가 투자비용으로 지출을 계획한 $\psi(z)$ 를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확실히 얻게 되는 수입이다. 따라서 이 수입은 투자비용 $\psi(z)$ 의 기회비용이 된다. 반면 (PC)의 좌변은 p 의 확률로 기업 i 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회수 가능한(이윤 π_1 형태로) 총투자비용 $[1 + \tau(z)]\psi(z)$ 에서 $1 - p$ 의 확률로 실패했을 때 $\rho(z)$ 의 확률로 협력 기업을 감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μ 를 뺀 값이다. 따라서 이것은 계획된 대로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총 기대비용(total expected cost)이 된다. 종합하면

(PC)는 기업 i 가 원래 계획한 대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참여조건 (participation compatibility)을 의미한다.²⁶⁾ 한편 위 식의 (IC)는 계약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인조건(incentive constraint)을 나타낸다.

위의 문제를 통해 최적의 계약이행비용 $1 + \tau(z)$ 와 감시확률 $\rho(z)$ 를 요약하는 아래와 같은 보조 정리를 얻을 수 있다:

보조 정리 2: 임의의 $(r, \pi_1, \psi(z)) \in R_{++}^2 \times R_+$ 가 주어졌을 때, 최적 계약이행비용 $1 + \tau(z)$ 와 감시확률 $\rho(z)$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 \tau = \frac{1 + r - \delta}{p} \frac{p\pi_1}{p\pi_1 - (1-p)\mu}, \quad [\text{식 2-7}]$$

$$\rho(z) = \frac{(1 + r - \delta)\psi(z)}{p\pi_1 - (1-p)\mu}.$$

우선 보조 정리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적 계약이행 비용 $1 + \tau$ 가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감시비용 μ 가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결론은 직관적으로 매우 자명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μ 의 비용을 써서 감시를 하는 목적은 계약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계약을 원래대로 원만히 이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감시비용

26) (PC)에서 기업가의 이윤 π_1 대신 비용 $[1 + \tau(z)]\psi(z)$ 만 고려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의 [식 2-6]을 푸는 시점에서 이미 경제 B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계획한 투자비용이 투자의 기회비용인 (PC)의 우변보다 작아지도록 만들면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27) 여기서는 $p\pi_1 > (1-p)\mu$ 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이 조건은 앞의 [식 2-4]로 요약된 기업가 i 의 이윤 극대화문제의 해를 얻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건은 $1 + \tau > 1 + r - \delta$ 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1 + \tau > 1 + r - \delta$ 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가 i 는 금융시장에서의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이윤 극대화 문제의 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p\pi_1 > (1-p)\mu$ 조건이 충족되면 정리 2의 $\rho(z)$ 가 0과 1 사이의 값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참고로 $p\pi_1 > (1-p)\mu$ 조건은 주어진 $(r, A) \in R_{++}^2$ 에서 γ 가 충분히 크면 항상 충족될 수 있음을 쉽게 보일 수 있다.

μ 가 상승한다는 것은 감시의 목적이 되는 계약 이행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계약 이행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때 계약이행비용 $1 + \tau$ 는 협력 사업이라는 쌍방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1 + \tau$ 로 표현된 값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소모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1 + \tau$ 를 거래비용으로 정의하고, 거래를 방해하는 이러한 비용이 감시의 효율성을 대변하는 감시비용 μ 와 탐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σ 라는 제도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균형적 관점에서 엄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다. 균형 조건

일반 균형의 도출을 위해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의 청산 조건(clearing condition)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청산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균형에서 경제 A가 경제 B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투자 총액 Ψ^*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Psi^* = \Psi(z^*; \mu, \sigma) &= \int_{z^*}^{z_H} \psi(z) dF(z) \\ &= \underbrace{\int_{z^*}^{z_H} \lambda(z) dF(z)}_{\text{투자비용 합계}} + \sigma \underbrace{\int_{z^*}^{z_H} \chi(z) dF(z)}_{\text{탐색비용 합계}} \end{aligned}$$

[식 2-8]

즉 ψ^* 는 균형에서 경제 A의 기업가 중에서 경제 B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지출하는 비용 총액을 의미한다. [식 2-8]의 우변에서 앞의 ‘투자비용 합계’ 부분은 경제 B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기업가들의 협력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투자비용을 모두 합한 값이다. 반면 뒤의 ‘탐색비용 합계’는 경제

B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가가 적절한 협력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지불하는 탐색비용을 합한 값이다. 이때 앞의 참여조건 (PC)와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을 통해 다음의 균형 조건을 얻을 수 있다:

$$\underbrace{p(1+i)\Psi(z^*; \sigma, \mu) - (1-p)\mu \int_{z^*}^{z_H} \rho(z) dF(z)}_{\text{경제 B와 협력하였을 때 회수가 가능한 수입}} = \underbrace{\frac{(1+r-\delta)\Psi(z^*; \sigma, \mu)}{\text{경제 B와 협력했을 때 기회비용}}}_{\text{[식 2-9]}}$$

위 식은 Ψ 가 어떠한 값을 갖든 항상 성립하여야 하는 항등식이며, 우변은 총 투자비용 Ψ 을 투자하는 대신 금융시장을 통해 안전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한다. 반면 좌변은 Ψ 의 금액을 경제 B에 진출하는 데 사용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총비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첫째 항은 협력이 p 의 확률로 성공하였을 경우 투자금액 Ψ 에 거래비용 $(1+i)$ 을 곱한 값이며, 적절한 협력 프로젝트를 탐색한 후 선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래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둘째 항은 협력이 $(1-p)$ 의 확률로 실패하였을 경우 지출하는 감시비용의 총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식은 어떠한 균형에서든 자산 Ψ 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우변)과 이의 비용(경제 B에 진출하면서 실제 지출하는 비용, 좌변)이 정확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위의 균형 조건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거래 시 기대이윤이 항상 0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재정거래(arbitrage)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금융 시장 청산조건(financial market clearing conditi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노동, 자본 그리고 상품시장에서의 균형 조건을 도출하기로 한다. 우선 노동시장 청산조건(labor market clearing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L = \int_{z_L}^{z_H} l^d(z) dF(z) \quad \text{[식 2-10]}$$

여기서 좌변 L 은 경제 A와 B에 존재하는 노동력의 총량으로 경제 A와 B의

총노동공급을 나타내며, 우변은 경제 A의 기업가가 생산을 위해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 수요를 합한 총노동수요를 의미한다. 한편 자본시장 청산조건(capital market clearing condition)은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bar{K} + B^f = \underbrace{\int_{z_L}^{z_H} k^d(z) dF(z)}_{= \bar{K}^d} + \Psi(z^*; \mu, \sigma) \quad [\text{식 2-11}]$$

위 식의 좌변은 경제 A와 B의 총자본공급을, 우변은 총자본수요를 의미한다. 좌변의 \bar{K} 는 경제 A와 B에 주어진 자본 총량이며, B^f 는 해외로부터의 순자본유입(net capital flow)을 나타낸다. 우변의 첫째 항은 경제 A의 기업가가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 수요를 모두 합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 청산조건(goods market clearing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C^e + C^w = Y + (1 - \delta)K^d - (1 + r - \delta)B^f \quad [\text{식 2-12}]$$

[식 2-12]의 좌변은 기업가들의 소비 총액 C^e 와 노동자들의 소비 총액 C^w 을 모두 합한 경제 A와 B의 총지출을 나타낸다. 반면 우변은 경제의 총생산 Y 에 상품 생산을 위해 쓰이고 감가상각 후 남은 자본 $(1 - \delta)K^d$ 을 더한 후, 외국으로부터 차입(대부)한 자본 B^f 에 대한 원리금 합계 $(1 + r - \delta)B^f$ 를 상환(수금)한 금액을 뺀 값이다. 즉 우변은 경제 A와 B의 총가처분소득(aggregate disposable income)을 나타낸다. 정리하면, 위 식은 경제 A와 B의 소비 총액과 가처분소득 총액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때 총생산 Y 는 다음과 같다:

$$Y = \int_{z_L}^{z_H} y(z) dF(z) \quad [\text{식 2-13}]$$

즉 총생산 Y 는 경제 A의 모든 기업가가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개별생산량 $y(z)$ 를 모두 더한 값이다. 한편 기업가들의 소비 총액 C^e 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e = \int_z^{z_H} p\pi_1 dF(z) + \int_{z_L}^{z^*} \pi_0 dF(z) - \left[p(1+i)\Psi(z^*; \sigma, \mu) + (1-p)\mu \int_{z^*}^{z_H} \rho(z) dF(z) \right] \quad [\text{식 2-14}]$$

$$= Y - wL - rK^d - \left[p(1+i)\Psi(z^*; \sigma, \mu) + (1-p)\mu \int_{z^*}^{z_H} \rho(z) dF(z) \right]$$

[식 2-14]의 우변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한 값은 경제 A의 기업가들이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이윤 총액을 의미하며, 이러한 총이윤은 총생산 Y 에서 생산 요소에 투입된 생산비용 $wL + rK^d$ 를 뺀 $Y - wL - rK^d$ 와 같다. 반면 우변의 마지막 셋째 항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경제 B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지출하는 투자 총액을 나타낸다. 즉 경제 A의 기업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치분 소득의 총액은 그들이 생산을 통해 거둬들인 총이윤에서 경제 B와 협력하기 위해 쓴 투자비용 총액을 뺀 값과 같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소비 총액 C^w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w = wL + (1 + r - \delta)\bar{K} \quad [\text{식 2-15}]$$

즉 노동소득 총액 wL 에 감가상각 후 남은 자본소득 총액 $(1 + r - \delta)\bar{K}$ 를 더한 노동자들의 가치분 소득 총액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경제 A와 B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의 균형 조건을 살펴보았다. 일반 균형의 왈라스 법칙(Walras' Law)에 따라 금융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청산 조건 [식 2-9], [식 2-10], [식 2-11]이 만족되면, 마지막 상품시장 청산 조건 [식 2-12] 역시 자동으로 충족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 일반 균형 분석

여기에서는 $1 + \tau$ 로 표현된 거래비용이 감시의 효율성을 대변하는 감시비용 μ 와 탐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탐색비용 σ 라는 제도적 특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바로 위에서 정리한 모든 시장 청산 조건 [식 2-9]~[식 2-12]를 만족하는 동시에, [식 2-4]와 [식 2-6]으로 요약된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 문제 및 거래비용 결정 문제를 푸는 일반 균형 해(general equilibrium solution)를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다음의 정리 1을 통해 일반 균형에서 감시비용 및 탐색비용이 거래비용 $1 + \tau$ 와 대외경제협력력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Lambda(z^*)$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했다.²⁸⁾

정리 1: 이자율 $r \in R_+$ 과 감시비용 및 탐색비용을 나타내는 제도 변수 $(\mu, \sigma) \in R_{++}^2$ 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 (i) 기업가의 이윤 π 를 극대화하고 모든 시장을 청산하는 일반 균형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때 (ii) μ 또는 σ 가 상승할수록 거래비용 $1 + \tau$ 가 상승한다. (iii) 균형역량 z^* 역시 μ 또는 σ 가 높을수록 상승하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실질 투자 총액 $\Lambda(z^*)$ 은 감소한다. 또한 (iv) μ 또는 σ 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μ 또는 σ 가 상승하면 총생산 Y 와 기업의 이윤 π_1 및 π_0 은 낮아진다.

정리 1에 따르면 감시비용 μ 와 정보 탐색비용 σ 는 대외경제협력뿐 아니라 생산성 및 총생산과 같은 경제 전체의 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외경제협력과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감시비용과 탐색비용이 상승할수록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실질 투자 총액 $\Lambda(z^*)$ 가 상승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감시비용 μ 가 상승하면 [식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비용 $1 + \tau$ 역시 상승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감시비용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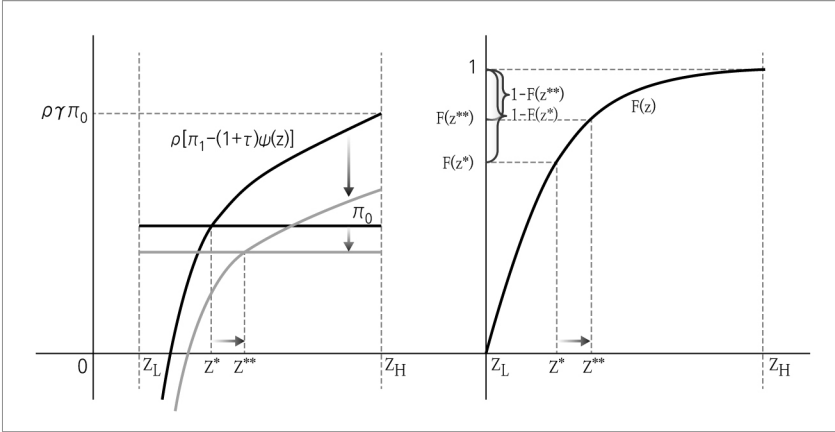
28) 정리 1과 아래 나올 정리 2는 균형역량 z^* 의 유일성(uniquness)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p\gamma > 1$ 과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 문제, [식 2-4]의 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p\pi_1 > (1 - p)\mu$ 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 후 도출한 것이다.

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거래를 계약대로 진행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승한 거래비용은 경제 A의 기업가들이 경제 B의 경제주체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므로 경제 B에 진출하는 기업가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 투자 총액 $\Lambda(z^*)$ 역시 감소한다. 탐색비용 σ 의 상승도 정성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 σ 가 상승하면 식 [식 2-2]의 투자비용 $\psi(z)$ 가 상승한다. 이렇게 투자비용이 상승하면 [식 2-7]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 역량이 더욱 우수한 기업가들만이 상승한 투자비용을 감내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실질 투자 총액 $\Lambda(z^*)$ 가 감소하는 것이다.

감시비용과 탐색비용은 대외경제협력 수준 $\Lambda(z^*)$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 향상은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 B의 경제주체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므로, 감시비용 또는 탐색비용이 상승해 실질 대외경제협력 수준 $\Lambda(z^*)$ 이 작아진다는 것은 곧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기업가 역시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즉 감시비용이나 탐색비용의 상승은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의 총생산 Y 및 기업가들이 거둬들이는 이윤 π_1, π_0 역시 하락하는 것이다(정리 1. (iii) 참고). 이렇게 기업가의 이윤 π_1, π_0 이 줄어들면 [식 2-6]의 (IC)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래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더 큰 거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 2-7]에서와 같이, 기업가의 이윤 π_1, π_0 이 줄어들면 거래비용 $1 + \tau$ 는 상승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2]는 감시비용 μ 또는 탐색비용 σ 가 상승했을 때 대외경제협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 2-2]는 감시비용 또는 탐색비용이 상승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질이 악화된 경우, 대외경제협력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그림 2-2. 거버넌스의 질과 대외경제협력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의 왼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의 질이 나빠지면 기업가의 이윤 π_1 , π_0 은 줄어들고 $(1+\tau)\psi(z)$ 는 상승한다. 따라서 $p[\pi_1 - (1+\tau)\psi(z)]$ 와 π_0 모두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p[\pi_1 - (1+\tau)\psi(z)]$ 가 π_0 보다 더욱 급격하게 하락해 결과적으로 균형역량 z^* 는 z^{**} 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경제 A의 기업가 수는 [그림 2-2]의 오른쪽과 같이 $1 - F(z^*)$ 에서 $1 - F(z^{**})$ 로 감소하고, [식 2-5]에서 정의된 실질 대외경제협력 투자액 $\Lambda(z^*)$ 역시 $\Lambda(z^{**})$ 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제재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 (aggregate uncertainty)이 확대되었을 때, 거버넌스의 질에 따라 실질 대외경제협력 투자액 $\Lambda(z^*)$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도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에 확률적 충격 s 가 외생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를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A의 총요소생산성 \tilde{A} 는 원래 주어진 고정된 생산성 A 에 외생적 충격 s 가 확률적으로 더해져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ilde{A} = T(A, s) \quad \text{[식 2-16]}$$

여기서 외생적 충격 s 는 확률분포 $G(s)$ 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확률변수 s 의 분포 $G(s)$ 가 평균보유확산(mean-preserving spread)되었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tilde{A} 의 평균 $E[\tilde{A}]$ 는 그대로인 채 분산 $var(\tilde{A})$ 가 상승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경제 A에 불확실성이 도입되면 보조 정리 2의 [식 2-7]을 통해 구했던 최적 거래비용 $1 + \tau$ 와 최적 감시확률 $\rho(z)$ 는 확률충격 s 의 상태 조건부(state-contingent) 함수가 된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총요소생산성 \tilde{A} 가 더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므로 기업가의 기대이윤 π_0, π_1 이 s 에 의한 확률변수로 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 + \tau$ 와 $\rho(z)$ 는 불확실성하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1 + \tau(s) = \frac{1+r-\delta}{p} \frac{p\pi_1(s)}{p\pi_1(s) - (1-p)\mu} = \frac{1+r-\delta}{p} \Delta(s; \mu), \quad [\text{식 2-17}]$$

$$\rho(z, s) = \frac{(1+r-\delta)\psi(z)}{p\pi_1(s) - (1-p)\mu}.$$

여기서 $\Delta(s; \mu)$ 는 최적 거래비용 $1 + \tau(s)$ 에서 상수항인 $(1+r-\delta)/p$ 를 제외한 확률 부분으로서 거버넌스의 질과 관련된 감시비용 μ 의 함수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이 매우 우수하여 감시비용 μ 가 0에 충분히 가깝다면, $\Delta(s; \mu)$ 가 1로 퇴화(degenerate)해 최적 거래비용 $1 + \tau(s)$ 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므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가의 이윤 π_0, π_1 이 확률변수가 되므로 [식 2-4]에서 보인 기업가의 최대 기대이윤 π 는 다음을 따르게 된다:

$$\pi(z) = \max\{p[E[\pi_1(s)] - E[1 + \tau(s)]\psi(z)], E[\pi_0(s)]\} \quad [\text{식 2-18}]$$

마지막으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식 2-18]을 [식 2-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gamma - 1)E[\pi_0(s)] = (1 + r - \delta)\psi(z)E[\Delta(s)] \quad [\text{식 2-19}]$$

그러면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을 때 거버넌스의 질에 따라 실질 대외경제협력 투자액 $\Lambda(z^*)$ 이 어떻게 영향 받는지 다음의 정리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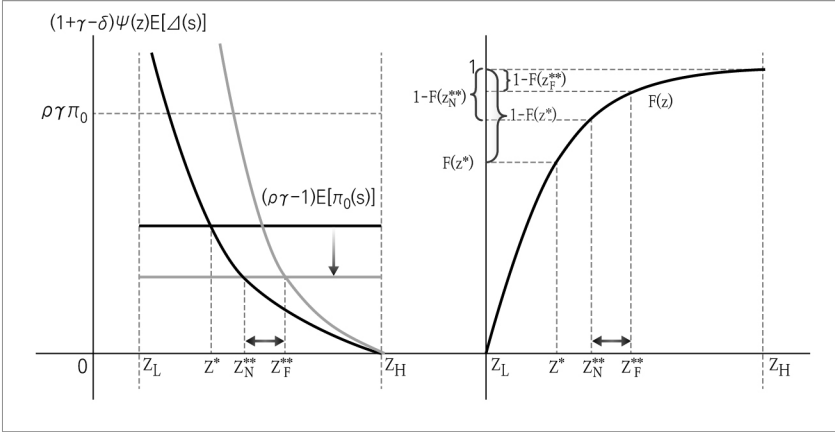
정리 2: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때, 감시비용 μ 가 높을수록 실질 대외경제협력 투자액 $\Lambda(z^*)$ 는 더욱 크게 감소한다.

정리 2는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감시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대외경제협력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감시비용을 매우 낮출 수 있는 양질의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도 대외경제협력액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낮은 감시비용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거버넌스는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동안정화장치(auto-stabilizer)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3]은 정리 2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원래 균형이 z^* 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기업가의 기대이윤 $E[\pi_0(s)]$, $E[\pi_1(s)]$ 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3]의 왼쪽에서처럼 [식 2-19]의 좌변인 $(p\gamma - 1)E[\pi_0(s)]$ 가 작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E[\pi_1(s)]$ 이 하락함에 따라²⁹⁾ $E[\Delta(s)]$ 은 높아지므로 [식 2-19]의 우변 $(1 + r - \delta)\psi(z)E[\Delta(s)]$ 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3]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1 + r - \delta)\psi(z)E[\Delta(s)]$ 이 상승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29)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기대이윤 $E[\pi_0(s)]$, $E[\pi_1(s)]$ 이 하락하는 이유는 π_0 , π_1 이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하기 때문이다. 이윤의 수확체감은 0보다 큰 초과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ν 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한 것에서 비롯한다.

그림 2-3.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을 때 거버넌스의 질과 대외경제협력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인한 새로운 균형은 z_F^{**} 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질이 매우 훌륭해 감시비용 μ 가 충분히 0에 가깝다면, $E[\Delta(s)]$ 는 상수 1과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rho\gamma-1)E[\pi_0(s)]$ 의 값이 작아져서 그래프가 아래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1+r-\delta)\psi(z)E[\Delta(s)]$ 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은 z_F^{**} 보다 더욱 작은 z_N^{**} 에서 결정된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감시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양질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운용하는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대외경제협력 투자자의 감소분을 $F(z_F^{**}) - F(z_N^{**}) > 0$ 만큼 보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Delta(z_F^{**}) - \Delta(z_N^{**})$ 에 해당하는 실질 대외경제협력 투자액의 감소분을 양질의 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다. 즉 감시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급변하는 시점에서도 안정적인 대외경제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3. 요약 및 함의

본 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정의하고, 대외경제협력에서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대외경제협력이 거래의 한 양태라는 점에 착안해,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거래비용의 원천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역선택 현상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해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정보경제학의 발견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거래비용의 원천으로서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다.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서는 거래 전과 거래 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추적해야 한다. 우선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적절한 협력 상대와 사업을 찾는 데 소요되는 정보수집 비용을 탐색비용(search cost)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거래가 이루어진 후 원활한 거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추적 비용을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이론 모형에 따르면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이 클수록 거래비용이 상승하여 대외경제협력이 위축된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춰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조건은 거래에 있어 민간 경제주체의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양질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거래비용을 낮춰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한다. 이것이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가 대외경제협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이다. 직접효과 외에도 감시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경제 불확실성이 급변할 때 대외경제협력 수준의 변동을 완화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대외협력 안정화 효과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갖는 간접효과가 된다.

본 장에서 고려한 이론모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을 제약하는 거래비용의 두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 중에서 거래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탐색비용이 아닌 감시비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식 2-7 참고). 탐색비용은 대외협력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가의 선택 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기업가의 이윤을 경로로 거래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시비용은 거래비용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탐색비용이 낮아도 감시비용이 높으면 거래비용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 이는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 매칭 활성화 등 탐색비용을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경제주체의 감시비용을 낮게 만들어 원활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이행기술(artificial commitment technology)’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탐색비용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법, 규정, 정책, 행정 시스템 등의 공식적 제도를 통해 거래를 둘러싼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힘든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러시아 특유의 비즈니스 관행상 공식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원활한 대외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언어, 문화, 관습, 상호 신뢰 등의 비공식적 제도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한다. 독일, 중국, 베트남과 같이 러시아와 특수한 전략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간 민·관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 계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서 감시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어떤 계약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계약거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 기업의 감시비용 역시 낮아지게 된다. 한번 구축한 상호 신뢰는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호 신뢰라는 자산이 구축되고 나면, 이제는 탐색비용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상호 신뢰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탐색비용은 오히려 감시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다른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일반이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질(quality)은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공식 법령, 정책, 규정, 행정 시스템 그리고 비공식 관습, 규범, 언어, 상호 신뢰 등의 제도적 특질뿐 아니라 시스템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민간과 정부의 결사체 및 이들 네트워크의 구조, 운영, 역할 등에 의해 매우 다채로운 방식으로 결정된다. 본 장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에 있어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식별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현실에서 충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양질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보유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모범적인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보유한 국가의 대외경제협력 조직, 정부간 대외경제협력 조직, 민간(또는 민관) 대외경제협력 조직, 현지 거점 및 금융지원체계 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내에서 이러한 구성단위들의 운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과 방향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2기(2004~08년)인 2000년대 중반에 대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혁신 기반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대외경제협력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틀 마련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교역의 양적·질적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의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04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관계 정부부처, 연구·분석 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대외경제 전략(Foreign economic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20(2008년 10월 승인), 이하 대외경제 전략 2020)’을 마련했다.³⁰⁾ 이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에너지 및 식품시장의 수요·공급 구조 변화, 글로벌 금융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혁신기술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 확대 등을 대외 경제환경의 핵심 변수로 인식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석유가스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을 탈피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하고자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는 현존하는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이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30)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

근본적인 과제, 즉 러시아 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혁신 성장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대외경제 관계의 특정 지역 편중 탈피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 기관의 역할 강화 △대외 리스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 환경 구축 등을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의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³¹⁾

-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와 연계한 기업인 협의체 개설
- 정부간 위원회에서 러시아의 협의 역량 강화
- 기업의 국제협력,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자문, 관세정책 조정 등 법·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러시아 기업-해외 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시장의 정치·경제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
- 관계 정부부처간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축
- 관계 정부부처 담당자의 언어 교육, (재)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민-관 협력 기반 국제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러시아 브랜드 홍보 및 러시아 기업과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 주요 협력국 대상 양자간 무역·경제 협력의 목표, 방향, 과제 등 1~3개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주재국과 세부 추진 사항 협의

3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참고로 대외경제 전략 2020은 2008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았다(2019년 11월 기준).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채택한 국가프로그램 ‘대외경제활동 발전’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2014년 4월 개정)에도 대외경제 전략 2020에서 제시한 대외경제협력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³²⁾ 즉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서 혁신 기반 경제 현대화라는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해 대외경제활동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³³⁾

‘대외경제활동 발전’에서 러시아 정부는 대외경제활동을 “무역, 생산, 투자, 통화·금융,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을 포괄하는 대외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주요 과제로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시장정보 및 상품인증 등 지원)을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대외경제활동 효율화(프로그램 중심 접근 모색) 및 역량 제고 △정부간 협의체, 지역통합 협의체, 국제기구, 포럼 등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이익 증진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협력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표 3-1]은 상술한 대외경제 전략 2020을 비롯한 대외경제활동 발전 프로그램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가 위 전략과 프로그램을 본격 채택한 시점은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유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경제제재 국면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였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대내

3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33) 대외경제 전략 2020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부가 주무부처인 이 프로그램은 △양자 및 다자, 지역 차원의 대외경제협력 증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기반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 △대외경제활동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 개선 △대외경제활동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1월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현대화 및 다각화 실현,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표 3-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

필요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제의 질적 고도화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 △러시아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협력 실효성 및 효율화 제고	
방향	△ 러시아 수출·제조기업의 국제협력 강화 지원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및 역할 강화 △ 대외 리스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환경 구축	
과제	정책 측면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간 경제협력 전략 마련 * 해외 러시아 무역대표부 등이 주재국과 세부 추진 사항 협의
	대내적 지원 시스템 측면	-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 외국 기업과 산업·기술협력 촉진, 정보 제공, 자문, 관세정책 등 조정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상호간 효율적인 소통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축 및 언어교육, 훈련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역량 강화
	대외협력 채널 측면	- (정부간 협의체) 무역·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협의 역량 강화 및 우호적인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인 협의체) 정부간 채널 연계 기업인 협의체 개설 - (국제 포럼) 민·관 협력 기반 국제적 규모의 경제포럼 등 개최를 통해 대외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업의 국제협력 촉진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외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외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

대외경제 전략 2020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대외경제관계가 전통적인 협력 지역인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즉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러시아 수출기업과 투자자들이 전통시장뿐 아니라 신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 한국, 아세안(ASEAN) 국가들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의 무역·경제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³⁴⁾

이 전략에서 러시아 정부는 본고에서 살펴볼 한국을 비롯한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방향을 [표 3-2]와 같이 제시했다.³⁵⁾ 급속히 부상하는 아태지역의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역 구조를 다각화할 필

표 3-2. 러시아의 주요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대외경제 전략 2020)

국가	주요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협력 확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 최신 설비와 기술 도입, 잠재력 활용 - 한국시장은 러시아산 천연자원과 반가공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수출시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야 고위급 양자교류를 기반으로 러·독 무역 및 경제관계를 심화 - 기술 분야에서 독일의 대러 투자와 독일산 기술 설비의 대러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 강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접경지역 및 지방간 교류협력 강화, 비즈니스협업체간 교류 확대 등에 대응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 러·중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통합을 지향 - 러시아산 엔지니어링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에너지, 교통, 광업, 민간 항공기, 조선 분야) - 접경지역 인프라 및 교통망 개발, 농산물/천연자원 생산 인프라 및 목재/식품품 심층가공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협력 확대 -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 심화 - 지하경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급, 에너지 절약, 엔지니어링, 바이오나노 등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로건설자재, 물류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일본의 대러 투자 확대 - 일본 시장은 석유가스,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뿐 아니라 러시아산 첨단기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접근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함께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러시아의 대베트남 투자를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및 현대화, 베트남의 광물자원 개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1-4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4) 러시아 정부는 이 전략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 아세안(ASEAN) 국가를 비롯해 아태지역의 기타 국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 10.

35) 유럽 국가 가운데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과의 양자협력 전망 또는 방향을 언급했고, 아태지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주요 협력국으로 제시했다.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8), pp. 25-30.

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한 투자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2018년의 주요 활동 성과 및 2019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와 이 국가들과의 대외경제협력 추진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표 3-3 참고). 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 중국 및 일본의 협력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³⁶⁾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모멘텀은 다소 약해졌다가 최근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표 3-3. 러시아의 지역 및 국별 대외경제협력 추진 성과(2018년)와 과제(2019년)

	추진 과제
유럽연합 (EU)	- (성과) △ EU의 상당수 회원국(전체의 3/4)들과 무역·경제 협력을 위한 대화 재개 △ 2018년에 14개 정부간 위원회 및 다수의 연례 다자회의(정부간 위원회 및 EU 회원국 공동 주제) 개최 △ 유럽 비즈니스 협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외 - (추진 과제) 무역·경제 협력 회복세 실현
중국	- (성과) △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 메커니즘 구축 △ 상호간 유제품 공급 확대 및 러시아산 밀의 수출역량 확대, 러시아 내 대두 생산량 확대(중국 산업용)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 마련 △ 러시아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러·중 투자협력 정부간 위원회 차원에서 총 1,100억 달러에 달하는 70개 투자프로젝트 실행 외 - (추진 과제) △ 2024년까지 양자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체계적 수단 마련·실행 △ 러·중 투자협력 위원회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일본	- (성과) △ 8개 항 협력 구상을 포함해 러·일 관계기관간 100개 이상의 협력 문서 서명 △ 가즈프롬이 일본 시장에서 유로본드 발행 △ 북극 틱시(Tiksi) 지역에 러·일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일본 투자자의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참여 △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러·일 컨테이너 시범 운송사업 추진 외 - (추진 과제) △ 8개 항 협력 구상 차원의 러·일 공동 프로젝트 수행
아태지역	- (성과) △ 인도, 한국, 몽골 등과 전략적 협력 문서 체결 △ 러시아 기업의 베트남, 중국 대상 투자 프로젝트 지원 - (추진 과제) △ (한국) ‘9-Bridge’ 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로드맵 개발: 산업단지, 항만 인프라, 가스, 전력, 조선, 철도, 북극항로, 농업, 어업, 환경 보호 등 분야 대상 △ (아세안) 무역·경제협력 강화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19), pp. 88-96.

3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19), pp. 90-93.

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주지하듯이 2014년 이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러 및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요인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관계는 전략적 전환을 맞이한 바 있다.³⁷⁾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관계도 2014년을 전후로 새로운 전환을 보였는데, 특히 2016년 러·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8개항 경제협력 구상에 바탕을 둔 협력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³⁸⁾

러시아와 유럽 간 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소원해진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별로 협력의 양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럽 내 자국의 최대 협력국인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협력 논의를 해왔다(표 3-8 참고).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의 실질적인 대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함의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러시아의 대외경제활동을 총괄하는 주체는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이고, 실행업 무는 러시아 연방 정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이 담당한다.³⁹⁾

37) 박정호 외(2018), p. 93.

38) 위의 책, pp. 109~111.

39) 러시아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2003년 12월 채택된 대외무역활동의 국가 규제에 관한 연방법에 기초 하고 있다.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8 декабря 2003 г. N 164-ФЗ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200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참고로 러시아의 대외경제활동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과 정부령이 연방법과 더불어 그 효력이 가장 크다. Bychkova Daria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업무 담당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1. 6, 서울).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와 관계 지원 기관, 주요 협의 채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인데, 사실상 이 두 조직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대외경제 전략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2008년 무렵부터이다. 2012년 설립된 극동개발부(2019년 2월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도 러시아 대외경제협력의 지평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요 정부부처 중 하나다.

러시아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의 모멘텀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협력 대상국과의 양자간 위원회와 연계 협의 채널 등을 통한 정부 주도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협의 채널들은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국제 포럼과 박람회 등을 주요 협력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른바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비롯해 최근 러시아 기업의 글로벌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는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 열린 혁신포럼(Open Innovations), 그리고 극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 등이 그 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등 대내외 거점 구축과 러시아직접투자기금, 극동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펀드 조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대외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림 3-1]은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주요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만 제2

그림 3-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러시아는 국가주의 정서가 강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협력 채널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는 대외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제도적 시스템에 정부의 개입과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주요 조직과 운영

1) 주요 정부부처

가) 경제개발부

경제개발부(막심 오레시킨 장관)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활동을 총괄 수행하는 부처이다. 대외경제 전략 2020과 대외경제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책임부처로서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3-4]와 같이 △양자협력 발전과 △대외경제활동 분석지원과 △대외경제활동 발전 및 규제과 △투자정책 및 기업발전과 등이 주요 담당부서이다.

경제개발부는 협력대상국들과 무역,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위원회와

지방협력 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동시에 관련 협력 플랫폼을 추진한다(표 3-4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독 경제·금융 분야 전략협력 실무회의, 러·중 통상경제협력 소위원회(러·중 총리급 정례회의 산하), 러·중 투자협력 정부간 위원회, 러·일 통상경제 분야 정부간 위원회, 러·일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 등을 관장한다.

참고로 한국과의 주요 협의체인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경우 양국 부총리(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 수석대표이며, 이 공동위 산하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가 주무부처(한국은 외교부)이다. 다만 2018년 개설된 한·러 협의회(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한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차원의 '9-Bridge 협력' 구상 이행 점검은 별도로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⁴⁰⁾

경제개발부는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민간투자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 투자 정책도 총괄한다. 경제개발부 장관이 러시아 정부 내 투자정책 자문기구이자 고위급 채널인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의 부위원장직(위원장은 메드베데프 총리)을 맡고 있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비롯해 미국, 유럽의 대기업이 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BASF, 바이엘, 도이체방크, 헨켈, 메트로, 지멘스, 유니페르)과 일본(미쓰비시, 미쓰이, 다케다제약)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2018년 기준).⁴¹⁾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이 위원회의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인 '금융제도와 자본시장'을 조직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한국기업은 2015년까지 이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는데, 2016년 3월 제1차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한국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러시

40) Bychkova Daria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업무 담당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1. 6, 서울).

41) 참고로 일본의 미쓰비시, 미쓰이는 이 위원회에 참여한 역사가 오래되었다. FIA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7).

표 3-4. 경제개발부의 대외경제협력 관련 주요 부서의 활동 내용

부서	주요 활동 내용
양자협력 발전과	아시아권, 미주권, 아프리카, 중동, 유럽, 호주 등과의 경제협력 정책 개발 러시아와 협력대상국 간 무역,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위원회 조직(관계부처 합동) 및 관련 협력 플랫폼 마련 * (2019. 6) 러 경제개발부 차관·독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 '러·독 경제·금융 분야 전략협력 실무회의' 주재 * (2019. 5) 러 경제개발부 장관-중 과학기술부장관, '러·중 과학기술혁신핀드 조성' MOU 체결 * (2018. 12) 러 경제개발부 장관-일 외무장관, '14차 러·일 통상경제 분야 정부간 위원회' 주재 * (2018. 9) 러 경제개발부 차관-중 상업부 차관, '21차 러·중 통상경제협력 소위원회' 주재 * (2019. 6) 러 경제개발부-중 상업부, '6차 러·중 엑스포' 주최(2014년 1차 개최). * (2017. 12) 러 경제개발부, 러·베트남 엑스포 주최. 경제개발부 차관이 "EAEU 회원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주제 발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러시아수출센터, 러시아 무역대표부 등 참여. 베트남 측은 상공회소 회장, 산업통상부 차관 참여
대외경제활동 분석지원과	대외경제활동 관련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한 분석 지원 협력국 및 글로벌 경제 동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요인 분석 ※ 2019. 9월 신설
대외경제활동 발전 및 규제과	대외경제활동 지원 방안 마련 및 지방간 및 접경지역 협력 추진 ※ 2018. 2월 정부령에 따라 경제개발부가 접경지역 협력을 관할 * (2019. 5) 러 경제개발부-일 경제산업성, '1차 러·일 주지사(지방행정수장) 위원회' 개최. 러 경제개발부 차관, "지방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주제 발제 * (2017. 7) 러 경제개발부 차관-일 외무부 차관, 러·일 통상경제 분야 정부간 위원회 산하 '6차 지방 협력 하부위원회' 주재
투자정책 및 기업발전과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민간투자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 투자정책 총괄 * (2019. 3) 러 경제개발부 장관,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FIAC)'의 집행위 주재 ※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는 1994년 설립된 러시아의 투자정책 자문기구로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위원장, 경제개발부 장관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음. 18개국 53개의 기업(대러 투자액이 1,300억 달러를 초과한 기업 대상)이 자문단에 포함: 독일 6개(BASF, 바이엘, 도이체방크, E.ON, 메트로, 지멘스), 일본 3개(미쓰비시, 미쓰이, 다케다제약) 포함 투자협력 정부간 위원회 조직 ※ 러-중 투자협력 정부간 위원회(2014. 9월 1차 개최, 부총리급): 비에너지 분야 협력, 투자장벽 해소 방안 등 논의

주: * 각 부서별 최근 주요국(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과의 대외경제활동 주요 내용 정리.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3) 발췌 정리.

아 경제개발부 차관이 수석대표)에서 한국정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요청한 이후, 2016~17년(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참여), 2018년(삼성전자) 회원 명단에 포함되었다.⁴²⁾

또한 경제개발부는 대외경제 정보 포털(portal of Foreign Economic Information)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국제협력 촉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⁴³⁾

나) 산업통상부

경제개발부가 거시경제 및 포괄적 경제관계 측면에서 대외 경제활동을 총괄 수행한다면, 산업통상부(데니스 만투로프 장관)는 주로 교역, 산업협력 측면에서 대외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표 3-5 참고). △대외교역 규제 및 수출 지원과 △지역 산업 정책과 △유럽, 북미, CIS, 다자경제협력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과 △전략적 개발 및 프로젝트 운영과를 비롯해 △산업 분야별(자동차, 농식품, 디지털 기술, 경공업, 전자, 화학, 항공, 의료제약, 조선 등) 담당과가 조직되어 있다.⁴⁴⁾

산업통상부는 현재 국가 프로젝트 ‘국제 협력과 수출(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port)’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10월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까지 수행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엔지니어링 상품 및 농산품을 비롯한 비에너지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주요 대외협력 채널인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를 주관함으로써 러시아 기업 및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

다) 극동·북극개발부

극동·북극개발부(알렉산더 코즐로프 장관)는 2012년 극동개발부로 설립된 후 2019년 2월 극동·북극개발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로 선도개발구역과

42) 「정부, 러시아 정부정책 결정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2016. 3.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3); FIA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7).

43)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3).

44) Минпромторг(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표 3-5. 산업통상부의 최근 주요 대외경제협력 현황

국가	주요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6) 러 산업통상부-한국무역협회 국장급 업무협약: 한국이 2018년도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의 파트너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실무 논의 - (2017. 7) 러 산업통상부 차관-주러 한국 대사 회의: 항공,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 논의. 한국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제도를 제안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10) 러·독 상공회의소, 최근 기술 규제 분야 동향 관련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제표준(러시아 GOST,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인증제도 및 기타 인증(ISO/IEC) 조율 가능성 논의, 기술 및 디지털 산업 전망 논의 - (2018. 6) 러 산업통상부 관계자, 독일 BPW사의 러시아 내 플랜트(trailed equipment 생산) 준공식에 참석: 독일 BPW의 현지 자회사인 BPV-Ost LLC가 러시아 시장 내 수요를 고려해 생산설비 구축,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부품(도로 건설, 트레일러 등 포함) 생산 현지화 정책에 대응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9) 러·중 정부간 위원회 산하 기계 산업 실무그룹 회의, 농업, 도로 건설 분야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양자 협력 강화 논의 * 양국은 국제 농기계 박람회 'Agrosalon-2018(러 모스크바 개최/2년마다 개최되는 러시아의 주요 산업 플랫폼)'과 'CIAME'(중국 우한시 개최/중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농기계 박람회) 초청장을 교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2) 러 산업통상부 차관 외 사절단 일본 방문: 제3차 산업협력 하위 위원회 계기, 첨단 혁신분야(헬리콥터 제조, 무인 항공기, 로봇틱스 항공기 등) 협력 논의, 8개 항 협력 구상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 논의 - (2018. 5)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차원 '러·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8개 항 협력 구상 기반 투자협력 확대 논의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 러 산업통상부 장관-베트남 산업부 장관 회담 계기로 '베트남 영토 내 자동차 생산 지원을 위한 정부간 의정서' 서명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베트남 FTA 차원에서 체결된 최초의 러-베 양자 협력 프로젝트.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산 자동차(부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 개척. 베트남 입장에서 새로운 생산 기술 도입 및 산업생산 시스템 구축 의미 - (2017. 10) 러 산업통상부 장관, 베트남 경제 사절단과 면담: 베트남 내 온석면(chrysotile)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러측 시멘트 기업의 자문

주: 러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내 제시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발췌.

자료: Минпромторг(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바탕으로 저자 발췌 정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투자 플랫폼 조성과 이에 기반한 투자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극동·북극개발부는 극동에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자에 아태지역의 다른 특별 경제구역과 견줄 만한 세제혜택 제공 및 초저금리(연 1%) 대출 지원
- 극동 내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금융센터 구축
- 극동 투자자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 보장(입주계약 시점부터 10년간 동일한 세제혜택 보장)
-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경쟁력 있는 메커니즘 구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특별투자법원 개설
- 극동 투자자에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
- 극동에 글로벌 첨단기술기업 지부 설립: 첨단 상품 생산·테스트를 위한 특별 레짐 구축, 해당 지부 직원 대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신생 벤처 투자자 대상으로 토지 사용료, 임대료 등 면제
- 극동의 투자 매력도에 대한 글로벌 인식 제고: 'Making Investments in Russian Far East'를 브랜드로 홍보
- 극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신뢰도 제고: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의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구축
- 주요 투자국의 극동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베이징(개설 완료), 상하이, 하얼빈, 뭘바이, 서울, 도쿄, 유럽 국가들에 극동투자 유치·수출 지원청의 대표사무소 개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 추진도 극동·북극개발부의 주요 활동 분야 중 하나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이 참여하는 본회의(plenary session) △주요국과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business dialogue) 등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9월 개최된 제5차 동

45)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2018), pp. 1-6.

방경제포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일본 정상이 참여했으며, 러·한, 러·유럽, 러·중, 러·일, 러·인도, 러·아세안(ASEAN)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과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에 러·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개최된 바 있다.

2) 지원 기관

가) 무역대표부

무역대표부(trade mission)는 해외 공관에서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관련 모든 이슈에 대응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 수출업체들의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사절단 방문 등을 조직하기도 한다. 또한 현지 시장 정보와 경제 상황을 분석 및 모니터링 하고, 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⁴⁶⁾

현재 57개국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영업대표(sales representative)도 함께 파견되는데,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는 1인의 무역대표 외에 각각 1인, 3인의 영업대표가 파견되어 있다(한국, 독일, 일본 소재 러시아 공관에는 1인 무역대표 파견).⁴⁷⁾

나) 러시아수출센터

러시아수출센터(REC: Russian Export Center)는 비석유가스 부문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개발공사 VEB-RF(전 대외경제은행(VEB))의 산하 기관이다.⁴⁸⁾ 참고로 개발공사 VEB-RF는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자 기관으로 이고리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회

46)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47)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각국별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48) 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ортный цент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장을, 메드베데프 총리와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감독이사를 맡고 있다.

러시아수출센터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수단 마련을 통해 러시아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출신용보험청(EXIAR), 러시아수출입은행(ROSEXIMBANK)과 제휴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지향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자원과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림 3-2]는 러시아수출센터의 운영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것이다. 즉 러시아 수출센터는 정부부처 및 다양한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수출센터의 설립은 2015년 6월 채택된 ‘개발은행법’(Federal Law On the Development Bank)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해 비에너지 상품의 수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특히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영향으로 수입 대체산업 육성이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메이드 인 러시아(Made in Russia)’

그림 3-2. 러시아수출센터의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방향



자료: 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ортный цент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3).

제품의 글로벌 홍보 마케팅과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해외공관 소재 무역대표부의 효율성 부족과 비에너지 상품 교역 활성화에 특화된 보다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 대두 등이 러시아수출센터 설립의 주요 배경으로 파악된다.⁴⁹⁾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수출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비롯한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실제로 2014년 전후까지도 러시아는 무역대표부 외에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경제제재로 수출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자연히 확대된 것이다.

2019년 9월 현재 러시아 전역에 33개의 러시아수출센터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극동 2개(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시베리아 5개(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옴스크), 우랄 2개(튜멘, 예카테린부르크), 불가 9개(우파, 페름, 이젠프스크, 카잔, 사마라, 체복사리, 올라놉스크, 니즈니노브고로드, 사라스크), 중앙 5개(랴잔, 칼루가, 벨고로드, 스몰렌스크, 아틀), 남부 4개(크라스노다르, 로스토프온돈, 심페로폴, 볼쥬스키), 북캅카스 2개(스타브로폴, 체르케스크), 북서 4개(볼로그다, 벨리키 노브고로드,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이다.

또한 해외 지부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이란, 인도, 중국, 베트남에 설립되어 있다.

49) 특히 국가프로그램 '대외경제활동 발전'의 하부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활동 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시스템 창출'에서 해외 무역대표부의 효율성 강화와 러시아수출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50) 최민희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차장 면담 내용(2019. 10. 23, 모스크바).

다)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극동개발 관련 기관이다. 국내외 투자자 유치 활동, 역내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극동의 대아태지역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⁵¹⁾

앞서 극동·북극개발부의 주요 활동 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에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의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베이징에는 개설이 되었으며, 한국에는 공식적인 차원은 아니나 1인의 대표가 파견되어 있다.

라) 러시아 상공회의소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무역장벽 해소와 투자사업 지원 활동을 통해 러시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기관이다. 독일, 중국, 일본에 대표사무소 설립 및 명예대표 파견 등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러·한, 러·일, 러·중, 러·베트남 비즈니스 협의회(business council)를 운영하고 있다.⁵²⁾ 참고로 중국 베이징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동아시아 지역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하이에 중국 대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러·독 상공회의소(Russian-German Chamber of Commerce) 사무소가 독일(함부르크),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51) 최근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의 대외경제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9. 5)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한국 부산항만공사, 상호협력 MOU 체결/ (2019. 5)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독일 기업 'Lernidee Erlebnisreisen GmbH'의 TSR을 활용한 관광객 운송 사업 추진 지원/ (2019. 4)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중국 하얼빈 및 베이징에서 중국 투자 사절단 면담/ (2019. 4)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신화 통신사와 극동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활동 전개/ (2019. 4)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한국 부산대학교 병원 등 한국 비즈니스 사절단과 미팅.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3).

52)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 일본 외에 인도, 몽골, 말레이시아에 개설되어 있다.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에 설립되어 있다. 이는 2006년 4월 8차 러·독 고위급 회의에서 양국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3) 금융 플랫폼

가) 러시아직접투자기금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은 2011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총리의 주도 아래 설립된 국부펀드이다.⁵³⁾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러시아 내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금의 운영 방식은 △투자계획 및 경제성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평가·승인 △투자위원회의 투자 결정 △집행위원회의 투자사업 인력 조직 및 운영 등 3단계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다. 러·중 투자펀드(중국 측 중국투자공사(CIC)), 러·중 벤처펀드(중국 측 Tus-Holding), 러·일 투자펀드(일본 측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러·한 투자펀드(한국 측 한국투자공사(KIC)), 러·중 실크로드 펀드(중국 측 실크로드 펀드), 러·베트남 투자 플랫폼(베트남 측 국가자본투자공사(SCIC)) 등을 조성해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력 제고와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나) 극동개발기금

극동개발기금(FEDF: Far East Development Fund)은 개발공사 VEB.RF (전 VEB)가 100% 출자해 설립·운영하며, 상업은행과 제휴해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산업생산 설비 구축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⁵⁴⁾

2017년에 한국 수출입은행과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설했으며, 2018년에는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합

53)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54)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게 일본 극동 프로젝트 추진 플랫폼(JPPV: Japanese Project Promotion Vehicle in the Far East)을 구축했다.

4) 주요 협의 채널

가) 정부간 협의체

러시아 정부는 협력 대상국과의 무역·경제협력에 대한 정부간 위원회와 그 산하 또는 연계 위원회, 실무회의 등 양자 협의체가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⁵⁵⁾ 특히 러시아 정부는 이들 협의체를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양자간 투자협력 강화, 무역 관련 애로사항 개선, 혁신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표 3-6]에서 보듯이 러시아 정부는 이 협의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러시아와 협력대상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러시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표 3-6. 러시아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 목적과 기대효과

구분	내용
협의체 운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정부와 기업 간 효율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 * 협의체에서 러시아와 협력대상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기대효과 (기업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협의체 참여 기업들은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권위 있는 플랫폼을 통해 협력 이슈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 해외 프로젝트 계약(MOU 포함), 새로운 파트너 확보, 협력문서 초안 등에 기업의 건의사항 반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부가 협의체 구성 및 기능 결정 * 협의체의 러시아 측 대표는 정부부처 수장 또는 차관, 그 산하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 * 협의체의 수석대표는 경제개발부의 제안과 외무부 협의에 따라 정부령으로 승인

자료: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55)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표 3-7. 러시아의 정부간 협업체 운영 현황

국가	내용
한국	<p>□ <u>러·한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u> (2019. 9 모스크바 18차 개최) * 수석대표: (러)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p> <p>※ (소위원회)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원자력에너지 공동위원회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협력 위원회 △통상 위원회 △환경협력 위원회 △산업협력 위원회 △중소기업 협력 위원회 △정보통신기술 협력 위원회 등</p> <p>※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p> <p>※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러 극동·북극개발부 차관, 한 외교부 차관)</p>
독일	<p>□ <u>러·독 경제·금융 분야 전략협력 실무그룹</u> (2019. 6 모스크바 개최/ 2019. 12 베를린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차관, (독)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p> <p>- <u>‘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분과</u> (2019. 3 소치 개최/ 2019년 하반기 독일 개최 예정) * (러) 중앙은행 국제협력국장, (독) 중앙은행 국장</p> <p>- <u>‘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과</u> (2017. 11 베를린 개최/ 2019년 하반기 개최 예정) * (러) 경제개발부 경쟁·에너지효율·생태국장, (독) 국제에너지정책국장</p> <p>- <u>‘현대화 및 산업잠재력’ 분과</u> (2016. 11 모스크바 개최/ 2019년 하반기 개최 예정) * (러) 산업통상부 유럽·북미·CIS 및 다자경제협력국장, (독) 중앙은행 국장</p> <p>- <u>‘이중교육(dual education)’ 분과</u> (2018. 6 함부르크 개최/ 2019년 하반기 개최 예정) * (러) -, (독) 러·독 상공회의소 회장</p>
중국	<p>□ <u>러·중 총리간 정례회담 준비 위원회</u> (2019. 9 상트페테르부르크 23차 회의 개최) * 수석대표: (러) 부총리, (중) 부총리</p> <p>※ (소위원회) △무역·경제협력 위원회 △과학기술협력 위원회 △교통협력 위원회 △원자력에너지협력 위원회 △정보통신기술협력 위원회 △우주협력 위원회 △금융협력 위원회 △환경협력 위원회 △산업협력 위원회 △세관협력 위원회 △농업협력 위원회 △투자협력 위원회 △에너지협력 위원회 △교육협력 위원회 등</p> <p>※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개발협력 위원회</p> <p>※ 러·중 유라시아 통합과정 지원에 대한 관계기관간 워킹그룹</p>

표 3-7. 계속

국가	내용
일본	<p><input type="checkbox"/> 러·일 정부간 무역·경제 위원회 (2018. 12 도쿄 14차 회의 개최/ 2019년 모스크바에서 15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장관, (일) 외무장관</p> <p><input type="checkbox"/> 우선프로젝트 추진(8개 항 협력구상 현실화)을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 (2018. 2 도쿄 개최/ 2019년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장관, (일) 경제산업성 장관</p> <p><input type="checkbox"/> 러·일 무역·투자 소위원회 (2018. 10 보로네즈 개최)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차관, (일) 외무성 차관</p> <p><input type="checkbox"/> 러·일 산업협력 소위원회 * 수석대표: (러) 산업통상부 차관, (일) 경제산업성 차관</p> <p><input type="checkbox"/> 러·일 지역간 협력 위원회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차관, (일) 외무성 차관</p>
베트남	<p><input type="checkbox"/> 러·베트남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정부간 위원회 (2018. 10 모스크바 21차 회의 개최/ 2019년 베트남에서 22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부총리, (베) 부총리</p> <p>- 무역·투자 소위원회 (2016. 9 상트페테르부르크 개최/ 2019년 10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경제개발부 차관, (베) 산업통상부 차관</p> <p>- 산업협력 소위원회 (2017. 9 하노이 개최/ 2019년 12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산업통상부 차관, (베) 산업통상부 차관</p>
베트남	<p>- 에너지 협력 소위원회 (2017. 9 하노이 개최/ 2019년 12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 (베) 경제산업성 차관</p> <p><input type="checkbox"/> 은행간 실무그룹 (2018. 8 상트페테르부르크 개최/ 2019년 17차 개최 예정) * 수석대표: (러) 중앙은행 부총재, (베) 중앙은행 부총재</p> <p><input type="checkbox"/> 우선투자프로젝트 고위급 실무그룹 * 수석대표: (러) 산업통상부 장관, (베) 산업통상부 장관</p>

주: '러 대외경제정보 포털' 기준으로 주요 내용 정리. 상세 내역 누락 건, 업데이트 지연 건은 제외.
 자료: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협력 대상국의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진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간 소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3-7]과 같이 러시아 정부는 주요국과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나, 양자간 협력 필요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 협의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국영 및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3-7]은 경제개발부가 운영하는 대외경제 정보 포털(portal of Foreign Economic Information)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개발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매년 각국과의 정부간 협의체 추진 실적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러시아 정부가 정부 주도의 민-관 협의 채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국과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제포럼 및 박람회

러시아 정부는 [표 3-8]에서 보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소치투자포럼,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 열린 혁신포럼(Open Innovations) 등을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경제협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과 국제산업박람회, 열린 혁신포럼을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점도 매우 특징적이다.

표 3-8.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추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부터 연례 개최. 2006년부터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지원 아래 개최(대통령이 매년 참석/ 부총리가 조직위원장) - 대내외 경제 이슈, 신흥시장을 비롯한 세계 경제 주체들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능 (2019. 6. 6-8 23차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시진핑),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슬로바키아 정상, UN 사무총장 참석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핀란드, 러·발틱국가, 러·이탈리아, 러·프랑스, EAEU·중남미, 러·중, 러·스위스, 러·독일, 러·스웨덴, 러·인도, 러·미국, 러·아프리카, 러·아제르바이잔, 러·일, EAEU·ASEAN, 러·유럽) ※ 제2차 러·중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18. 6. 24-26 22차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마크롱 대통령), 일본(아베 신조 총리), 중국(왕치산 부주석), IMF(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참석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아프리카, 러·일, 러·프랑스, 러·그리스, 러·인도, 러·미국, 러·스웨덴, 러·이탈리아, 러·이스라엘, 러·독일, 러·핀란드) (2017. 6. 1-3 21차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모디 총리), 오스트리아, 몰도바 정상 참석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EAEU·인도, 러·세르비아, 러·프랑스, 러·아프리카, EAEU·중남미, 러·미국, 러·스위스, 러·일, 러·이탈리아, 러·미국, 러·스웨덴)
동방경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개최된 극동 개발을 위한 전략 대화 채널이자 국제협력 플랫폼(대통령이 매년 참석) * (2019. 9 제5차 포럼)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정상 참석/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한, 러·중, 러·일, 러·인도, 러·아세안, 러·유럽) * (2018. 9 제4차 포럼) 한국(총리), 중국, 일본, 몽골 정상 참석/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한, 러·중, 러·일, 러·아세안, 러·유럽) * (2017. 9 제3차 포럼) 한국, 일본, 몽골 정상 참석/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한, 러·중, 러·일, 러·인도, 러·아세안) * (2016. 9 제2차 포럼) 한국, 일본 정상 참석/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한, 러·독, 러·중, 러·일, 러·아세안)
소치투자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크라스노다르 지방정부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메드베데프 총리가 참석하는 전통적인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러시아 부총리가 조직위원장) * 메드베데프 총리는 동 포럼이 러시아의 경제사회 발전 이슈를 논하는 동시에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
국제산업박람회 (INNOP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매년 개최.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러시아의 주요 산업·무역·수출 플랫폼임. 참가자의 80% 이상이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분야 기업 바이어임. ※ 2018년에 한국이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참여(무역협회, KOTRA,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가 운영업체) * 2017년은 일본, 2015년 중국이 파트너국으로 참여

표 3-8.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열린혁신포럼 (Open Innovations)	- 2012년부터 모스크바에서 매년 개최. 경제개발부, 모스크바 주정부, 스킴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RVC) 등이 공동 주관. 혁신 생태계 발전 논의를 위한 독창적인 플랫폼으로 기능 ※ 2020년에 한국이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참여 예정 * 2014년 중국이 파트너국으로 참여

자료: ПИЭФ: Российск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рум; ИННОПРОМ: Открытые инновации,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3)를 발췌 및 정리.

3. 요약 및 함의

본 장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배경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과 실천과제, 그 구조와 주요 특징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2008년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2013년에 대외경제 활동 발전 국가프로그램(2014년 개정)을 채택했는데, 이 시기는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러시아 내부적으로 경제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한 때였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의 제도적 질을 높이고자 했다.

[표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정책 △대내적 지원 시스템 △대외협력 채널 측면에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는 곧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제 2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 본 장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주요 정부부처 △지원 기관 △금융 플랫폼 △협업의 채널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

듯이, 러시아 정부가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수출센터 설립을 모색한 것도 2014년 이후다. 동시에 협력국에 자국의 투자 환경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다.

이렇듯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아직 제도화와 전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경제주체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행정적 특성과 사업 환경, 제도적 미비 측면으로 인해 여전히 진입장벽 즉, 탐색비용이 높은 시장이다.⁵⁶⁾ 특히 ‘러시아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과 몰이해,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⁵⁷⁾

이에 한국 입장에서 대러 경제협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교류를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확대·심화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포럼과 산업박람회 등을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활용한 보다 전략적인 대러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물적·인적 자원의 대내외 생산과 분배, 소비, 투자 등의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글로벌 경제공간에서는 정보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분업구조와 경제주체간 상호보완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별 국가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6) 러시아는 부처 간 비효율적인 경쟁 구도, 수직적 관료행정체계, 제도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최준식 러연방 칼루가주 경제고문 면담 내용(2019. 10. 21, 모스크바); 최민희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차장 면담 내용(2019. 10. 23, 모스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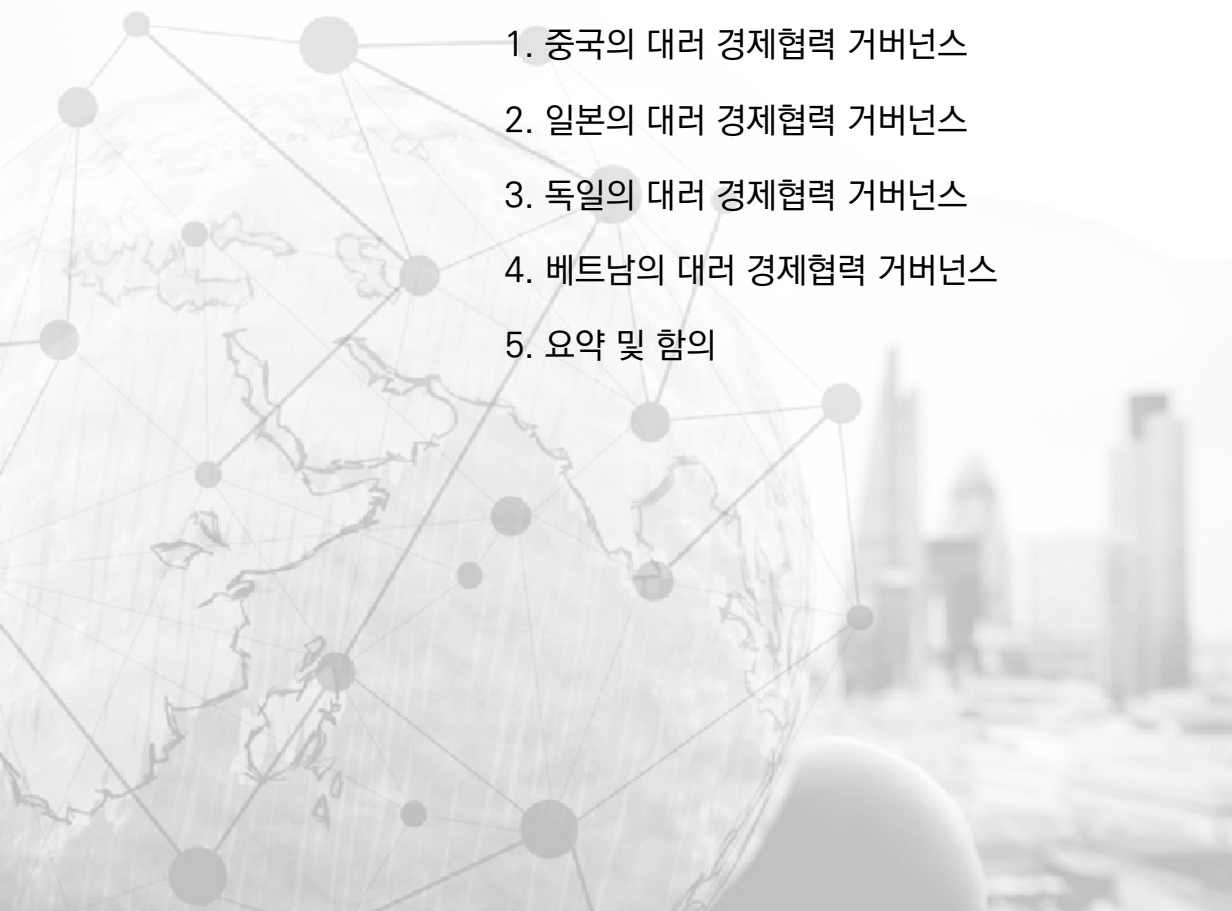
57) 이재영 외(2015), pp. 115~116.

최근 러시아가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대외경제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러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가.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탈냉전시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공조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수급, 경제성장, 체제 유지를 위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높여왔으며,⁵⁸⁾ 푸틴 3기(2012~18년) 정부와 시진핑 체제 등장(2013년) 이후 ‘신밀월’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양자적 수준에서 다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패권체제에 대한 견제와 중앙아시아·

글상자 4-1. 러·중 교역 및 투자 현황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경제협력도 심화되어 2000년 62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은 2013년 888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양국간 무역은 2015년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른 대중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전자제품·기계·하이테크 제품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극동을 중심으로 러시아 농산물 및 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⁵⁹⁾ 양국간 교역액은 2018년 1,082억 달러를 기록했고,⁶⁰⁾ 2019년 9월 양국 총리 회담에서 2024년까지 무역액 2,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⁶¹⁾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2018년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6.8%로 러시아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이었으나, 2018년에는 12.4%로 증가하면서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3년 16.9%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18년에는 21.7%까지 확대되었다.

양국의 투자협력은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러 제재 이후 13억 5,000만 달러까지 감소했던 중국의 러시아 직접투자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추진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해 2019년 2분기 기준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간접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8%에서 2015년 0.39%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0.6%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2분기 기준 중국의 비중은 0.65%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주로 채굴업과 농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는 채굴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⁶²⁾

58) 윤익중(2015), p. 237.

59)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 내용, 「러시아·중국 경제관계 평가 및 전망」, KIEP 전문가를 세미나(2017. 6. 9,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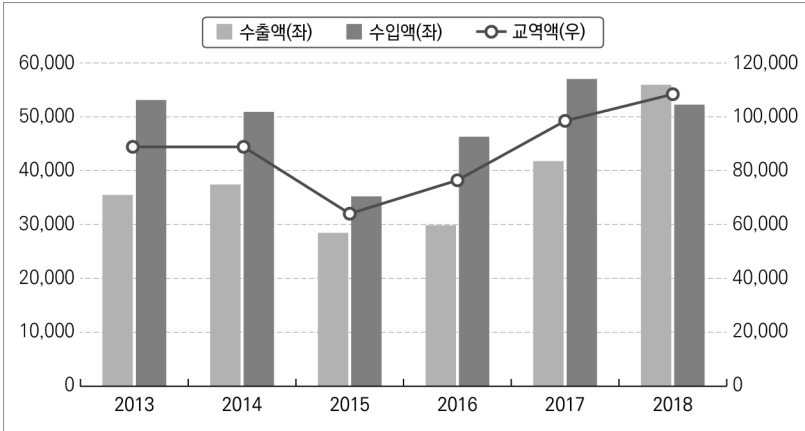
60)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9. 9. 19).

61) “China, Russia set to double trade to US\$200 billion by 2024 with help of soybeans,” South China Morning Post(2019.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6).

62) CEIC Database, China: Outward Investment Russia, Industry(검색일: 2019. 11. 8).

그림 4-1.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2013~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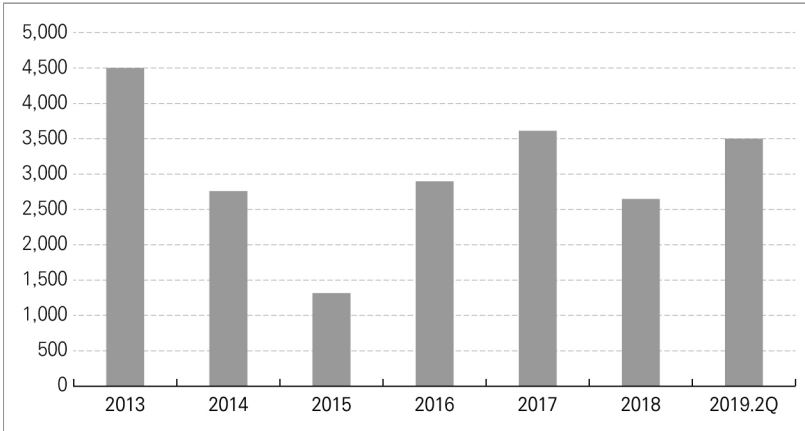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 DB 자료(검색일: 2019. 11. 21).

그림 4-2. 중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단위: 백만 달러)



주: 누적액 기준.

자료: Банк России(검색일: 2020. 2. 6).

동북아시아 등 주변 지역의 안정화가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동인이라면,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은 양자 차원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⁶³⁾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중·러 관계는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일대일로 전략, 2014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강화되었다.⁶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육상 및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며,⁶⁵⁾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개발과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⁶⁶⁾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된 대러 경제제재와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의 봉쇄와 경제적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그 외에 중국은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동북 3성(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들간의 개발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나.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 구조

양국 지도자의 협력 의지를 반영하듯, 중·러 관계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 및 고위급간의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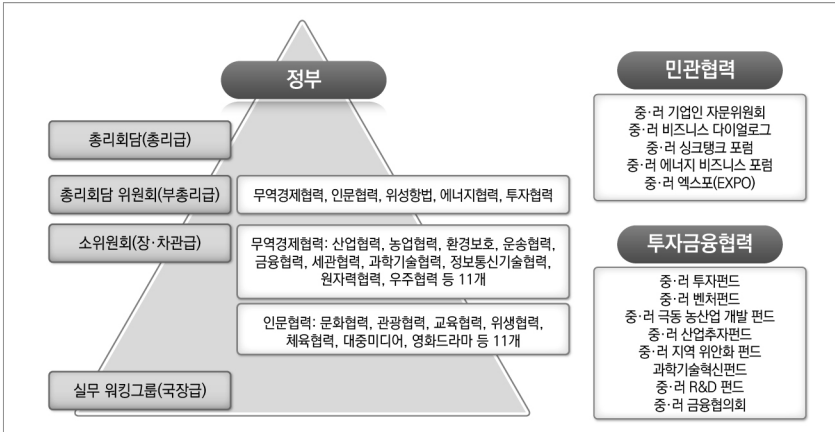
63) 서동주(2009), p. 14.

64) 박정호 외(2018), p. 93.

65) 이승신 외(2017), p. 34.

66) 박정호 외(2018), p. 96.

그림 4-3.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료: 저자 작성.

출범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까지도 서로를 ‘최고의 친구’⁶⁷⁾로 부르며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고 있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양국 정상회담만 약 30여 차례 개최되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가 전체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최고위급 정부간 협의체는 총리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총리회담을 준비하고 장기적·전략적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중·러 총리회담 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for Regular Meetings Between the Chinese and Russian Heads of Governmen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부총리급으로 무역경제협력, 인문협력, 위성항법, 에너지협력, 투자협력의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장·차관급의 소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무역경제협력 위원회와 인문협력 위원회 산하에 각 11개씩 총 22개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위성항법,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위원회는 그 자

67) “Xi Jinping: Russia and China staying in tune with the times”(2019.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8. 19).

표 4-1. 중·러 총리회담 위원회 및 주요 소위원회

중·러 총리회담 위원회		
협약체	위원장	최근 회의 개최 내용
무역경제 협력	중·러 부총리급	- 22차 회의(2019. 7월): 양자무역 및 투자 확대, 경제 및 무역 시스템 수립 촉진, 대두 및 농작물 교역 확대, 다자무역 체계 보호,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반대, e-커머스 및 서비스무역 촉진, 교역 2,000억 달러 달성 관련 논의
인문협력	중·러 부총리	- 19차 회의(2018. 10월): 교육·문화·보건·스포츠·영화·미디어·관광 등 분야 협력 촉진
에너지협력	중·러 부총리	- 16차 회의(2019. 9월): 에너지 협력 심화를 위한 과학·기술·표준·정보교환 확대, 정부·기업·학계의 공동 노력 요청
위성항법 분야 전략적 협력	중·러 부총리급	- 6차 회의(2019. 8월): BeiDoudhk GLONASS 항법 시스템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계약 체결 합의 *4개 실무그룹 운영: GLONASS 및 BeiDou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보장, 러시아와 중국 내 측정 스테이션, GNSS 성능 모니터링 및 평가, 내비게이션 기술 응용
투자협력	중·러 부총리	- 5차 회의(2018. 9월): 극동 및 북극탐사 투자 확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중·러 총리회담 소위원회		
협약체	위원장	최근 회의 개최 내용
산업협력	러 산업무역부 장관, 중 공업신식화부 부장	- 3차 회의(2018. 9월): 중화물수송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상 조속 추진, 기체확장형 항공기 CR929 및 엔진 개발 관련 논의 등
농업협력	러 농업부 차관, 중 농업농촌부 차관	- 5차 회의(2018. 8월): 농업 부문 투자 및 무역, 동식물 검역, 가축병 치료, 농업 부문 과학기술, 농업 인프라 등 논의
운송협력	러 교통부 차관, 중 교통운송부	- 23차 회의(2019. 7월): 항공 운송 확대, 항공 부문 이산화탄소 감축, 중국 동북부·내몽골·극동 지역 직항 자유화 등 논의 * 민간항공 워킹그룹, 철도수송 워킹그룹 운영
금융협력	러 연방중앙은행 부총재, 중 인민은행 부총재보	- 19차 회의(2018. 9월): 자국 통화를 이용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
과학기술협력	러 과학고등교육부 차관, 중 과학기술부 차관	- 23차 회의(2019. 6월): 2020~21년 '과학기술 혁신의 해' 개최 준비, 2019 과학기술 혁신의 날 개최(부대행사), 메가 사이언스 부문 협력 촉진, 중·러 중장기 과학기술혁신 협력 로드맵 수립, 젊은 과학자 교류 촉진, 공동연구실 및 R&D 센터 구축 장려 등 논의 * 첨단기술과 혁신 워킹그룹 운영

표 4-1. 계속

중·러 총리회담 소위원회		
협업체	위원장	최근 회의 개최 내용
우주협력	러 Roscosmos 대표, 중 국가항천국 대표	- 20차 회의(2019. 7월): 우주개발 협력 프로그램 2018-2022 진전 상황 점검, 신규 협력분야 발굴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	러 통신 및 대중매체부 차관, 중 산업정보부 장관	- 14차 회의(2015. 9월): 통신·IT·네트워크 보안·우편· 무선주파수 부문 협력, 로밍 서비스 가격 인하, 모바일 운영 시스템 상호 구축, 최첨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교류, 광케 이블 구축, 시베리아 내 데이터 처리센터 설립 등
교육협력	러 과학고등교육부 차관, 중 교육부 차관	- 19차 회의(2019. 7월): 인적교류 확대, 고등교육기관간 협 력, 상호 언어 학습 촉진 등

자료: "The 21st Meeting of China-Russi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ub-Committee Held in Moscow"(2018. 9. 22); "China, Russia hold meeting on humanities cooperation"(2018. 10. 31); "19th Meeting of Sino-Russian Education Cooperation Subcommittee held in Moscow"(2019. 7. 16); "Sino-Russian energy cooperation set to expand after meeting in Moscow"(2018. 9. 19); "The 6th Meeting of the China-Russia Satellite Navigation Key Strategic Cooperation Project Committee Convened in Kazan, Russia"(2019. 8. 31); "China, Russia Agree to Speed Up Talks on Joint Helicopter Project - Minister"(2018. 9. 21); "The 5th Meeting of China-Russia Subcommitte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Held in Dalian"(2018. 8. 31); "China and Russia Signs an MOU on Air Transport"(2019. 7. 30); "S&T Subcommittee of China-Russia Regular Prime Ministers' Meeting Holds 23rd Session in Harbin"(2019. 7. 19); "The 23rd Session of Chinese-Russian Nuclear Subcommittee took place"(2019. 7. 19); "Russia and China discussed cooperation in Space"(2019. 4. 2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8. 16).

체가 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산하에는 협력 분야별로 다수의 실무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⁶⁸⁾

총리회담을 비롯한 각 정부간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수립, 협력 안건 마련 및 추진, 협력 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민관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다수의 협업체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와 엑스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양국간 투자 및 비즈니스 협의회채널로 '중·러 기업인 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동방경제포럼 및 상트페테르부르

68) "China and Russia: partnership of strategic coordin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3); Liu Huaqin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유라시아연구소장 면담 내용(2019. 10. 28. 베이징); Zhang Tingting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박사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8. 베이징).

크 국제경제포럼에서는 ‘중·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개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싱크탱크 포럼’과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이 새롭게 발족했으며, 국가급 경제무역박람회인 ‘중·러 엑스포’ 등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일대일로와 EAEU 연계,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부 지역 연계 개발, 첨단 산업 육성 등 신규 협력분야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협력을 통해 대러 경제제재 및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중·러 투자펀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국제송금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대체하는 송금·결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금융기관간 협의체인 ‘금융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 운영 현황 및 역할

양국 정상은 2013년 이래 현재까지 30여 회(연 평균 4.5회)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가장 최근의 정상간 만남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순방 때였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는데 양국 지도부는 러·중 관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⁶⁹⁾ 또한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과 안보 확립을 위해 러·중 양국이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시대 전략적 안정성 강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⁷⁰⁾

총리회담은 정부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고위급 협의채널로 매년 중국과 러시아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산하에 5개의 부총리급 위원회, 22개의 장·차관급 소위원회와 다수의 실무 워킹그룹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69) President of Russia(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6).

70) 「푸틴 만난 시진핑 “中-러시아 관계, 어떤 변화에도 영향 받지 않을 것”」(2019. 6.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8. 16).

워킹그룹, 소위원회, 위원회 각 단계별로 러시아 파트너 기관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공동으로 점검하면서 협력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총리회담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총리회담은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실무 워킹그룹은 협력 수요 및 필요에 따라 점차 확충되어왔다. 2014년 이후 4개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투자, 농업, 위성항법, 산업협력)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양국 정부의 최근 관심 분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다양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중·러 정부간 회의인 투자협력 위원회는 산하에 ‘중·러 기업인 자문위원회(Russian-Chinese Business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해 양자간 투자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양국의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중국투자공사(CIC)가 주관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60여 개가 넘는 기업의 관계자도 참여한다. 2015년 3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까지 총 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8년 연례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46억 달러 규모의 7개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되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73개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⁷¹⁾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정부간 회의 개최 시 민간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 안건을 사전에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의견을 취합하거나, 상회 대표, 기업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⁷²⁾

양국은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럼과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러시아 정부가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는 분과행사로 ‘중·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무

71) “Leading Russian and Chinese companies to increase mutual investments”(2018. 9.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1).

72) Liu Huaqin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유라시아연구소장 면담 내용 (2019. 10. 28. 베이징).

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러 싱크탱크 포럼’과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이 새롭게 창설되었다. 싱크탱크 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러시아국제문제협의회(RIA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며, 제1차 회의에는 싱크탱크, 미디어, 산업 및 문화계의 대표자와 정부부서 및 외교 기관 담당자 등 350명 이상이 참여해 안보·에너지·인프라 협력 방안, 지역 협력, 세계경제 속에서 양자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⁷³⁾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은 로즈네프트 석유 회사(Rosneft Oil Company)와 중국국가석유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개최하는 행사로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대화, 효율성 향상, 공동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강화,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회의는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다.⁷⁴⁾

중국 상무부와 헤이룽장성 정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공업무역부는 공동으로 ‘중·러 엑스포(Expo)’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6회차를 맞이한 중·러 엑스포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74개 국가에서 1,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홍보하고 교류했으며, 양국 경제 및 무역협력을 위한 중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⁷⁵⁾

중·러는 일대일로와 EAEU 구상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협력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및 산업간 상호보완성, 시장연계 잠재력, 기술 및 인적교류 등을 고려한 투자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⁷⁶⁾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4년 총리회의 준비위원회 산하에 투자협력 위원

73) “First China-Russia Think Tank Forum kicks off in Beijing”(2018. 5.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3).

74) “Second Russian-Chinese Energy Business Forum to Be Held in June during SPIEF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3).

75) “Sixth China-Russia Expo opens in Harbin”(2019.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3).

표 4-2. 중·러 간 주요 투자펀드

투자펀드	주요내용	구분(특징)
중·러 투자펀드 (RCIF,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직접투자자기금(RDIF)과 중국투자공사(CIC) 공동설립 - 두 기관 각 10억 달러 출자, 국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최대 20억 달러 추가 확보 예정 - 양자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펀드의 70% 이상은 러시아와 CIS 지역 투자, 30%는 중국기업 투자 	
RDIF·RCIF·헤이룽장성 투자펀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IF, RCIF, 헤이룽장성 간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펀드 -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해 농업, 토지관리, 통관, 식품 물류 및 판매 부문 협력 강화 	농업 지방정부 참여
중·러 극동 농산업 개발 펀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와 중국 아시아태평양식품펀드(Asia-Pacific Food Fund)가 공동 설립 - 초기 자본금 130억 루블(13억 루블 극동개발펀드, 117억 루블 아시아태평양식품펀드) - 러시아 극동지역 농산물 재배, 가축 사육 및 해양 양식, 가공 분야 지원, 수출산업으로 육성 * 극동개발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농업 부문 협력 사업 이행에 활용 	지역개발(극동) 농업
중·러 벤처펀드 (RCVF,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IF와 중국 투스홀딩스(TUS Holdings)가 최초자본금 1억 달러 규모로 설립 - 러시아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기술기업 지원 목표, 주요 지원 분야는 정보기술,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바이오의학, 청정에너지, 신소재, 스마트기술 등 	첨단기술 스타트업
중·러 나노기술 펀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러스나노(Rusnano)와 중국 중용국제신탁(Zhongrong International Trust)이 5억 달러 규모로 조성 - 나노기술 투자 목적 	첨단기술
R&D 펀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국영개발은행(VEB), 중국 하얼빈 은행이 7억 달러 규모로 조성 - 산업 R&D 촉진, 하이테크 수출 지원, 양자무역 및 경제 협력 촉진 목표, 관심 분야는 산업기술, 소프트웨어, 인터넷,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러 산업투자펀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IF와 중국 청통홀딩스(Chengtong Holdings Group)가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 - 산업,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발 투자 	
중·러 기술펀드 (RCTF,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자산관리기업 리더(Leader)와 중국 선전캐피탈그룹(Shenzhen Capital Group)이 1억 달러 규모로 설립 - 신에너지, IT(AI,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 통신 분야 투자 계획 	첨단기술 지방정부 참여

76) 박정호 외(2018), pp. 99~100.

표 4-2. 계속

투자펀드	주요내용	구분(특징)
중·러 지역 위안화 펀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IF, 중국 수이양캐피탈(Suiyong Capital), 다정투자그룹(Dazheng Investment Group)이 공동 설립 - 초기 자금 10억 위안, 추후 60억~70억 위안으로 확대 계획 - 지역협력(중양연방관구,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부) 중요 투자 프로젝트 수행, 협력 우선 분야는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산업제조, 보건, 러시아 기술발전 전략 지원 	지역개발 위안화펀드 중국 지방정부 참여
과학기술혁신펀드 (2019, 조성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IF와 CIC가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 - 신기술 개발 지원,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술 솔루션 및 혁신 달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중·러 R&D 펀드 (2019, 조성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IF와 CIC가 10달러 이상 규모로 공동설립 계획 - 중·러의 AI, 우주과학기술, 혁신소재 프로젝트에 투자 	첨단기술

자료: Russia-China Investment Fund(RCIF); "RDIF AND RCIF LAUNCH \$2BLN AGRICULTURAL INVESTMENT FUND"(2015. 5. 8); "Russia-China agricultural Fund is going to invest up to 10 bln USD into agricultural projects under the guidance of FEDF"(2015. 12. 17); "RCIF and Tus-Holdings expand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the technology & innovation sector"(2018. 9); "Agreement on Establishing Joint Russian-Chinese Investment Fund Signed"(2016. 1. 19); "VEB and Harbin Bank to create innovation support funds with target volume of up to USD 700 million"(2017. 6. 20);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2018. 6. 8); "Russia's Leader and China's Shenzhen Capital launch \$100 million tech fund"(2018. 7. 11); "RCIF, Suiyong Capital and Dazheng Investment Group launch the China-Russia Regional RMB Fund"(2019. 4. 26); "Russia, China, Set Up US\$1 Billion Technology Innovation Fund"(2019. 7. 4); "Russian sovereign fund agrees \$3 billion high-tech investment partnerships with Middle East, Chinese players"(2019. 6. 11),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3).

회를 출범시키고 투자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협력펀드는 ‘중·러 투자펀드(RCIF: Russia-China Investment Fund)’로 2012년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중국투자공사(CIC)가 각각 10억 달러를 출자하여 설립했다. 이 투자펀드는 아무르강 철교 건설 사업,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NIO), 우리늄 채굴 프로젝트, 러시아 투시노(Tushino) 프로젝트 과학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RCIF는 중국 투스홀딩스(Tus Holdings)와 ‘중·러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중국 수이양캐피탈(Suiyong Capital) 및 다정투자그룹(Dazheng Investment Group)과는 ‘중·러 지역 위안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의 투자협력 관련 논의는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부 지역 개발,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중소기업 협력 지원, 인프라 지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가 130억 루블 규모로 조성되었고, 2019년 설립된 ‘지역 위안화펀드’도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및 극동·중국 동북부 지역의 중요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벤처펀드, 나노기술 펀드, R&D 펀드, 기술펀드 등이 정보통신·빅데이터·AI·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중국투자공사(CIC)가 과학기술 펀드와 R&D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 펀드는 신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R&D 펀드는 AI, 우주과학기술, 혁신소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달러화 송금 및 결제, 국제송금망인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이용 등에 대한 위험이 상승하면서 러시아와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통화 스와프를 적극 활용하고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SWIFT를 대체하는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⁷⁷⁾

이와 같은 금융협력은 양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리 회담 산하에 중앙은행간 협의체로 ‘금융협력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2016년 6월 중국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재중국 사무소 설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설립한 최초의 사무소라는 의미가 있다.⁷⁸⁾

77) 중국은 자국의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러시아가 개발한 국제결제시스템(SPF)과 연동할 계획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내에서도 회원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中·러·인도, 서방국 중심 ‘SWIFT’ 대항마 키운다」(2019.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78) Zhang Tingting 중국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 박사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8, 베이징).

또한 양국의 금융기관도 상대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은행과 러시아 스베르뱅크(Sberbank)는 2015년부터 ‘중·러 금융협의회(Sino-Russia Financial Council)’를 설립하여 양국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경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주요 러시아 은행에 100억 위안 규모의 신용 한도액을 제공하고, 은행간 자금조달, 현지화 결제 및 정산, 외환결제, 외화지폐 매매, 전자상거래 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은행간 원활한 금융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금융협의회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 신용, 펀드, 보험, 자산관리, 대출, 신용평가사 등 68개의 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다.⁷⁹⁾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가.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일본과 러시아는 경제 규모, 지리적 인접성,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교역, 투자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해결되지 않은 영토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양국은 북방 4개섬(남쿠릴열도 4개 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 후 2개 섬을 양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원칙적으로 4개 섬

79) 2018년 7월 기준 중국 32개, 러시아 36개 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설립 당시에는 중국 18개, 러시아 17개로 총 35개의 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만 3년 만에 대략 2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Harbin Bank At Forefront Of Sino-Russian Financial Cooperation”(2018. 7. 5), 온라인 자료: “Sberbank signs agreement creating a platform to address current issues of Russian-Chinese financial relations at EXPO-2015 in Harbin”(2015. 10.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전체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토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견지해왔다.⁸⁰⁾

2012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및 아베 정권 재집권과 함께 영토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되었다. 평화조약 체결 후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를 이루었다. 2013년에는 일본 아베 총리가 10년 만에 러시아를 순방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⁸⁵⁾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구의 대러 경제제재에 일본이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한 번 정체를 맞이했다. 일본정부는 2014년 말까지 단계별로 강화된 5차례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주요 인사에 대한 사증 발급 중단,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지도자 및 기업의

글상자 4-2. 러·일 교역 및 투자 현황

러시아와 일본 간 교역은 2013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32억 달러였던 총 교역액은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 감소와 대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2016년 160억 달러까지 하락했다.⁸¹⁾ 2018년에는 213억으로 증가했으나,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⁸²⁾

러시아의 총 교역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18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3년 3.9%, 2015년 4.0%였던 일본의 비중은 2018년에는 3.1%로 낮아졌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7%(5위 수출국)에서 2018년 2.8%(11위 수출국)로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러시아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국 중 7번째 규모로 2013년에는 4.3%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3.7%에 그쳤다.⁸³⁾

일본의 러시아 투자 역시 금액이나 비중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경제제재 이후 2014~15년 13억 달러 내외로 정체되었던 일본의 대러 직접투자(잔액 기준)는 2019년 2분기 23억 달러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0.3%에서 2019년 2분기 0.43%로 증가했다. 투자 분야는 주로 비제조업 분야인 도소매와 금융·보험 분야이다.⁸⁴⁾

80) 제성훈, 강부균(2013), pp. 82~83.

81) Park Joungho, Boogyun Kang, and Jiyoung Min(2018), "Recent Development of Russia-Japan Economic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World Economy Brief, Vol. 8 No. 3, KIEP.

82)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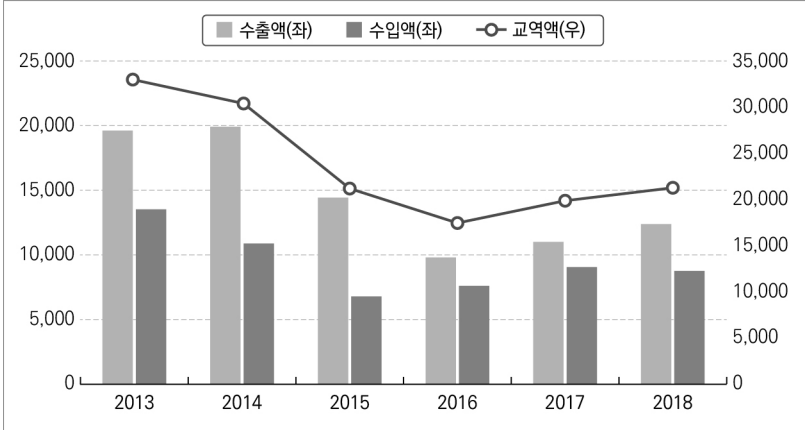
83) *Ibid.*

84) CEIC Database, Japan Outward Direct Invest, Russia, Industry(검색일: 2019. 11. 8).

85) 윤익중, 이성규(2018), pp. 141~142.

그림 4-4. 러시아의 대일본 교역(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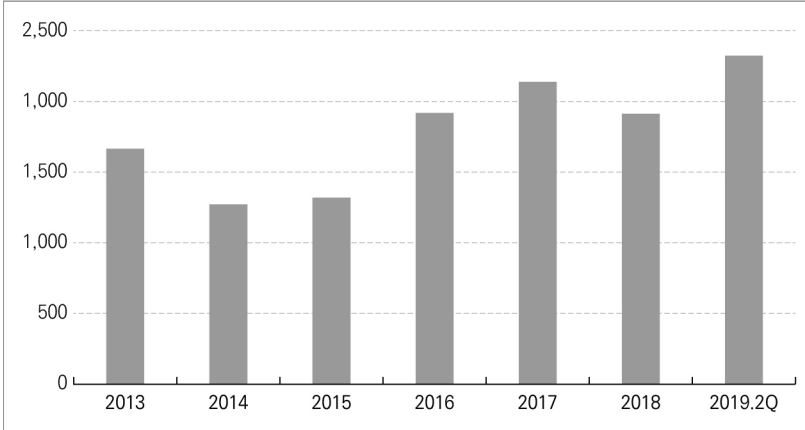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9. 11. 21).

그림 4-5.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단위: 백만 달러)



주: 누적액 기준.

자료: Банк России(검색일: 2020. 2. 6).

자산 동결, 지불규제·자본거래규제, 군사용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러시아 5대 금융기관(스베르뱅크, VTB, 대외경제개발은행, 가스프롬, 농업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가증권의 거래·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⁸⁶⁾

일본의 대러 경제제재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⁸⁷⁾ 그러나 대러 제재 이후 급진적으로 추진되던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둔화되고, 일본기업도 대러 진출 및 투자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의 기업이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76.9%의 기업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로 2019년에 러시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⁸⁸⁾

일본은 이러한 경제제재의 영향 속에서도 정상외교 및 협력 아이템 발굴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계 개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2016년 5월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이다. 이는 일·러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과 협력 수요를 고려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8개의 신규 협력분야를 지정한 것으로 보건·의료, 도시개발, 중소기업 교류·협력, 에너지, 러시아 산업다각화, 극동 산업화, 첨단기술협력, 문화·인적 교류를 포함한다.⁸⁹⁾

일본은 8개 항 협력 구상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대러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일본 국책은행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공동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갔다.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확대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86) 박지원(2018), pp. 17~19.

87) 위의 글, pp. 19~20.

88) Shagina(2019), p. 6.

89) 박정호 외(2018), pp. 112~113.

첫째는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북방 4개 섬 영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3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확대가 양국간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영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⁹⁰⁾

둘째는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아베노믹스(Abenomics) 전략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전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면서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대러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다.⁹¹⁾

셋째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2011년 당시 원자력발전은 일본 전력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이를 50%로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력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⁹²⁾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했다. 러시아는 일본과 가까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광범위한 매장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⁹³⁾

나.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 구조

최근 일본과 러시아 관계의 진전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정책과 정상 외교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2012년 아베

90) President of Russia(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91) 엽동호(2018), p. 95.

92) Brown(2013), p. 206.

93) *Ibid.*, pp. 208-210.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25차례가 넘는 정상회담을 개최했다.⁹⁴⁾ 아베 총리는 2014년 G7 국가 정상이 보이콧했음에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했으며, 동방경제포럼에도 2016년 이래 매년 참석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정부간 협의체로는 일본 외무성과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정부간 무역경제 위원회’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개최하는 ‘일·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 회의’가 대표적이다.

외무성이 1996년부터 개최해온 정부간 무역경제 위원회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외무성은 러시아 내 주요 6개 도시에 ‘일본센터(Japan Center)’를 설립하고, 일본과 러시아 간 경제 교류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추진해왔다.

경제산업성은 2016년 아베 총리가 러시아에 8개 항 협력 구상을 제안한 이후 관련 고위급 실무회담을 개최하면서 대러 경제협력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일·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 및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일·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일본정부가 신설한 ‘대러 경제협력 담당 장관’도 경제산업성 장관이 겸직하고 있다.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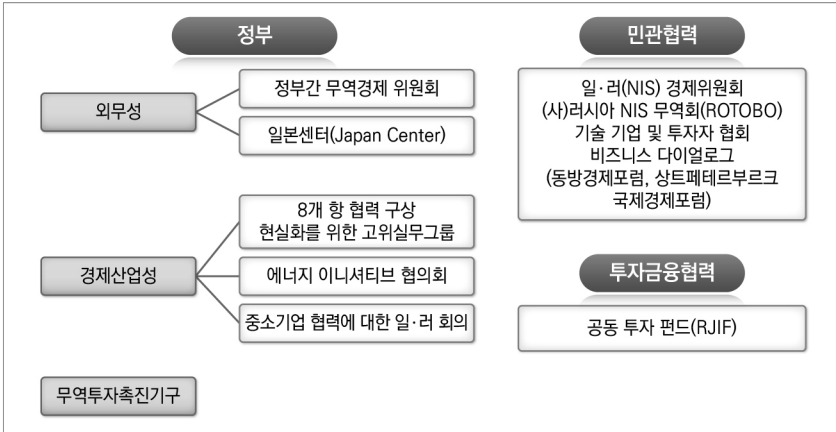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경제근대화에 대한 일·러 경제자문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주러 일본대사와 러시아 부총리가 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8개 항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산업 다각화, 극동개발 등의 협력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 외무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러시아 NIS 무역회(ROTOBO)가 공동으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를 위한 ‘일·러 무역투자촉진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94) Shagina(2019), p. 2.

95) 2019년 9월 11일 일본 내각 개편에 따라 경제산업성 및 대러 경제협력 장관에 스가와라 잇슈(Sugawara Isshu)가 임명되었다.

그림 4-6.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료: 저자 작성.

일본과 러시아 간 대표적 비즈니스 교류 채널로 양국 경제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일·러 NIS(독립국가연합) 경제위원회’가 있으며, ‘(사)러시아·NIS 무역회(ROTOBO)’도 경제산업성의 지원하에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러시아 벤처펀드 펄사(Pulsar) 벤처캐피탈⁹⁶⁾과 일·러 컨설팅 기업 사미(SAMI), 일본 기업 스카이라이트(Skylight)가 ‘일·러 기술기업 및 투자자 협회’를 신규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동방경제포럼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경제협력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일·러 금융지원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부터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투자펀드’가 극동 산업 발전 및 양국간 교역 증대를 위한 투자 활동을 수

96) ‘Pulsar 벤처캐피탈’은 러시아 카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초기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 펀드이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암호 화폐, IT, 하드웨어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 Pulsar Venture Capit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1).

표 4-3. 일·러 정부간 주요 협의체

협의체	위원장	최근 회의 개최 내용
정부간 무역·경제 위원회	(일)외무성 장관 (러)산업통상부 장관	- 13차 회의(2018. 7월): 일·러 정상회담 개최 관련 상호 관 심분야 논의, 양국간 이종과세방지협력 체결 논의 - 14차 회의(2018. 12월): 8개 항 협력 구상 추진 계획 교환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	(일)대리 경제협력담당· 경제산업성 장관 (러)경제개발부 장관	- 1차 회의(2016. 11월): 8개 항 협력 구상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30여 개의 우선 추진 프로젝트 선정 논의 가속화 합의 - 2차 회의(2018. 2월): 8개 항 협력 구상 진전 상황 검토, 협력 구상 구체화, 노동생산성·디지털이코노미·에너지 부분 협력 강조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	(일)대리 경제협력담당· 경제산업성 장관 (러)경제개발부 장관	- 5차 회의(2018. 2월): 탄화수소·핵 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특별 협력 프로젝트 논의, 프로젝트 촉진 방안 검토 - 6차 회의(2018. 4월) 및 7차 회의(2019. 7월): 탄화수소·핵 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점검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일·러 회의	(일)중소기업청 부청장 (러)경제개발부 국장 *일 경제산업성과 러 경제개발부 주관	- 6차 회의(2018. 12월): 양국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소개, 양국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자료: "Second Meeting of the Japan-Russia High-Level Working Group for Realizing the Eight-Point Cooperation Plan Held"(2018. 2. 22); "METI Holds the 6th Japan-Russia Meeting Concerning SME Cooperation"(2018. 12. 10);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행하고 있다. 최근 양국은 극동 내 일본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의학 부문 공동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2) 운영 현황 및 역할

'정부간 무역·경제 위원회'는 일본 외무성 장관과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 및 경제발전을 목표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무역·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 개선, 러시아 개혁 지원, 지역 협력, 양국 비즈니스 기관간 교류 장려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과 러시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부

위원회로 차관급인 무역 투자위원회와 지역간 협력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97) 1996년 첫 회의가 열린 뒤, 2018년 12월 개최된 14차 회의에서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교환하고, 에너지·농림수산업·금융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98)

‘일·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과 ‘일·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는 2016년 대러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이 신설되면서 새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일·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 그룹’은 2016년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한 8개 항 협력 구상을 기반으로 협력계획을 구체화하고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측 대표는 경제개발부 장관이다. 2016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30여 개의 우선 추진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2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99)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 추진 시 일본 내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추진회의’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고 대러 경제협력 담당 장관이 주관하는 이 회의에서는 일·러 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8개 항 협력 구상 구체화 방안, 정상회담 준비 등의 안건을 검토한다.100)

‘일·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는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로 러시아 측 대표는 에너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원자력 에너지,

97)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16).

98) 엽동호 한신대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5, 서울).

99) “Second Meeting of the Japan-Russia High-Level Working Group for Realizing the Eight-Point Cooperation Plan H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00)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일·러 경제협력 추진 및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개최해 온 ‘일·러·중앙아시아 교류 촉진 회의’에서 러시아 관련 부분을 분리해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 추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第8回日・露・中央アジア交流促進會議の開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9).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분야를 담당하는 세 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¹⁰¹⁾ 2016년 11월 1차 회의 이후 3년여 동안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부터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일·러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중소기업청 부청장과 러시아 경제개발부 투자정책국 국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¹⁰²⁾

러시아와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본 내 민간조직으로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이하 경단련)와 (사)러시아·NIS 무역회(ROTOBO)가 있다. 경단련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과 업종별 전국 단체, 지방별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경제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일본 및 각국 정부·경제 단체·국제기관과 실무대화를 통해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⁰³⁾ 경단련은 1965년부터 내부에 ‘일·소 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일본 경제계의 대소련 교류 창구로 활용해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일본·러시아(NIS) 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일본기업 의견 조사, 러시아 측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촉구, 일본·러시아 공동회의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측 파트너는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맹(RSPP)¹⁰⁴⁾이다. 이 일본·러시아(NIS) 경제위원회가 매년 열고

101) “Mr.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Visited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2).

102) “METI Holds the 6th Japan-Russia Meeting Concerning SME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2).

103) 2019년 4월 1일 기준 기업 1,412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전국 단체 109개, 지방 경제단체 47개가 참여하고 있다. 『経団連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9).

104)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맹(RSPP: The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은 러시아 경제인 단체로 100개 이상의 산업 및 지역 협회와 수천 개의 각 분야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SPP는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비즈니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CI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1).

있는 공동회의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 정책과 협력 현황,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8년 11월 15차 공동회의에서는 경단련의 러시아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극동에 대한 FDI 유치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 교통 인프라 개발,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조세 혜택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¹⁰⁵⁾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개최할 경우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등 관련 부처도 참석한다. 그 외에 대러 사절단 파견, 일본을 방문하는 러시아 정부 및 경제계 인사와의 정보·의견 교환, 러시아 진출 기업 지원, 러시아 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¹⁰⁶⁾

경단련은 2005년 이후 매년 러시아 진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¹⁰⁷⁾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일·러 경제 공동회의에서 발표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일·러 경제위원회(NIS)의 아사다 테루오 위원장은 2018년 6월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일·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일본기업들의 요청사항으로 극동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특구에서의 우대조치 연장 등을 제안했고 회의에 참석했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대조치 연장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¹⁰⁸⁾ 이 외에도 관계자들은 주일본 러시아 대사관이나 통상대표단, 일본을 방문하는 러시아 정부 및 경제계 주요 인사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¹⁰⁹⁾

105) "Memorandum XV Joint Meeting of the Japanese-Russian and Russian-Japanese Committees on Economic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4).

106)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관계자 면담 내용(2019. 10. 30, 도쿄).

107) 경단련은 매년 9월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ロシアのビジネス環境等に関するアンケート (2019年度) 結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9).

108) 「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国際経済フォーラムに朝田日本ロシア経済委員長が参加」(2018. 6.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9).

또 다른 민간조직인 ‘(사)러시아·NIS 무역회(ROTOBO)’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법인이다. 1967년 러시아를 포함한 옛 소련 국가들과의 무역, 비즈니스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NIS, 몽골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또한 부설 경제연구소를 통해 러시아, NIS 경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투자 포럼·전시회 개최 등 교류 촉진 사업, 컨설팅·비즈니스 매칭 등 비즈니스 지원 사업, 협력 대상국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생을 초청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¹¹⁰⁾

일본과 러시아는 이런 다양한 정부 및 민간의 조직을 망라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일·러 무역 투자촉진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을 주축으로 외무성, (사)러시아·NIS 무역회(ROTOB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공동으로 헤드쿼터를 구성하고 ROTOBO가 사무국을, 일본센터와 JETRO 모스크바 사무소 등이 현지 지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경제개발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련 부처가 헤드쿼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 일본통상대표부가 일본 내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¹¹¹⁾ 이 기구는 2004년부터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 간 경제관계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도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분쟁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¹¹²⁾

한편 러시아의 시장경제 개혁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목표로 일본정부가 1994년부터 러시아 내에 설립하기 시작한 ‘일본센터(Japan Center)’도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어 양국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회강좌 및 연수, 세미나 개최 등 본연의 교육

109)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관계자 면담 내용(2019. 10. 30, 도쿄).

110) ROTOB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4).

111) 「日露貿易投資促進機構とは」,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1); 염동호 한신대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5, 서울).

112) 「日本側機構の活動開始に関する発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1).

기능 이외에, 일·러 무역투자촉진기구의 일본 측 지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8개 항 협력 구상의 하나인 중소기업 교류 및 협력 확대 부문 책임 기관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양국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센터는 현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Nizhni Novgorod)에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다.¹¹³⁾

한편 2019년 4월에 기술기업간 협의체로 ‘일·러 기술기업 및 투자자 협회’가 발족했다. 러시아 벤처펀드인 Pulsar VC와 러·일 컨설팅 기업 SAMI, 일본 기업 Skylight 컨설팅이 공동 설립했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양국간 기술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30여 개 이상의 일본과 러시아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이다.¹¹⁴⁾ 양국은 또한 2018년 2월에 일본기업의 러시아 극동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일·러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FEIA), 국제협력은행(JBIC), 극동바이칼지역 개발펀드(FDEF)가 공동으로 투자했으며, 정보 제공·사업기획·주정부기관과의 소통 등 투자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일본 투자자를 위한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한다.¹¹⁵⁾ 2019년 9월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국영 벤처 펀드인 러시아벤처컴퍼니(RVC: Russian Venture Company)와 일본기업 미즈호(Mizuho)가 디지털 클리닉 공급 등 현대 의학 및 관련 첨단 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¹¹⁶⁾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프로그램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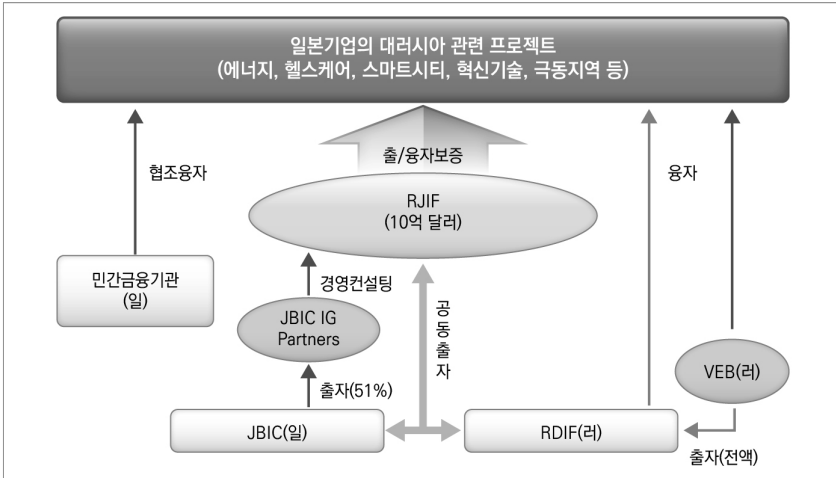
113) 「日本センター事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1).

114) “Russian and Japanese tech players and investors create business association”(2019. 4.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115) “Russia and Japan Set Up a Joint Venture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in the Far East”(2018. 2.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116) “Российская венчурная компания и японская Mizuho создадут инвестфонд”(2019. 9.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3).

그림 4-7. 일·러 투자 플랫폼 개념도



주: 1)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은행.
 2) 러시아개발대외경제은행(러시아 국영은행).
 3)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Russia Direct Investment Fund).
 4) JBIC IG Partners: JBIC와 IGPI가 공동으로 설립한 해외사업 전문 컨설팅회사.
 5) 일러 공동투자 펀드(RJIIF: Russia-Japan Investment Fund).
 자료: 염동호(2018), p. 100.

으로 개최되고 있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역시 양국이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다. 2019년 6월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초점이 IT 프로젝트와 디지털 경제로 옮겨왔다는 데 공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¹¹⁷⁾ 9월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극동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¹¹⁸⁾

최근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지원이다. 이는 2014년 대러 경제제재 이후 달러화에 집중된 금융 시스템과 거래 구조로 인해 일본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용자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⁹⁾ 일본정

117) SPIEF(2019), p. 74.

118) EEF(2019), pp. 22-23.

부가 이러한 금융부문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출자 펀드이다.¹²⁰⁾

대리 투자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펀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7년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이 공동으로 출자한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펀드(RJIF: Russia-Japan Investment Fund)’이다. 핵심 투자 분야는 극동의 산업발전 및 수출역량 증대, 양국간 교역 증대, 헬스케어·스마트시티·에너지·신기술 부문 등이다.¹²¹⁾ RJIF가 출·용자를 보증하고 민간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 및 진출 협조용자를 실시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투·용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다기능 원격의료서비스업체 독티스(Doctis)사 지분 인수, 러시아 바이오연료산업 투자 참여, AR 디스플레이 개발업체 웨이레이(Wayray)사 투자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은 대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제협력은행(JBIC), 석유천연가스·금속자원광물기구(JOGMEC)¹²²⁾ 등 유관기관이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참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리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²³⁾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6월 미쓰이그룹과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자원광물기구(JOGMEC)가 구성한 컨소시엄(Japan Arctic LNG B.V.)이 러시아 가스기업 노바텍(Novatec PJSC)과 북극 LNG-2 프로젝트 지

119) Shagina(2019), p. 6.

120) *Ibid.*, p. 8.

121) “Russia and Japan launch joint \$1 billion fund to invest in healthcare, industrial and tech projects”(2017. 9.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

122)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자원광물기구(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는 일본정부가 2004년 설립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기관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석유공단(JNOC)과 금속광업사업단(MMA)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민간 자원개발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원탐사와 개발 관련 출자·용자·보증, 기술개발 및 지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이다. [신년기획] 자원개발 사업 주도할 전문기관 필요하다(2015. 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1).

123) Shagina(2019), p. 4, p. 8.

분 10%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¹²⁴⁾ 이 과정에서 JOGMEC이 총 투자금의 75%인 약 2,900억 엔을 직접 출자하고 약 450억 엔 규모의 채무 보증을 제공했으며, JBIC가 일본 측 컨소시엄에 1억 2,500만 유로의 용자를 제공하는 한편, 일본무역보험(NEXI)이 해외투자보험을 제공하는 등 일본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했다.¹²⁵⁾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가.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러시아와 독일의 교류는 10세기부터 지속되어왔으며,¹²⁶⁾ 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이 EU의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면서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가 다소 경직됐음에도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은 일정한 수준(차관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독일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에너지 자원에 관심이 많다. 독일은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지만, 독일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양국의 협력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주로 대규모 사업을 담

124) «НОВАТЭК», Mitsui и JOGMEC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доли в проекте «Арктик СПГ 2»(2019.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3).

125) “JOGMEC provides Equity Financing and Loan Guarantee for Mitsui’s participation in the Arctic LNG 2 Project and signed Share Purchase Agreement”(2019.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Loan for Acquisition of Interest in Arctic LNG 2 Project in Gydan Peninsula, Russia”(2019. 7.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126) “История немцев России: Немцы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IX - XVII веко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2).

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슈뢰더 전 총리와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국제회의에서 빈번히 만나며, 전화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매년 러시아에 대규모로 투자한 독일의 기업인들을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¹²⁷⁾ 러시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독일의 대기업은 러시아 사업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독일 기업은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 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2.0’¹²⁸⁾을 가장 먼저 체결한 기업이 독일 기업이었으며, 신규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독일 기업의 입장이 고려되었다.¹²⁹⁾

글상자 4-3. 러·독 교역 및 투자 현황(2014~18년)

2014년 독일은 러시아 전체 교역액 7,845억 달러 중 8.9%인 700억 달러를 차지했다. 2017년 까지 독일은 꾸준히 러시아 전체 교역액의 8%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2015년 러·독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7% 하락했음에도 독일이 러시아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러·독 수출입 규모는 2018년 기준 596억 달러로 러시아의 대독일 수출은 340억 달러, 수입은 255억 달러였으며, 수출이 57.2%, 수입이 42.8%를 차지했다. 2015년 양국의 교역액이 급락한 이후 2016년 전년 동기 대비 11.1% 하락했고, 2017년에 회복세로 전환해 2018년 전년 대비 19.3% 상승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이다. 대러 제재 이후 2013년 독일의 대러 직접투자는 190억 달러에서 2015년 130억 달러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소폭 감소했다. 2019년 2분기 기준 독일의 대러 직접투자액은 2013년 이후 최고치인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전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독일의 비중은 2013년 3.4%, 2014~2018년 3.4~3.7% 내외를 유지하다, 2019년 2분기 기준 3.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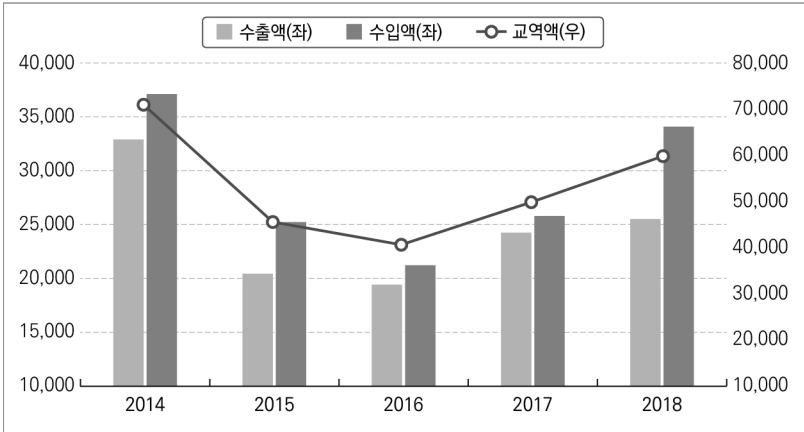
127) “Время для драй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рманским бизнесом”(2017. 10.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4).

128)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2.0’은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와 투자기업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투자기업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업 활동 시 특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특별투자계약’과 달리, ‘특별투자계약 2.0’은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과 더불어 정부에서 발표한 목록에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СПИК 2.0. Как изменятся предмет, порядок заключения и льготы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онтракта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129) 러시아 고등경제대 유럽경제학과 교수 비공개 면담 내용(2019. 10. 29, 모스크바).

그림 4-8. 러시아의 대독일 무역(2014~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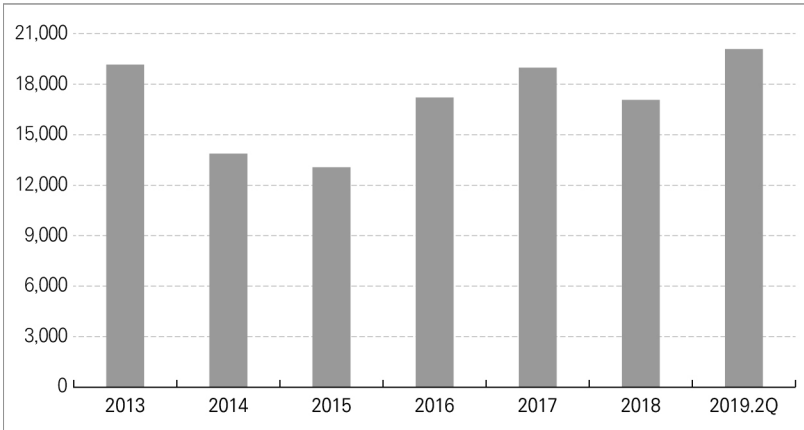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검색일: 2019. 9. 19).

그림 4-9. 독일의 대러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단위: 백만 달러)



주: 누적액 기준.

자료: Банк России(검색일: 2020. 2. 6).

현재 러시아와 독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과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의 석유·가스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노르드스트림’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노르드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관통하여 독일로 해저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르드스트림-2는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¹³⁰⁾ 그러나 최근 덴마크에서 건설을 허가함으로써 노르드스트림-2 사업도 순항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¹³¹⁾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노르드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을 통해 유럽으로 직접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EU 차원에서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직결되어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¹³²⁾

미국과 EU의 대러 경제제재 상황에서 2014년 이후 독일과 러시아 간의 교역 규모가 소폭 감소했으나, 독일 기업은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대다수의 독일 기업은 러시아의 경기 침체에도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 투자를 지속해왔다. 다만 2014년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축소된 것을 전적으로 제재의 여파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12~13년에 양국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를 달성한 이후 2014년부터 제재 이외에도 러시아 내 열악한 투자환경, 복잡한 행정, 부정부패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교류가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³⁾

EU의 대러 경제제재 해제 조건은 민스크협정¹³⁴⁾의 이행인데,¹³⁵⁾ 현재 양측

130) “Комитет Сената США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го потока 2””(2019. 7. 31), 온라인 기사; “Немецкие лоббисты обеспокоены санкциями США за участие в “Северном потоке - 2””(2019. 8. 7),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131) “Дания одобрила “Северный поток - 2””(2019.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2).

132) “Эксперт рассказал, как Германия отстояла “Северный поток — 2””(2019. 4.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33) 러시아 고등경제대 유럽경제학과 교수 비공개 면담 내용(2019. 10. 29, 모스크바).

134) 민스크협정은 2014년 9월 5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 간 체결된 1차 협정과 2015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간 체결된 2차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모든 교전 중단과 평화 정착이다. 하지만 교전이 재개되면서 본 협정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Что такое Минские соглашения”(2016. 3. 25), 온라인 기사; “ЕС продлит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так как не видит прогресса в выпол

그림 4-10. 노르드스트림-1,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노선



자료: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모두 협정문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¹³⁶⁾ 따라서 앞으로 EU의 제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의 경제제재에도 독일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독일 기업은 러시아에서의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제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나.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 구조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분야, 그리고 금융지원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러시아의 경제개발부와 독일의 경제에너지부에서 관장하는 ‘러·독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와 4개의 하위 분과 회의가 대표

нении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2018. 12. 13),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9).
 135) “EU extends sanctions on Russia over Ukraine”(2018.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4).
 136) “Курт Волкер: спустя четыре года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ет нарушать Минские соглашения”(2019. 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2).

적이다. 또한 양국 정상과 장관급이 참여하는 ‘러·독 정부간 협의회’도 양국의 경제협력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항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독일의 지방 정부인 바이에른 주정부가 주최하는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 실무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체는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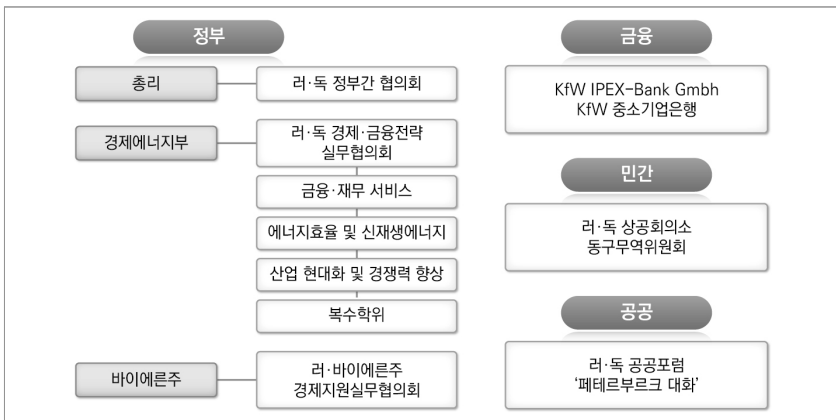
민간 분야의 거버넌스는 실무 지원을 주관하는 러·독 상공회의소와 공공 부문에서 분야별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러·독 공공포럼인 ‘페테르부르크 대화’를 꼽을 수 있다. 그 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를 포괄하는 동구무역위원회가 있다.

금융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독일의 KfW IPEX-Bank GmbH와 KfW 중소기업은행 등 수출 기업에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체계가 대표적이다.

2) 운영 현황 및 역할

‘러·독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는 2000년 당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

그림 4-11.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료: 한성민 한림대학교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25);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정보연구소 소장 권한대행 비공개 발표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25, 모스크바); 러·독상공회의소 前직원 비공개 발표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3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 Риа новости(2017. 5.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턴 대통령과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공동제안으로 마련되었다.¹³⁷⁾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는 본회의 외 금융·재무 서비스,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대화 및 경쟁력 향상, 복수 학위를 포함한 총 4개의 하위분과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무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독일의 경제에너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부 차관이 공동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일반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연 2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회의는 2019년 6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실무협회의의 주요 협상 분야는 양국 정부의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 혁신 사업 발굴 및 지원, 기존 사업의 애로사항 등이며, 이 기구는 주요 문제를 신속하게 건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¹³⁸⁾ 또한 이 실무협의회는 기업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정부의 제안을 기업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상호 보완적 채널이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독일의 기업이 러시아 정부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회의 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부 외 다른 부처의 참석이 요구될 경우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유관부처의 참석도 가능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년간 개최되지 않았으나, 2016년 6월 24일 베를린에서 재개된 34차 회의를 양국의 경제에너지부와 경제개발부 차관이 공동 주관했다. 그 이후 6개월여에 한 번씩 두 나라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8차 실무협의회까지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차 회의에서 양국의 대표단은 의료, 첨단기술 분야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경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137)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2017. 5.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

138) “О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й-Герман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2018. 5.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서 경제 분야의 주요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점은 양국의 입장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³⁹⁾ 35차 회의는 경제개발부, 경제에너지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 2016년 10월 31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당시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인은 러시아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러시아의 시장 가치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 회의에는 양국의 기업인 다수가 참석했으며, 양국 기업간 에너지, 교육 및 인프라 분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¹⁴⁰⁾

2017년 9월 2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6차 회의는 러시아 측에서 산업통상부 차관이, 독일 측에선 러·독 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독일 기업의 러시아 내 생산 및 기술 현지화 비율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¹⁴¹⁾ 독일의 거버넌스는 특정 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민간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특히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7차 회의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이 회의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이 주도하는 ‘러·독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GRID: German Russian Initiative for Digitalization)’¹⁴²⁾의 실현 방안과 세부 사안이 논의되었다. 대표단은 러시아 기업의 세계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편입을 위해 독일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측은 독일 기업의 러시아 법률 서비스 시장 진출 문제와 관·부과세 부과 기준 및 계

139) “В Берлине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Россия-ФРГ”(2016.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0) “Lokalisierung und Mittelstand,” Ost-Ausschuss - Osteuropaverein der Deutschen Wirtschaft(2016. 10.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41) “Россия и Германия обсуждают вопросы вопросы локализац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2017. 10.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2) ‘러·독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GRID)’는 러·독상공회의소, 동구무역위원회, 러시아산업·기업인 연맹과 양국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며, 유럽의 디지털·혁신 기술 및 경험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러시아 경제 현대화와 더불어 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Deutsch-Russische Initiative für Digitalisierung der Wirtschaft(GRID),” Deutsch-Russische Auslandshandelskamm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표 4-4. '러·독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및 주요 회의 의제

구조	운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 공동 제안 - △금융·재무 서비스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현대화 및 산업 경쟁력 △복수학위 총 4개의 하위 회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19년 총 39회 회의 개최 -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독일의 경제에너지부가 관장, 필요시 양국의 유관부처에서 동반 참석 - 연 2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차례대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부의 전략 사업 지원 - 혁신 사업 발굴 및 지원 - 기존 사업 애로사항 해결 - 기타 의제 논의
회차	주요 내용	관심분야
제34차 2016. 6. 24 독일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경제부 차관 참석 - 의료, 첨단기술 분야 10억 유로 규모 경제협약 체결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첫 회의 	의료, 혁신산업
제35차 2016. 10. 31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경제부 차관, 기업인 참석 - 러시아 경제 침체기에도 시장 가치 유지 - 기업간 협력 의지 확인 - 양국 기업간 에너지, 교육, 인프라 분야 경제협약 체결 	에너지, 교육, 인프라
제36차 2017. 9. 28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러·독 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참석 - 독일 기업의 생산 및 기술 현지화 비율 확대 문제 논의 	사업환경, 현지화
제37차 2018. 6. 27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참석 - '러·독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GRID)' 실현 방안과 세부 사안 논의 - 러시아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문제 논의 - 관부과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한 개선 제안 - 제약 분야 특허 인정 범위 논의 	디지털, 법률, 관세, 특허
제38차 2018. 12. 13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차관 참석 - 러시아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독일 기업 간 협력 방안 모색 - 스마트시티, 의료·건설·물류 디지털화 및 초고속 철도 분야 등 유망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스타트업, 디지털, 철도

자료: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 РИА новости(2017. 5. 2); "О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 о-Герман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еловая Россия(2018. 5. 31); "В Берлине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стратеги че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Россия-ФРГ," РИА новости(2016. 6. 24); "Россия и Германия обсуждают вопро сы вопросы локализац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 Рамблер(2017. 10. 2);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Германии," ИА Красная Весна(2018. 12. 13); "Lokalisierung und Mittelstand," Ost-Ausschuss - Osteuropaverein der Deutschen Wirtschaft (2016. 10. 31); "Strategische Arbeitsgruppe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tagt in Moskau," AHK-News(2018. 6. 27); "Deutsch-Russische Initiative für Digitalisierung der Wirtschaft (GRID)," Deutsch-Russische Auslandshandelskamme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산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독일 제약업체의 러시아 내 특허 인정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¹⁴³⁾

38차 회의는 2018년 12월 13일 베를린에서 열려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과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의 주재 아래 러시아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독일 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스마트시티, 의료·건설·물류 디지털화 및 초고속 철도 분야 등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¹⁴⁴⁾

‘러·독 정부간 협의회’는 1998년부터 시작해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연 1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려왔다. 정상회담과 별도로 양국의 정상, 정부부처의 장관급 인사와 더불어 기업인이 다수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이다.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 등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의제를 선정한다. 그러나 2012년 11월 제14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중단되었다. 최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의에서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독일에서도 정부간 협의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¹⁴⁵⁾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 실무협의회’는 2017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독일 바이에른 호르스트 제호퍼 주지사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러·바이에른주 실무협의회는 러시아 정부와 독일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러시아와의 협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에른 주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원칙적으로 실무협의회는 독일과 러시아에서 연 1회 순차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7년 10월 5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1차 협의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¹⁴⁶⁾ 러시아와 바이에른 주정부

143) “Strategische Arbeitsgruppe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tagt in Moskau,” ANK-News (2018. 6.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44)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Германии”(2018.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5) “Лавров: РФ открыта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формат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Германией”(2019. 7.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6) 아르타모노프 러시아 칼루가 주지사와 양측 기업 대표를 주축으로 제1차 회의의 협의 사항을 추진하고

표 4-5. '러·독 정부간 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외 별도의 정부간 협의체 구성에 동의 - 양국 정상, 정부 고위인사 외 기업인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12년간 총14회 개최 - 연1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차례대로 진행 - 2012년 이후 일시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 의제 논의 - 양국 정상,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조치 가능

자료: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2017. 5. 2), РИА новости: "Лавров: РФ открыта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формата 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Германией"(2019. 7. 19), ТАСС,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는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 실무협의회를 신사업 발굴과 구체적 사업 논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부 차관과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이 공동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¹⁴⁷⁾ 양국 대표단은 디지털 분야의 협력과 바이에른주 기업의 러시아 투자 진출·확대 방안을 공유하고, 산업, 의료, 교통·운송,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통관, 비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생산 및 기술 현지화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양국 기업간 협약이 다수 체결되었으며, 독일의 'Giesserei Heunisch GmbH'와 러시아의 'PAO Agregatniy Zavod'는 7억 5,000만 루블 규모의 주조 공장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¹⁴⁸⁾ 러·바이에른주 실무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러·독 공공포럼 '페테르부르크 대화'¹⁴⁹⁾는 2000년 당시 러시아 푸틴 대통

있으며, 2019년 말 러시아에서 제2차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ся," 온라인 자료: "Германия.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9).

147) "Россия и Бавария создали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2017. 3.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8) "1-е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бавар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2017. 10.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0).

149)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양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대화 플랫폼이다.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 DEUTSCH-RUSSISCHES FORUM E.V./ГЕРМАНО-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표 4-6.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2017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독일 바이에른 제호퍼 주지사의 공동제안으로 구성	- 2017년 총 1회 개최 - 2019년 러시아에서 개최 예정 - 원칙적으로 독일과 러시아에서 연회 개최 합의	- 바이에른주 기업의 러시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경제협력 애로사항 개선 및 제도적 지원

자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ся," Людиновский рабочий; "Россия и Бавария создали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2017. 3. 17), ИА RNS: "1-е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бавар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2017. 10. 17), Efwab,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연 1회 약 3일간 세미나 형식으로 러시아와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2001년부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진행되었다. 포럼 기간 외에도 분과별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의료 등의 분야를 다루는 민간분야의 양자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포럼을 통해 사회·정치·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소통하며,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2012년부터 포럼 기간 중 양국의 우수 언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의 다방면에 걸친 양자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페테르부르크 대화' 경제 분과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의 경우 3월과 9월 열린 두 차례 경제 분과 실무회의의 가운데 3월 회의에는 가스프롬 부사장 및 계열사 사장단, 독일의 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야말반도에 위치한 북극 유전을 답사하고, 사할린 유전과 캄차카 유전의 작업환경과 업무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¹⁵⁰⁾ 9월 회의는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주독러시아대사관 참사관, 독일관광협회 회장과 러시아관광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담당 부위원장과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의 화상 회의가 진행됐으며, 양국 참석자들은 '사우스

150) "11-14 марта 2014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스트림' 사업과 러·독, 러·EU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법률·기술 등 다방면에서 논의를 진행했다.¹⁵¹⁾

2015년에는 5월과 9월 2차례 경제 분과 실무회의가 열렸고, 5월에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러시아 지열 자원 현황과 지열 발전(發電) 가능성, 혁신기술 활용과 친환경 발전(發電)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원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 보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¹⁵²⁾ 9월 회의는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향후 20년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개편 가능성과 러시아와 유럽의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¹⁵³⁾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차례씩 회의가 열렸는데, 2016년 9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경제 분과 실무회의에서는 양국의 농업 협력과 러시아 농업 발전 가능성, 농업 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¹⁵⁴⁾ 2017년 회의는 환경 분과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파리기후협약과 러·독 환경 정책, 러시아와 독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¹⁵⁵⁾ 2018년 7월 회의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가스 자원 활용 방안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EU의 대러 경제제재로 사업이 타격을 받은 '노르드스트림-2' 사업, 러시아와 EU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노르드스트림-1, 2' 사업과 연계해서 정치·외교와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¹⁵⁶⁾

151) "25-27 сентября 2014 года в Герм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52) "19-22 ма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53) "25 сентябр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54) "22-24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в Мюнх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55) "18 июня 2017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их групп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логическ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56) "10-12 июля 2018 года в В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표 4-7. 러·독 공공포럼 '페테르부르크 대화'의 경제 분과 구조·운영·역할 및 주요 회의 내용

구조	운영	역할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 공동 제안	- 2001~18년 총 18회 공공포 럼 개최 - 연중 분과별 실무회의 개최	-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의료 등 다방면 양자 대화 플랫폼 - 양국 전문가는 정치·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소통하며, 협력 기반 구축
개최일자	주요 회의 내용	주요 분야
2014. 3. 11~14 러시아, 야말반도·모스크바	- 북극 자원 유전 소개 및 현장 답사 - 러시아 자원 채굴 과정 소개 - 사할린, 캄차카 유전 작업환경 소개, 애로사항 논의	북극, 에너지 자원
2014. 9. 25~27 독일, 베를린	- 러시아 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 - 무비자 협정 체결 가능성 - 사우스트림(South Stream) 사업 소개 - EU 에너지 규제 개선 방안	관광, 에너지
2015. 5. 19~22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카מצ키	- 러시아 지열 자원 현황 및 지열발전 가능성 - 혁신기술 활용 및 친환경 발전 방안 - 자원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보존 문제	신재생에너지, 환경
2015. 9. 25 독일	- 향후 20년간 에너지 시장 개편 가능성 - 러시아와 유럽의 인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2016. 9. 22~24 독일, 뮌헨	- 러시아 지방개발과 농업 발전 가능성 - 농업 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농업, 혁신기술
2017. 6. 18 러시아, 모스크바	- 경제, 환경 분야 현대화 공동 회의 - 파리기후협약과 러·독 환경 정책 - 러시아와 독일의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기후·환경, 에너지
2018. 7. 10~12 오스트리아, 빈	- 가스 에너지 활용 방안 - 노르드스트림-2 및 러·EU 에너지 협력	에너지, 전략산업
2018. 11. 29~12.1 러시아, 톨라	- 경제 분야의 사물인터넷 활용 방안 - 식품품 가공, 포장, 운송 방안	사물인터넷, 식품업
2019. 4. 4~6 독일, 바덴바덴	- 광고 및 마케팅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 식품 산업 잠재력 및 발전 방안	디지털, 식품업

자료: "11~14 марта 2014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25~27 сентября 2014 года в Герм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19~22 ма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25 сентябр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22~24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в Мюнх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18 июня 2017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их групп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логическ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10~12 июля 2018 года в В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0).

또한 최근 회의 내용을 보면, 양국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접목, 사물인터넷 활용 등 디지털 분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는 중요한 대화 플랫폼인 ‘페테르부르크 대화’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경제 분과 실무회의는 에너지, 환경, 관광,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페테르부르크 대화’에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들은 물론 독일의 기업인도 다수 참석하고 있으며, 제재 전에는 ‘러·EU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EU 차원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인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¹⁵⁷⁾ 또한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 등 청년층의 참석이 가능해 향후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 채널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대화 채널과 민간 차원의 대화 플랫폼을 통해 양국은 제재 국면에도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왔다.

이밖에도 러시아와 독일 간의 민간 분야 경제협력에서 러·독 상공회의소(Russian-German Chamber of Commerce)¹⁵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러·독 상공회의소는 2007년 개소했으며 양국의 비즈니스 교류, 교역 및 투자 활동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독 상공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러시아 내 독일 업체들과 독일 내 러시아 업체들의 입장 대변 및 입법 로비, 시장 진출 지원, 러시아 경제 동향 서비스 제공 등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약 900여 개

157)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정보연구소 소장 권한대행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25, 모스크바).

158) 1995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부 독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주러시아독일경제연맹을 설립했으며, 2007년 독일경제연맹이 러·독 상공회의소로 재편성되었다. 주러시아독일경제연맹 설립 전에는 독일 상공회의소의 모스크바 사무소가 있었으며, 모스크바 사무소는 동구무역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을 지원했다. “Союз немецкой экономики”(1999. 4.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9).

표 4-8. '러·독 상공회의소'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2007년 개소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칼리닌그라드에 사무소 운영	- 분야별 위원회 및 분과 실무회의 개최 - 회원사의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	- 러시아 입법부에 독일 기업 입장 대변 -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정보 제공 - 전시회 개최, 사업파트너 발굴, 법률 자문 등 현지 사업 지원 - 러시아 경제 동향 서비스 제공

자료: 러·독 상공회의소 前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31, 상트페테르부르크)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의 독일과 러시아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기업은 러시아 시장 진출 시 민간 컨설팅 업체와 상공회의소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공회의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¹⁵⁹⁾ 신규 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간단한 시장 정보와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료 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 시장 진출 단계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¹⁶⁰⁾ 대부분의 러시아 내 독일 기업은 사업 초기에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의 회원 관리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5,000여 개의 독일 기업 중 약 900개의 기업이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사업 안정화 단계에서 탈퇴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¹⁶¹⁾

러·독 상공회의소의 분야별 위원회와 실무회의는 농업, 식품, 회계, 준법감시, 기업윤리, 전자상거래, 정보보안,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세무, 부동산, 환경, 인사관리, 법, 현지화, 세관·통관, 물류·교통, 금융 등 회원사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독 상공회의소는 매년 관세·통관, 세무, 기업윤리, 재무, 건설, 법률 분야의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주러 독일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를 개최해

159) 러·독 상공회의소 前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31, 상트페테르부르크).

160) 위의 자료.

161) 위의 자료.

독일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입법 로비는 상공회의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공회의소는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입법하기 전에 독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해외 상공회의소 대표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러·독 상공회의소 마티아스 셰프(Matthias Schepp)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러·독상공회의소는 주기적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정부에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해외 상공회의소를 관할하는 독일 상공회의소연합(DIHK)은 공공기관으로서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독립 법인(DEinternational)을 만들어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¹⁶²⁾ 러시아에서는 (유)독일경제정보센터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법인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러·독 상공회의소의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¹⁶³⁾ 독일 연방에너지경제부(BMWi)와 독일상공회의소연합(DIHK)의 예산 지원, 회원사에서 매년 지불하는 회비와 함께 DEinternational이 벌어들이는 유료 서비스 수익은 러·독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주요 자금원이다.¹⁶⁴⁾

또한 러·독 상공회의소는 로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는 법률 상담, 소송 대행 등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러시아 지방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자 상공회의소 대표가 재판정에 동반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해당 기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¹⁶⁵⁾ 이를 통해

162) DEinternational-AH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2).

163) 러·독 상공회의소 前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31, 상트페테르부르크).

164) 위의 자료.

165) 위의 자료.

표 4-9. '동구무역위원회'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설립 - (구)독일경제 동구위원회와 (구)독일경제 동유럽위원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29개국에서 활동 - 독일의 6대 협회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국 내 로비 활동 - 시장정보 제공, 분야별 실무협의회 개최, 세미나 개최, 사절단 파견 등

자료: OAOEV,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0. 러·독 경제협력 주요 거버넌스 구조·운영·역할

	실무협의회	정부간 회의	공공포럼	상공회의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 공동 제안 - △금융·재무 서비스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현대화 및 산업 경쟁력 △복수 학위 총 4개의 하위 회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외 별도의 정부간 협의체 구성에 동의 - 양국 정상, 정부 고위인사 외 기업인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 공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개소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칼리닌그라드에 사무소 운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19년 총 39회 회의 개최 -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독일의 경제에너지부가 관장, 필요시 양국의 유관부처에서 동반 참석 - 연 2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차례대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12년 총 14회 개최 - 연 1회 러시아와 독일에서 차례대로 진행 - 2012년 이후 일시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18년 총 18회 공공포럼 개최 - 연중 분과별 실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위원회 및 분과실무회의의 개최 - 회원사의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부의 전략 사업 지원 - 혁신 사업 발굴 및 지원 - 기존 사업 애로사항 해결 - 기타 의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 의제 논의 - 양국 정상,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의료 등 다방면 양자 대화 플랫폼 - 양국 전문가는 정치·외교적 상황과 관계 없이 소통하며, 협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입법부에 독일 기업 입장 대변 -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등 정보 제공 - 전시회 개최, 사업파트너 발굴, 법률 자문 등 현지 사업 지원 - 러시아 경제 동향 서비스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상공회의소는 러시아 내에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협의체인 동구무역위원회(OAOEV: Ost-Ausschuss - Osteuropaverein der Deutschen Wirtschaft)는 2018년 (구)독일경제 동구위원회와 (구)독일경제 동유럽위원회가 통합해 발족했다.¹⁶⁶⁾ 독일 6대 협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이 동구 무역위원회는 현재 동유럽,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등 2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약 350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각국의 로비 활동과 더불어 시장정보 제공, 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이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특징

러시아와 베트남은 1958년 수교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1994년 러시아와 베트남은 우호관계를 수립했으며, 2001년 전략적 관계를 구축했다. 2012년 양국은 전략적 관계 강화에 합의하면서 서로에게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

글상자 4-4. 러·베트남 교역 및 투자 현황(2014~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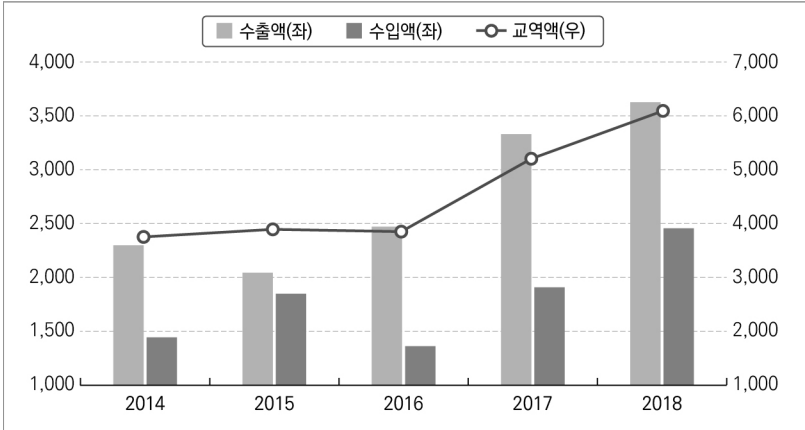
2014년 베트남은 러시아 전체 교역액 7,845억 달러 가운데 37억 달러로 0.5%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 10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간 FTA 발효 이후 소폭 증가했다. 러·베트남의 2017년 수출입 규모는 최고치인 52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36.2% 증가한 수치였다. 2018년 기준 러시아의 대 베트남 수출은 36억 달러, 수입은 24억 달러(전체 교역에서 수출 40.4%, 수입 59.6%)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에서 비공개된 2014~15년의 통계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대러 직접투자액은 2016년 기준 러시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 4,777억 달러 중 약 0.16%에 해당하는 7억 7,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2분기 기준 베트남의 누적 대러 직접투자액은 5억 9,100만 달러이며, 이는 러시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약 0.11%의 비중을 차지한다.

166) OAOEV,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2).

그림 4-12. 러시아의 대베트남 교역액(2014~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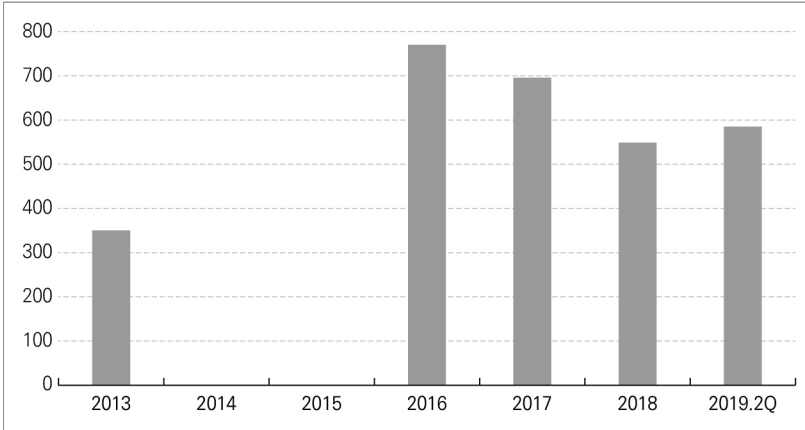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검색일: 2019. 9. 19).

그림 4-13. 베트남의 대러 직접투자 추이(2013~19. 2Q)

(단위: 백만 달러)



주: 누적액 기준.

자료: Банк России(검색일: 2020. 2. 6).

너가 되었다.¹⁶⁷⁾ 러시아 입장에서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는 아세안 지역 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양국은 WTO, IMF, APEC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 협정을 체결한 첫 국가가 되었다.¹⁶⁸⁾

베트남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군사 기술 분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업, 기계공학, 광업, 통신업, 운송업 및 금융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중이다.¹⁶⁹⁾ 특히 최근 석유·가스, 전력, IT, 화물차량 조립, 어업 등의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⁷⁰⁾

양국의 정부간 회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매년 정상 및 총리급 회담과 더불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양국의 중앙은행간 회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¹⁷¹⁾

러·베트남 정부간의 대화가 양국 민간 기업의 교류 증진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양국 경제협력의 주된 특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부간 또는 공기업간의 사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석유·가스, 자동차 조립, 군사·안보, 지방협력 및 관광 등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석유·가스 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티’는 베트남에 진출해 남중국해에 위치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다.¹⁷²⁾

167)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68)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Вьетнам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69) Андреев Петр Сергеевич(2013), p. 107.

170) *Ibid.*, p. 107.

171) Vladimir Mazyrin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아세안센터장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 (2019. 10. 30, 모스크바).

172) “Стратегия партнёрства: почему Вьетнам ищет сближения и с Россией, и с США”(2017.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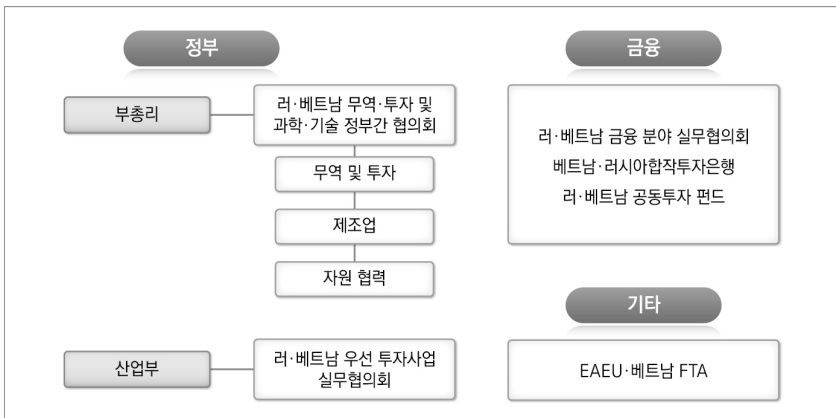
나.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 운영 현황, 역할

1) 구조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앞서 살펴본 러·독 경제협력 거버넌스와 달리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 정부간 대화는 부총리급인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¹⁷³⁾ ‘러·베트남 우선 투자사업 실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 간 금융 지원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와 러·베트남 공동투자 펀드 이외에 베트남·러시아합작투자은행(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림 4-1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료: 백용훈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1. 6); Vladimir Mazyrin 러시아과 학이카데미 극동연구소 아세안 센터장 비공개 발표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30, 러시아 모스크바);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 ике Вьетна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Вьетнам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Валдай»(2019. 2. 2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173)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는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협의회’의 하위 분 과로 운영되다가 2014년 독자적인 협의체로 분리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거버넌스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간에 체결한 FTA 협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및 역할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 협의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2011년 부총리 급으로 격상되어 진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간 협의회는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정부간 협의회는 양국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사업을 발굴해나가는 자리이다. 러·베트남 정부간 협의회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와 별도로 무역 및 투자, 제조업, 자원 협력 분야의 하위 분과 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2016년 이후 이 정부간 협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차 정부간 협의회는 2016년 9월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의 부총리가 참석했다. 양측은 FTA 발효 후 양국의 교역 환경 변화와 러·베트남 그리고 더 나아가 러·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¹⁷⁴⁾ 러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지원 의정서를 채택했으며, 그 결과 러시아 기업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GAZ, KAMAZ, Sollers 등의 러시아 자동차 기업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시장으로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¹⁷⁵⁾

제20차 정부간 협의회는 2017년 9월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었으며,

174)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2017. 9.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75) “Вьетнам отменит пошлины на ввоз автомобилей ГАЗ, КаМАЗ и “Соллерс” из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ЕАЭС - Вьетнам вступает в силу”(2016. 10. 5),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표 4-11.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 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주요 협의 사항

구조	운영	역할
- 1992년 정부간 협의회 구성 후 2011년 부총리 급으로 격상	- 1992~2018년 총 21회 진행 -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	- 양국 정부 관계자 참석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및 신사업 발굴
개최일자	주요 회의 내용	주요 분야
제19차 2016. 9. 21 상트페테르부르크	- 양국 부총리 참석 - EAEU·베트남 FTA 발효 후 양국의 교역 환경 분석 - 러·ASEAN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러시아산 자동차 부품 수입 및 베트남 내 조립 사업 제안	FTA, ASEAN
제20차 2017. 9. 9 베트남 호치민	- 양국 부총리 참석 - EAEU·베트남 FTA 발효 후 교역량 변화 분석 - 농산물 수출, 식품검역 인증 절차 간소화 논의	FTA, 농식품 검역
제21차 2018. 10. 19 러시아 모스크바	- 양국 부총리 참석 - 농업, 석유·가스, 디지털, AI,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농업, 석유·가스, 디지털

자료: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6. 9. 21); "Вьетнам отменит пошлины на ввоз автомобилей ГАЗ, КаМАЗ и "Соллерс" из России," DP.ru(2016. 3. 21);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ЕАЭС - Вьетнам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ТАСС(2016. 10. 5);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7. 9. 6); "Максим Аким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18. 10. 2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러시아 부총리와 베트남 부총리가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간 FTA 발효 후 진행된 첫 회의였으며, FTA 체결 이후 2017년 상반기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농산물의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관세와 식품 검역 인증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¹⁷⁶⁾

제21차 정부간 협의회는 2018년 10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려 러시아와 베트남 부총리가 참석했으며, 농업 분야 외 석유·가스, 디지털, AI,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¹⁷⁷⁾

176)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2017. 9.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표 4-12.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및 주요 협의 사항

구조	운영	역할
- 2014년 '러·베트남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정부간 협의회'에서 독자적인 협의체로 분리	- 현재까지 총 16회 진행 -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	- 양국의 중앙은행, 은행 및 금융기관 관계자 참석 - 양국간 결제 및 금융지원 완화 방안 모색
개최일자	주요 회의 내용	
제14차 2016. 8. 17~18 야로슬라블	- 양국 중앙은행 부총재, 금융기관 담당자 참석 - 러시아·베트남 은행간 거래 시 문제 논의 - 양국간 결제시스템 상호 연동 방안 모색 - 모스크바 거래소 루블/동 통화상 등록 방안 논의	
제15차 2017. 8. 22~23 베트남 푸꾸옥	- 양국 중앙은행 부총재, 금융기관 담당자 참석 - 양국 중앙은행간 MOU 체결 - 러시아 국제경제협력은행(IBC), 베트남 투자은행 간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 모스크바 거래소 루블/동 통화상 등록 및 거래 시작 - 다자금융기관 내 러시아·베트남 협력 방안 논의	
제16차 2018. 8. 28~2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양국 중앙은행 부총재, 금융기관 담당자 참석 - 러시아·베트남 은행간 협력 방안 논의 - 수출입거래 시 자국 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지불 시스템 통합 방안 모색	

자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 Вьетнам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анк России(2016. 8. 18); "Банк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Вьетнам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Банк России(2017. 8. 23); "О проведении 16-го засе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межбанков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Банк России(2018. 8. 29).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ьетнам,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는 2000년 러시아와 베트남 정부, 중앙은행의 주도로 러시아와 베트남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의 중앙은행이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6년 8월 17~18일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열린 제14차 '러·베트남 금융 분야 실무협의회'에는 양국 중앙은행 부총재를 비롯한 은행 및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은행간 거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

177) "Максим Аким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2018. 10.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표 4-13. '러·베트남 우선 투자사업 실무협의회'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2012년 러시아와 베트남 산업부가 양국의 우선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	-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 함 - 2014년 9월 마지막 회의	- 에너지, 항공, 경공업, 화학 등 21개 분야의 사업 촉진 도모

자료: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ьетна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안을 논의하고, 결제 시스템의 상호 연동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러시아와 베트남 통화의 직접거래 등록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¹⁷⁸⁾

15차 회의는 2017년 8월 22~23일 베트남에서 열렸으며, 주요 성과로는 양국 중앙은행간 MOU 체결과 러시아 국제경제협력은행(IBEC)과 베트남 투자은행 간 전략적 협력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양측은 은행간 협력, 러·베트남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러시아와 베트남 통화의 직접거래 등록 및 다자금융기관 내 러시아와 베트남 금융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¹⁷⁹⁾

표 4-14.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2006년 개소 -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과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이 공동 투자 및 설립 - 2015년 러시아 사무소 분산 매각	- 자본금은 1억 6,850만 달러 - 베트남에 5개 사무소, 러시아에 1개 사무소 운영	- 양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활동 지원

자료: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Вьетнамско-российский совместный банк(ВРБ);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Вьетнамско-российский совместный банк(ВРБ),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178)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 Вьетнам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79) "Банк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Вьетнам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2018월 8월 28~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16차 회의에서는 양국 중앙은행 부총재 이외에 양국의 금융 및 신용기관,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러시아 국제경제협력은행(IBEC), 러시아와 베트남 결제 시스템 업체, 모스크바 거래소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의 은행간 협력 문제를 논의했으며, 수출입거래 시 자국 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과 금융시장에서의 상호 협력과 지불 시스템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¹⁸⁰⁾

이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산업부는 양국의 우선 투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러·베트남 우선 투자사업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는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하며, 산업부 차관급 회의다. 우선 투자사업 실무협의회는 에너지, 항공, 경공업, 화학 등 21개 분야의 사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¹⁸¹⁾ 그러나 이 회의는 총 두 차례만 열렸고, 마지막 회의는 2014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와 베트남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은 금융지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러·베트남 공동투자펀드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했으며,¹⁸²⁾ 양국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협

표 4-15. ‘러·베트남 공동투자펀드’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2016년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베트남국가자본투자경영공사(SCIC)가 공동 설립	- 초기 자본금은 5억 달러 (각 2억 5,000만 달러 투자)	-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교역, 직접투자 참여 기업에 자금 지원

자료: 저자 작성.

180) “О проведении 16-го засе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межбанков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1)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2)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표 4-16. 'EAEU·베트남 FTA'의 구조·운영·역할

구조	운영	역할
- EAEU와 베트남 간 2015년 체결되어 2016년 발효됨	-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경제교류 시 상호 혜택 적용	- 러시아 기업은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 진출이 용이해짐 - EAEU 국가는 베트남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의 결과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과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이 공통 투자해 설립한 은행이다.¹⁸³⁾ 은행의 자본금은 1억 6,850만 달러 규모이며, 현재 베트남에 5개의 사무소와 러시아 모스크바에 1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2015년 러시아 사무소는 11명의 개인에게 분산 매각되었다.¹⁸⁴⁾ 이 합작투자 은행은 러·베트남 비즈니스협회의와 더불어 양국의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⁸⁵⁾ 또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예금업무, 대출업무, 카드업무, 국내외 송금업무, 외화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⁸⁶⁾

초창기 설립 단계에서 러시아의 VTB 은행은 러시아 내 베트남 교민들이 자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불법체류자, 사업 무허가 등의 문제로 비공식적인 송금을 선호해 해당 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했다.¹⁸⁷⁾

러·베트남 공동투자펀드는 2016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베트남 국가자본투자경영공사(SCIC)가 각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교역, 직접투자 참여 기업에 우선적으로

183)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4) "ВТБ продал банк «ВРБ Москва»"(2015.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6).

185)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6)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7) Vladimir Mazyrin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아세안센터장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 (2019. 10. 30, 모스크바).

표 4-17. 러·베트남 주요 거버넌스 구조·운영·역할

	무역투자협의회	금융협의회	투자협의회	합작은행	공동펀드	FTA
구조	- 1992년 정부 간협의회 구성 후 2011년 부총리 급으로 격상	- 2014년 무역·투자 정부간 협의회에서 독자적인 협의체로 분리	- 2012년 양국의 우선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	- 2006년 가스-러시아 대외 무역은행(VTB)와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공동 투자 및 설립 - 2015년 러시아 사무소 분산 매각	- 2016년 러시아직접 투자펀드와 베트남국가 자본투자경영공사(SCIC)가 공동 설립	- 2015년 5월 서명, 2016년 10월 발효
운영	- 1992-2018년 총21회 진행 -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	- 현재까지 총 16회 진행 - 연 1회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	-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 합의	- 자본금 1억 6,850만 달러 - 베트남에 5개 사무소, 러시아에 1개 사무소 운영	- 초기 자본금은 5억 달러(각 2억 5,000만 달러 투자)	-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적용
역할	- 양국 정부 관계자 참석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및 신사업 발굴	- 양국의 중앙은행, 은행 및 금융기관 종사자 참석 - 양국간 결제 및 금융지원 완화 방안 모색	- 에너지, 항공, 경공업, 화학 등 21개 분야의 사업 촉진 도모	- 양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활동 지원	-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교역, 직접투자 참여 기업에 자금 지원	- 러시아 기업은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 진출 용이 - 베트남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자료: 저자 작성.

자금을 지원한다.¹⁸⁸⁾ 2017년 러·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총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사업 20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러·베트남 공동투자펀드에서 5억 달러를 지원했다.¹⁸⁹⁾ 양국은 기존의 에너지 분야가 아닌 농업, 제약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188) “РФП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Вьетнама создают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латформ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89) “РФ и Вьетнам согласовали более 20 крупных совместных инвестпрограмм”(2017. 6. 29), 온라인 기사: “РФ и Вьетнам вложат \$500 млн в совместные несырьевые проекты”(2017. 6. 29),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16).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2015년 5월 29일 역외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 바로 베트남과의 FTA다. 카자흐스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측이 협정문에 서명했으며,¹⁹⁰⁾ 공식적으로 발효된 건 2016년 10월 5일이었다.¹⁹¹⁾ FTA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상품 분야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회원국에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¹⁹²⁾ 이 FTA 협정을 통해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은 베트남 시장, 더 넓게는 아세안 시장 진출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⁹³⁾

러시아와 베트남은 2015년 이 FTA 체결 이전에 약 6년간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15년 EAEU와 베트남 간 FTA 체결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EAEU에 국제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반면 베트남은 체결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터키와 베트남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으나, 시리아 문제 등 갈등이 많았던 터키보다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¹⁹⁴⁾

EAEU·베트남 간 FTA는 러시아에 유리하도록 체결되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¹⁹⁵⁾ 섬유, 의류, 쌀 등 베트남의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들에 대해 러시아는 국내 생산자 보호의 명목으로 베트남의 연간 최대 대러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AEU·베트남 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액은 2016년 대비 2017년 약 3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190)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2016a), p. 5.

191) Федоров Н. В.(2017), p. 69.

192)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2016a), p.10.

193)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2016b), pp. 3-5.

194) Vladimir Mazyrin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아세안센터장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 (2019. 10. 30, 모스크바).

195) 위의 자료.

의 경제제재와 저유가의 결과로 2016년은 러시아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시기이며, 2017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무역액 증가가 단순히 FTA 효과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¹⁹⁶⁾

5. 요약 및 함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총리회담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메커니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총리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정부 부처가 활발하게 교류하며 부총리급, 장·차관급, 국장급 실무회담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성과 점검, 문제점 확인, 향후 협력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은 아직 그 활동이나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대러 금융 제재에 대한 대응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러시아와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정부간 협의를 통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보호·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등 대러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러 비즈니스 협의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중·러는 구소련 시기부터 이어진 오랜 경제·외교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구축한 풍부한 인력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의 빈번한 정상간 회담을 통해 맺은 깊은 친밀감과 공감대를 토대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¹⁹⁷⁾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감시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문화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최근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

196) 위의 자료.

197) Wang Jinzhao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부장 면담 내용(2019. 10. 28. 베이징).

쳐 공공기관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정부간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공동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호응해 일본의 민간 협의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대리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의 제안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민간 거버넌스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간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무역경제위원회’와 경단련 ‘일·러 NIS 경제위원회’ 등 다양한 민관기구가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감시비용을 낮추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일·러 무역투자촉진기구와 (사)러시아·NIS 무역회는 컨설팅, 포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함으로써 탐색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정부 거버넌스와 민간 거버넌스 체계는 전반적으로 감시비용과 탐색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 국면에서 독일 기업의 거래비용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거래가 위축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제재 상황에 적응하면서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덕분에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은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의 이러한 유대관계는 정부간 대화 채널과는 별개로 양국 정상간의 꾸준한 교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슈뢰더 전 총리, 메르켈 총리와 꾸준히 만남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교류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심에는 러·독 상공회의소가 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러시아 시장 진출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러·독 상공회의소는 거래비용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을 낮추는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체로 중국과 유사하게 국가 주도의 경제협력 구조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 소련 시대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소련과 오랫동안 동맹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상호 신뢰가 깊은 편이다. 특히 베트남은 러시아와 금융 분야 협력, 즉 합작투자 은행 설립 등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이 FTA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민간 기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과 러시아의 경제협력도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비용 증가가 거래를 제약한다는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대외경제협력을 제약하는 거래비용을 감시비용과 탐색비용으로 구분해보면,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협력에서 탐색비용은 원천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와 베트남은 결제 시스템, 송금 등 계약 이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계를 구축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있는 중이다. 결국 양국은 감시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 지원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가. 박근혜 정부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¹⁹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교통·에너지·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하나의 대륙’, 국제적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창조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 기초한 ‘평화의 대륙’이라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¹⁹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러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다시 한 번 대러 경제협력을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시켰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을 크게 제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추동력을 제공했다. 둘째, 대러와 대북 경제협력을 상호 연계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산업 다각화,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 등에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함께 새로운 시장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북한의 국제협력 참여를 유도해 남·북관계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셋째, 러시아를 비롯한 탈 소비에트 국가들을 협의(狹義)의 ‘유라시아’ 개념으로 묶으면서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를 천명했다. 다시 말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탈 소비에트 국가들을 이른바 ‘유라시아’

19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문(全文)과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참고.

199) 제성훈(2014), pp. 86~87.

국가들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협력 확대 의지를 구체화하고, 동시에 동북아의 중견국에서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주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적 지향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정부는 대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특히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첫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을 확정하고, 2015년 2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의·조정기구인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²⁰⁰⁾ 둘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했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합의하고,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직접투자펀드(5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스베르뱅크(Sberbank)(기설정분 7억 달러 포함 15억 달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²⁰¹⁾ 이후 2015년 12월 양국 정부 및 금융기관 4자 협의체 형식의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²⁰²⁾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극동개발부 차관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회의를 열어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²⁰³⁾ 셋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착수했다. 2013년 11월 서울에서 60일간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듬해 1월 1일 발효되었다.²⁰⁴⁾ 또한

200) 기획재정부(b),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1. 3).

201) 이진(2015), pp. 81~85; 「한-러 30억달러 금융지원 협력, 어디다 쓰나」(2013.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5).

202)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 내년 2월부터 운영」(2015. 1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5).

203) 「정부, 러시아 정부정책 결정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2016. 3.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3).

204)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2013. 12. 3),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1. 3).

2015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그 이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2016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가 민간 공동연구 최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체계 마련 및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3년 말부터 나타난 일련의 대외적 장애요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첫째, 미·러 갈등은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대외정책의 자율성까지 제한했다.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이 아님에도 한국정부와 민간이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우려하여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마저 꺼리게 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러 수출기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조 6,70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2014년 2조 600억 원, 2015년 8,100억 원, 2016년 6,400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²⁰⁵⁾ 또한 미·러 갈등으로 인한 러·중 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입지를 제고하고 미·일 동맹을 자극하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립구도(북·중·러 대 한·미·일)를 심화시켰다.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도 2016년 7월에 있었던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을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MD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²⁰⁶⁾ 둘째, 2014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대러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05) 「정재호 의원 “한러 경제협력 금융지원 확대해야”」(2017. 7.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5).

206) “Заявление МИД России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о размещ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더해 서방의 경제제재와 중첩된 유가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거시경제지표 악화, 루블화 가치 하락,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소비 수요 하락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상황 악화를 가속시켰다.²⁰⁷⁾ 러시아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 탈 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 극동지역 개발, 경제현대화 정책 수행,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고 경제주체들이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미 대러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한국정부와 민간의 관심은 크게 식어버리고 말았다. 셋째, 북·미 갈등과 남·북관계 경색이 고착화된 가운데,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제이자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 2013년 11월부터 5.24 조치를 우회하는 한국기업 컨소시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시험에 따른 UN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경제제재 단행 등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이고, 남·북·러 3자 경제협력 자체를 무산시켰다.²⁰⁸⁾

이러한 대외적 장애요인과 함께 대내적 장애요인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가로막았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적 어젠다임에도 일관된 체계와 통합적 추진 전략 없이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주도의 다양한 조직 체계가 난립했고, 사업은 분산적으로 추진되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은 작성 시부터 거의 모든 제안을 상향식(bottom-up)으로 제한 없이 수용

207)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2016), pp. 97~98.

208)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교류지원협회, 전략물자관리원(2018) 참고.

함으로써 매우 많고 다양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과제의 선택적 추진이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각 부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조정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 이 핵심 기구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첫째, 정부 내에 해당 어젠다를 온전히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이 부재했고, 둘째, 특정 부처 또는 일부 부처의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셋째, 해당 어젠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업까지 계획과 성과에 포함시키면서 실적 부풀리기가 가능했고, 넷째, 정부 예산 및 민간 재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다섯째, 대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과제를 이행하기보다는 양해각서 체결, 일회성 행사 등을 남발했고, 여섯째, 국가적 어젠다로서 독자적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갖는 별도의 조직체계,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대내적 장애요인은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나. 문재인 정부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발표된 지 불과 3년 반 만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적 어젠다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 추진을 천명하면서 대러 경제협력 확대의 새로운 불씨가 당겨졌다.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3차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 또한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신북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²⁰⁹⁾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인 극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하여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한 분야별 과제로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이른바 ‘9-Bridge’(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분야)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당시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치,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조성 등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하는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와는 달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서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²¹⁰⁾이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고, 8월 28일 여당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이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효율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간 협력체계, FTA, 다자협력 등 제도적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양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상공인 사이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지방협력포럼을 2018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보다 견

209)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210)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고하고 영속적인 북방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FTA의 조속한 추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을 비롯한 다자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 합의되었는데,²¹¹⁾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첫째, 교역 및 인적교류 증대와 관련한 사안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연 3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4년 258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과 루블화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15년 159억 9,000만 달러, 2016년 134억 1,000만 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전년 대비 41.3% 증가한 189억 5,000만 달러, 2018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248억 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인 2014년 수준에 근접해 있어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¹²⁾ 인적교류 역시 2015년 34만 명, 2016년 43만 명, 2017년 55만 명, 2018년 역대 최대인 약 69만 5,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²¹³⁾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19년 2월 2차 한·러 협의회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양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²¹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문제다. 양국은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철도 연결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및 공동

211) 「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 공동언론발표」, 온라인 자료: 「文대통령·푸틴, 한·유라시아 FTA 추진…교역액 年300억 달러로」(2017. 9. 6),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8).

212) 「2018 한-러 교역동향」(2019. 1. 21),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1. 8).

213)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2019. 6.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214) 「제2차 한-러 협의회 개최 결과」(2019. 2.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연구 수행,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 수행 등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전력은 러시아의 로세티(ROSSETI)와 한·러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고,²¹⁵⁾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²¹⁶⁾ 또한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철도 및 물류분야 사업 공동개발, 남·북·러 3자 프로젝트 추진에 대비한 공동연구, 해외시장 및 제3국에서의 협력 추진 등에 합의했다.²¹⁷⁾ 이에 따라 당시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²¹⁸⁾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철도·전력·가스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주요 사업 구상 가운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¹⁹⁾

셋째, FTA 체결과 관련한 안건이다. 양국은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하고, EEC(유라시아 경제위원회)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가 한·EAEU FTA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²²⁰⁾ 이는 양자간

215) 「한전, '한-러 전력계통 연결' 추진...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순항」(2018.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8).

216) 「신북방 경제협력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2018. 6.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17) 「한러, 철도사업 공동개발·FTA 협상절차 추진 등 MOU 19건 체결」(2018.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218) 「[전문]한국-러시아 공동성명...」남북러 철도 연결 공동연구」(2018.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219) 「文대통령 “남북러 3각협력, 철도연결이 추진 가능성 가장 커”(종합)」(2018.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이견으로 단기간에 한·EAEU FTA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FTA 체결을 통해 EAEU와 상품 분야를 포함한 FTA 체결의 추동력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넷째, 금융지원과 관련한 사안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11월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용자 플랫폼 조성에 합의하고, 2016년 3월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까지 개최했다. 그렇지만 투·용자 성공사례가 단 한 건도 창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롭게 마련된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FEDF)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는 지역적으로는 신규 개발 수요가 집중된 극동에 초점을 맞추고, 정기적 협의 채널 마련, 극동개발펀드를 통한 러시아 정부(특히 극동개발부,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²²¹⁾

다섯째, 대러 투자 증대와 관련한 문제다. 양국은 극동 지방정부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정례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에 합의했다. 2018년 11월 포항에서 한국 측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측 극동 연방관구 9개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는데, 무역상담회를 통해 총 434만 3,000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410만 달러 규모의 협약 3건이 체결되었다.²²²⁾ 이어서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2차 포럼이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울산에서 3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9월 체결된 KOTRA와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18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부

220)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21) 「한-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22) 「한-러 지방협력포럼 폐막...양국 지방협력 발판 마련」(2018.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총리가 참석하여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2차 한국 투자자의 날이 개최되었다. 또한 2019년 9월 서울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KOTRA, 한국무역협회,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이 주최하는 3차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개별 면담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30여 개 주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 러시아 측에서는 항만 개발·운영 분야의 베르쿠트(BERKUT), 물류·운송 분야의 페스코(FESCO), 전력 발전·배전 분야의 로세티 등이 참여했다.²²³⁾ 이와 함께 KOTRA는 2017년 9월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²²⁴⁾ 한국투자지원센터는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서만 운영(2008년 3월 개소)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정례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증대와 더불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직면했던 대내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신북방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한·러 경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23) 「한국 투자자의 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24) 「코트라, 러시아 현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오픈」(2017. 1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가. 현황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는 크게 ①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 ② 한·러 민·관(1.5트랙)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 ③ 한·러 양자간 금융지원체계 ④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는 다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그리고 이를 제외한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경제협력 현안을 조정하는 가장 고위급의 협의체다. 1992년 11월 양국이 경제협력 관련 부총리급 최고협의체 설치에 합의한 후, 1997년 7월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모스크바에서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이며, 산하에 15개 분과위원회와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18차 회의의 경우, 한국 측에서 15개 부처 및 기관, 러시아 측에서 14개 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석했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1990년 12월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1991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3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모스크바에서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11, 12차) 또는 차관(13차),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교육과학부 국장(11, 12차) 또는 과학고등교육부 차관(13차)이다. 13차 회의부터 양측 수석대표가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표 5-1.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 위원회	- 기획재정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 주관 - 양국간 가장 고위급 경제협력협의체 -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 협의, 분야별 경제협력 현안 조정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러시아 교육과학부 주관 - 과학기술협력 현안 논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러시아 로스아톰(Rosatom) 주관 -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원자력기술협력 증진 방안 논의
극동·시베리아 분과 위원회	- 외교부, 러시아 극동개발부 주관 - 극동·시베리아에서 교역, 투자 분야 협력 증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논의
환경협력공동위원회	- 환경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주관 - 환경협력 논의
산업협력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산업통상부 주관 -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자원협력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에너지부 주관 -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
교통협력회의	- 국토교통부, 러시아 교통부 주관 - 철도, 항만, 항공 분야 협력 논의
(교통협력소위원회)	- 교통협력회의 하부 항만, 항공 분야 협력 논의
(철도협력회의)	- 교통협력회의 하부 철도 분야 협력 논의
농업협력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 농업부 주관 - 농업 분야 협력 방안, 교류 증진 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 논의
어업위원회	- 해양수산부, 러시아 수산청 주관 - 러시아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여획쿼터와 조업조건 협의
해운회담	- 해양수산부 주관 - 해운 활동의 자유 보장, 해운 분야 협력 방안 및 해운산업 발전 방안 논의
IU어업방지협정 이행실무회의	- 해양수산부 주관 -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방안 논의
중소기업실무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중소기업정책 정보 교환,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 방안 및 중소기업협력 MOU 체결 논의
세관협력회의 (관세청장회의)	- 관세청, 러시아 관세청 주관 - 통관 애로사항 해소 방안, 밀수 및 부정무역 단속 협력 방안 논의, 관세행정 자료 교환
산림협력위원회	- 산림청, 러시아 산림청 주관 - 산림투자 논의, 산불 및 병해충 방지정책 정보 교환
양자통계협력회의	- 통계청, 러시아 통계청 주관 - 통계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자료: 외교부(2018), p. 147.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1990년 1월 체결한 한국 과학기술부와 러시아 원자력부 간 원자력의정서, 한·러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양국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와 원자력기술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1991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서울에서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 연구정책관,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로스아톰(Rosatom) 혁신기술 부국장이다.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극동·시베리아에서 교역, 투자 분야 협력 증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02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모스크바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극동개발부 차관이다.

환경협력공동위원회는 1994년 체결한 한·러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양국간 환경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1995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했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단 2015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대신 2016년에 두 번(2, 12월) 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1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국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9, 10, 11, 13차) 또는 국제협력국 부국장(12차)이다.

산업협력위원회는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설치되었으며, 양국간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최근에는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9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7차) 또는 통상 차관보(8, 9차),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산업통상부 부국장(7차) 또는 산업통상부 차관(8, 9차)이다. 8차 회의부터 수석대표가 차관보 또는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자원협력위원회는 1992년 5월 양국간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 약정 체결

후 설치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교역·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5년 6월 모스크바에서 14차 회의, 2018년 2월 서울에서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14차) 또는 에너지자원실장(15차),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에너지부 차관이다.

교통협력회의는 양국간 철도, 항만, 항공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4년 7월 소치에서 3차 회의, 2015년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소위원회로 교통협력소위원회, 철도협력회의를 두고 있다. 항만, 항공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교통협력소위원회는 최근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철도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철도협력회의는 2014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교통부 차관이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2년 정부간 농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 교류 증진 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3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2015년 5월 2차 회의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농업부 국제협력국장이다.

어업위원회는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협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매년 회의를 통해 러시아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어획쿼터와 조업조건을 협의한다. 23차 회의의 경우 명태 어획쿼터 입어료를 확정하지 못해 추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2019년 4월 모스크바에서 28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또는 국제원양정책관(23차 추가회의 한정),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수산청장 또는 부청장(24차 한정), 국제협력국장(23차 추가회의 한정)이다. 해운회담은 양국간 해운활동의 자유 보장, 해운 분야 협력 방안 및 해운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방지협정 이행실무회의는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또한 중소기업실무위원회는 양국간 중소기업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 방안 및 중소기업협력 MOU 체결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상 3개의 분과위원회의 경우 최근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관협력회의는 통관 애로사항 해소 방안, 밀수 및 부정무역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관세행정 자료를 교환하는 협의체다. 또한 관세청장회의 역시 1992년 11월 한·러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협정에 입각하여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서 2012년 11월 모스크바에서 11차 회의,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림협력위원회는 산림투자를 논의하고, 산불 및 병해충 방지정책 정보를 교환하는 협의체로서 2006년 한·러 임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1월 대전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한 후, 4년 만인 2018년 4월 서울에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산림청장(4차) 또는 차장(5차),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산림청 부청장이다.

양자통계협력회의는 양국간 통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1995년 9월 양자통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양국간 통계 협력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201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공동위를 계기로 양측 대표가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5월 모스크바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 통계청 차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통계청 부청장이다.

한편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는 다음과 같다. 한·러 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부간 주요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함께 논의한다. 따라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 러시아 측 수석

표 5-2. 공동위 외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

한·러 정책협의회	- 외교부, 러시아 외무부 주관 - 외교부간 주요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논의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	- 기획재정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주관 - 경제협력 및 상호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 한·러 투·융자 플랫폼 활용 방안 논의
한·러 협의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 주관 - 9-Bridge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 모색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주관 - 기술협력, 창업·벤처기업 지원협력 논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 외교부 주관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러시아의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자료: 박정호 외(2018), p. 130, p. 134; 『한·러 협의회 출범...9-브릿지 사업 협약채널 기동』(2018. 3.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 5. 18), 『제18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검색일: 2019. 11. 8).

대표는 외교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이다. 199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18일 모스크바에서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는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14차 공동위 합의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및 상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지원 방식,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 양국의 관심 사업,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단일 창구 개설 등을 논의했으나,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경제개발부 차관이다.

한·러 협의회는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Bridge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조직한 한·러 간 협의 채널이다. 따라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이다. 2018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차 회의, 2019년 2월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는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혁신 플랫폼 구축 MOU에 근거하여 양국간 기술협력, 창업·벤처기업 지원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4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1차 회의를 시작한 협의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경제개발부 차관이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러시아의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다. 2018년 11월 포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러 민관(1.5트랙)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는 다음과 같다.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는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며, 양국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협력협의체다. 200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8차 회의부터는 동방경제포럼과 연계

표 5-3. 한·러 민관(1.5트랙)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 참여
한·러 비즈니스포럼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 참여
한·러 대화(KRD)	- 한·러 대화 사무국 주관 - 러·독 대화를 모델로 하여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
한·러 극동포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관 -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전문가 참여 -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방안 논의
한·러 기업협의회	-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운영 지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후원 -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 러시아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대표 참여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주관, 한국 농림축산부, 러시아 농업부 후원 -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및 러시아 극동투자유치를 위한 농업기업간 교류

자료: 저자 작성.

하여 진행하는 등 협의체보다는 행사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하여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한·러 비즈니스포럼도 있다.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최근에는 2018년 6월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다.

한·러 대화(KRD)는 러·독 대화를 모델로 하여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이다. 사무국과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주로 한국의 러시아 연구자들, 러시아의 한국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2010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0~11월 2차 회의 이후 2년 만인 2013년 11월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포지엄 등으로 대체되었다가, 2018년 6월 모스크바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러 극동포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주관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로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2011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으며, 2019년 6월 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한국 기업들의 협의체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측 인사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양자간 협의체는 아니다. 2018년 4월, 11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2019년 6월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전체회의(운영 방안 논의, 현지 진출 정보 세미나, 러시아 지방정부의 투자설명회 등)와 분과회의(기간제조, 첨단제조, 유통·물류·소비재, 에너지·인프라·금융)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이 주관하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러시아 농업부가 후원하는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는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및 러시아 극동 투자 유치를 위한 농업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러 양자간 금융지원체계로는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총 3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공동 발굴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직접투자펀드(5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스베르뱅크(Sverbank)(기설정분 7억 달러 포함 15억 달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2월 양국 정부 및 금융기관 4자 협의체 형식의 투·융자 플랫폼 실무회의,²²⁵⁾ 2016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극동개발부 차관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면서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확대를 모색했지만²²⁶⁾ 아직까지 성공사례를 창출하지 못했다.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FEDF) 간 20억 달러 규모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가 조성되었다. 이는 러시아 극동

표 5-4. 한·러 양자간 금융지원체계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 한국수출입은행-러시아 대외경제은행(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러시아 직접투자펀드(5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스베르뱅크(15억 달러) 참여 - 2013년 11월 합의, 2015년 12월 투·융자 플랫폼 실무회의, 2016년 3월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 한국수출입은행-러시아 극동개발기금(20억 달러) 참여 - 2017년 9월 합의 - 2017년 12월 정례협의회 1차 회의

자료: 저자 작성.

225)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 내년 2월부터 운영」(2015. 1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5).

226) 「정부, 러시아 정부정책 결정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2016. 3.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3).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12월에 정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중에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지 외교공관, KOTRA 무역관 및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8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북방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북방경제 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 성과 점검, 북방경제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협력 지원,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위원장, 당연직위원 5인(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민간위원 23명, 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러 협의회, 9-Bridge 행동계획 추진실무그룹 등을 통해 러시아 측과의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6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지 외교공관은 대러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표 5-5.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17년 8월 설치 - 위원장, 당연직위원, 민간위원, 지원단 등으로 구성 - 한·러 협의회, 9-Bridge 행동계획 추진실무그룹 운영
현지 외교공관	- 모스크바 대사관 -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KOTRA 무역관	-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KOTRA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 2008년 3월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개소 - 201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개소

자료: 저자 작성.

국은 1990년 9월 30일 러시아(당시 소련)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후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1992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 2006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008년 1월 이르쿠츠크에 차례로 총영사관을 설치했으며 2007년 7월에는 사할린 주에 위치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출장소를 개소했다. 이러한 현지 외교공관은 양국 정부간 상설적인 채널로서 상호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애로사항 해결,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²²⁷⁾

KOTRA 무역관은 해외시장조사 대행, 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현지 투자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러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KOTRA는 한·러 수교 이전인 1989년 모스크바에 무역관을 설치한 이후, 1992년 블라디보스토크, 2005년 노보시비르스크, 20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례로 무역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현지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국에 KOTRA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지 진출 관련 정보 제공, 기업 활동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KOTRA는 2008년 3월 모스크바, 201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은 2019년 9~11월 4년 이상 대러 경제협력 실무 또는 연구에 종사한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 첫째,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

227) 제성훈 외(2014), p. 137.

가 있는 협의체로는 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러 협의회외의 경우 부총리가 주재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논의 내용이 유사하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가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러 협의회가 구성상 차별성을 갖기도 어려우며, 공동위와 산하 여러 분과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를 산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존속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 측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의 경우, 과거 외교와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던 시기와 달리, 2013년 3월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그 이후에는 외교부가 경제협력에 대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역할이 다소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다른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며,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산업협력위원회, 중소기업실무위원회,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와 관련해서는 산업협력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협력의 수요가 더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목표와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 채널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논의사항이 유사한 협의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 파트너의 피로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러 경제협력 전반에 걸쳐 기여도가 가장 높은(또는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로는 부총리급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등이 선정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협의체로는 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양자통계협력회의 등이 언급되었다. 과학기술공동위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위상 자체가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조정하는 가장 고위급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 산출 여부와 동시에 양국간 해당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러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양국 외교부간 협력 채널로서 고유한 역할과 기여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한·러 협의회와 경제협력 기여도에 대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진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방협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 전반에 걸쳐 기여도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협의할 의제가 명확하지 않고 논의 내용도 다른 협의체와 중복되어 경제협력에 특별히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한·러 협의회와 위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으며, 양자통계협력회의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해 해당 분야 협의체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기여도를 낮게 평가했다.

셋째,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또는 운영상 개선이 필요 없는) 협의체로는 어업위원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산되었으나, 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어업위원회의 경우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협

의라는 고유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업협력위원회는 각각 시의 적절하게 과학기술협력과 산업협력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협력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러 협의회는 경우 경제과학기술공동위는 물론이고 그 산하에 있는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의 역할과 중복되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러 협의회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더 이상 통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부처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새로 설립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로는 문화교류 및 관광은 물론, 역사 공동연구 및 유적 공동탐사 등을 논의하는 문화협력위원회,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EAEU와의 경제협력 협의채널로서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이 제안되었다.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첫째,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로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와 한·러 비즈니스포럼의 경우 두 협의체의 역할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효율성과 연속성 있게 진행할 때 러시아 측의 인지도와 집중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 KOTRA가 운영 지원을 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하는 협의체로서 러시아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한·러 기업협의회, 외교부가 주관하며 양국 지방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대규모 협의체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러 대화의 경우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젠더와 참석자 구성에 큰 변화가 없고 러시아 측의 관심도 현저하게 낮아져 해

가 갈수록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 및 구성, 운영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로는 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이 지적되었다. 한·러 대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직 및 관리의 효율성, 참석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주도로 분야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1.5트랙) 협의체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와 한·러 비즈니스포럼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고려, 러시아 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러 기업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경우 러시아 측 참가자를 러시아 극동의 지방정부 대표자로 한정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요가 많은 러시아 중부 및 북서부 지방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한·러 극동포럼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여러 연구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회의들을 포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대규모 회의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양국 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이와 유사한 회의들이 지나치게 많은 학계 인사들, 변하지 않는 러시아 측 참석자들로 인해 원론적인 의견 교환만 반복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셋째, 새로 설립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로는 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

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이 언급되었다. 한·러 전략대화와 한·러 전문가포럼은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주도 아래 각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이 분야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는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역량 강화와 수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술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양국의 관련 민간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안되었다.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거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제로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3년 11월 조성에 합의한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이 단 한 건의 투·융자 성공사례도 창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 마련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의 경우도 대상지역과 규모만 축소되었을 뿐,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체계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대러 경제제재 대상 분야가 한정적임에도 금융 지원체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새로 설립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로는 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이 언급되었다. 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지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로서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대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KOTRA 무역관을 러시아의 다른 거점도시에 추가 개소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본고는 한국의 대외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거래비용은 감시비용 그 자체보다 탐색비용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에 더욱 그렇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미국의 단일패권 견제 및 다극체제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대외경제 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내적 과제(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량 강화와 상호간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 등)와 대외적 과제(대외경제협력 채널 구축과 내실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 기업인 협의체, 국제포럼 활용 등)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 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처간 비효율적인 경쟁 구도, 수직적 관료 행정체계, 제도적 노후 부족,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감시비용뿐 아니라 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임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비참여국임에도 사실상 제재의 틀 속에 있는 한국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인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한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소련의 동맹국이었으며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서의 특질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에는 이러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 있었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 참여자이자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하며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과 북극 에너지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의 틀 속에 있으면서 북방 4개 섬 문제라는 제약을 넘어 일본이 러시아와 어떻게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동맹과 냉랭한 대북 대결구도라는 제약 속에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한국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국의 대러 정책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역할과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 달러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자국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민관 지원기관인(사)러시아 NIS 무역회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러시아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특히 페테르부르크 대화의 출범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독일과 러시아 지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유대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 등 러시아의 정치체제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이런 독일의 경험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 FTA 체결로 양국 교역 규모가 2017년 기준 대략 30%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러시아 농산물의 대베트남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러시아간 FTA 체결을 포함해 한·러시아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3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의 고위급 인사는 러시아가 주최하는 주요 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4개국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서 저마다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데 최고 지도자간의 빈번한 만남을 통한 긴밀한 상호 유대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지속, 미·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러 관계의 경색, 북·미 갈등과 남·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의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할 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위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됐다.

2. 정책 제언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기본 목적을 두었다. 특히 14개 북방경제협력 대상국 중에서 러시아 사례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시의적인 측면과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반기를 넘어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점에서 나머지 2년여의 기간에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재점검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북방지역 전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미래 국가전략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한·러 관계 발전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양국간 교역 규모가 다소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따라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한·러 협력 2.0’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필수적 현안과제이다. 앞 장에서 제시된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재편 작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러시아는 의회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행정부의 권한, 행정부에서의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경제논리에 앞서는 정치논리, 재계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통제가 존재하는 국가인바, 국가 지도자 및 정부간 차원의 협상 및 협의체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인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으로 민영화된 다수의 대기업도 공기업의 지분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²²⁸⁾ 이런 점에서 볼 때,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협의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간 협의체에 대한 혁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 협의체인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참고하여 최상위의 한러 정부간 협의체로 한·러 총리회담을 신설 및 정례화하고,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해당 회담의 준비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가 전체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장 높은 정부간 협의체로 총리회담을 정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총리회담을 준비하고 장기적·전략적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중·러 총리회담 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for Regular Meetings Between the

228) 제성훈 외(2014), p. 234.

Chinese and Russian Heads of Government)’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부총리급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독일, 일본 등이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러 간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총리 회담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러의 경우 2012년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25차례가 넘는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2014년 G7 국가 정상이 보이콧했음에도 소치 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석했으며, 동방경제포럼에도 2016년 이래 매년 주빈으로 참가하고 있다.

둘째, 총리회담, 부총리급 또는 장관급이 수석대표가 되는 분과위원회, 국장급이 수석대표가 되는 실무그룹 등 양자 협의 채널을 3단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별로 대러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상향식으로 보고하고 다시 하향식으로 합의사항을 전달하여 실행하는 ‘피라미드형 체계’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정부부처는 러시아 측 파트너가 둘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대러 협의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장급 실무그룹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 분산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안고 있는 의사결정 주체의 모호함과 중복된 역할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위 정책결정권자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욱 바람직하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 채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논의사항이 유사한 협의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 파트너의 피로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총리회담을 정부간 경제협력 분야의 가장 고위급 협의채널로

정점에 두고 산하에 5개의 부총리급 위원회, 22개의 장·차관급 소위원회와 다수의 실무 워킹그룹이 배치된 피라미드 형태로 거버넌스가 조직되어 있다. 이 워킹그룹, 소위원회, 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러시아 파트너 기관과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협력 전략과 과제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면 총리회담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각 정부부처의 대리 경제협력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양국간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차기 회의를 준비하는 '상설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민관(1.5트랙) 또는 민간 경제협력협의체도 이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이는 양국간 논의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며, 특히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상설 공동사무국은 신설되는 총리회담을 보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설치된 모든 협의체에 대한 전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러시아 측과 상호 신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핵심 목적 또는 담당 역할이 모호하거나 수년째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는 협의체가 존재한다면, 이 기구를 과감하게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러 대화는 민간 분야의 거버넌스 공공 부문에서 분야별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러·독 공공포럼 '페테르부르크 대화'를 모델로 삼아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위상이나 현실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2000년 당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제안으로 출범한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연 1회 약 3일간 세미나 형식으로 러시아와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2001년부터 2014년을 제

외하고는 매년 진행되었다. 또 별도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의료 등의 분야를 다루는 민간 분야의 다방면 양자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포럼을 통해 사회·정치·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상호 협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협력위원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학술협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EAEU 산업통상협력위원회 또는 한·EAEU 산업통상협력 실무그룹 등을 신설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에 있어 정부부처의 중심적인 역할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철저히 민간의 실질 수요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과 법률 등 비즈니스 진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며,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민관(1.5트랙)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개편 및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러 비즈니스포럼의 별도 개최를 중단하고,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로 일원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 한·러 기업협의회를 연계시켜 해당 협의회의 회원사가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경우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논의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의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이원화하고, 참가자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

시 말해 지방협력포럼을 외교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간 회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방 소재 기업간 회의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측 참가자를 러시아 극동의 지방정부 및 기업 대표로 한정하지 말고, 중앙정부 및 서부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방협력포럼이 회의만 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지방정부인 바이에른 주정부가 주소속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도모 및 지원을 목표로 러시아 연방정부와 주최해온 ‘러·바이에른주 경제지원실무협의회’를 참고해 보다 창의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대화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 이 민간 대화 채널이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 및 관리의 효율성, 한국과 러시아 참석자의 범위 및 전문성, 실질적 영향력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 지도부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로서의 역할이 미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섭외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주도하에서 해당 분야 민관(1.5트랙) 전문가들이 분야별 협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한·러 전략대화 또는 전문가 포럼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넷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이슈, 즉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 작업일 뿐 아니라, 한·러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2019년 4월에 기술기업간 협의체로 발족시킨 ‘일·러 기술기업 및 투자자 협회’와 2018년 2월 일본기업의 러시아 극동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설립한 ‘일·러 조

인트벤처'를 모델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30여 개 이상의 일본과 러시아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일·러 기술기업 및 투자자 협회는 러시아 벤처 펀드인 Pulsar VC와 러·일 컨설팅 기업 SAMI, 일본 기업 Skylight 컨설팅이 공동 설립했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양국 기술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러 조인트벤처'는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FEIA), 국제협력은행(JBIC), 극동바이칼지역 개발펀드(FDEF)가 공동으로 투자했으며, 정보 제공·사업기획·주정부 기관과의 소통 등 투자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일본 투자자를 위한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주도 아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사례를 참고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보다 많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신규 진출을 지원하는 문제도 무척 중요하다. 그렇지만 러시아 시장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독일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서 러·독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참고해 한·러 상공회의소와 같은 양국 상공회의소간 상설적인 경제협력 협의체 설립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OTRA의 경우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러시아 기업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상호 연결해주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과 러시아의 상공회의소는 각각 자국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협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한·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서울, 모스크바 등 양국의 주요 도시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다면 양국 기업들이 보다 쉽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상공회

의소가 공동으로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한·러 투·융자 플랫폼 등 기존 금융지원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이 쉽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금융지원체계 마련을 단순히 MOU 체결 실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201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이 2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는 확실한 성공사례를 반드시 창출해야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러시아 측의 신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왔던 독자적이고 특별한 기준에 따라 융자,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금의 설치도 조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장 큰 규모의 협력기금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과 같은 소규모 협력기금을 먼저 조성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4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 또는 공동펀드, 투자펀드가 지역별 및 분야별로 활성화되면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정부간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협의체를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러독 경제금융전략 실무협의체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금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를 보면 금융협력을 통한 기금의 규모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펀드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부 지역 개발, 첨단

기술 분야, 중소기업 협력,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투자협력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앞서 [표 4-2]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지만 중·러 간 주요 투자펀드만 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야별로는 농산업, 나노 연구 개발 및 과학기술 혁신, 지역위안화 등 11개에 이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협력펀드인 ‘중·러 투자펀드(RCIF: Russia-China Investment Fund)’의 경우 2012년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중국투자공사(CIC)가 각각 10억 달러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이 투자펀드는 아무르강 철교 건설 사업,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NIO, 우라늄 채굴 프로젝트, 러시아 Tushino 프로젝트 과학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2015년에 130억 루블 규모로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가 조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지역 위안화 펀드’가 설립돼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및 극동·중국 동북부 지역의 중요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투자펀드는 더욱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본다면 한국 금융협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라.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 현지에서 여러 한국 기관들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KOTRA 무역관을 비롯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사 또는 대표부들은 그 역할이 상호보완적이다. 하지만 이 현지 기관들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기대만큼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는 러시아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종종 지적되었다. 따라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사 또는 대표부 간 업무 협조를 원활화하면서 고객에게 이른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기적 지원체계로서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Business Center의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사 또는 대표부를 집중 배치한다. 둘째, 고객 상담창구 일원화와 통합기획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러시아 시장 진출 초기에 있거나 현지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건물 내 업무공간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해외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K-Business Center 차원에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조직 내에 K-Business Center 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K-Business Center 네트워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4년부터 일본과 러시아 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표로 일본 외무성이 1994년부터 러시아 내에 설립한 ‘일본센터(Japan Center)’와 독일의 해외 상공회의소를 관할하는 독일 상공회의소연합(DIHK)이 별도의 독립 법인(DEinternational)을 만들어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독일경제정보센터를 각각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러시아 내 모스크바를 비롯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주요 6개 도시에 설립한 ‘일본센터(Japan Center)’는 인재 발굴과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 이외에도 제도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분쟁 처리 지원 등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센터는 일·러 무역투자촉진기구의 일본 측 지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의 8개 항 협력 구상의 하나인 중소기업 교류 및 협력 확대 부문 책임기관으로서 일본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양국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매칭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일·러 무역투자촉진기구의 일본 측 구성을 보면 경제산업성, 외무성, (사)러시아 NIS, 무역회(ROTOB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다양한 정

부와 민간의 기구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K-Business Center 설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 등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EEF),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 소치 러시아 투자포럼(RIF)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자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선전하는 장으로서 발다이 클럽 재단이 주최하는 발다이 클럽(Valdai Club)과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하는 프리마코프 독회(Primakov Readings)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은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포럼을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간주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왔다. 더구나 행사가 임박해서야 대표단을 조직하고 무리하게 별도 세션을 추진하거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세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 참가가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제포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기대를 고려해 포럼 참여를 정례화해야 하며, 이를 한·러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내부에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참가준비 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포럼별 및 시기별로 분명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대표단을 조직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는 적어도 1년 단위로 국제포럼 별 담당 정부부처를 선정하거나 범 부처 TF를 조직하여 사전에 러시아 측 파트

너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요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표단과 세션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둘째, 사전에 주요 국제포럼별 특성에 맞는 활용 매뉴얼을 마련함과 동시에, 포럼 직후에는 논의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존 협력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또는 신규 협력과제를 포함한 보고서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거쳐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협력 논의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자료]

- 남북교류지원협회, 전략물자관리원. 2018.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및 미국 독자제재 등」. (9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013 Eurasia Initiative -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세르게이 루코닌, 올가 쿠즈네초바. 2018.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연구보고서 18-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 2016.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자료 16-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원. 2018.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8-028. KOTRA.
- 서동주. 2009.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이상과 현실」.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5호.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염동호. 2018. 「극동지역에서 일·러 경제협력 사례 연구」. 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승은. 2006.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제29집.
- 우창빈.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제52권 제1호.
- 외교부. 2018. 『2018 러시아 개황』.
- 윤익중. 2015.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윤익중, 이성규. 2018.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 (2012~2017): SWOT 분석을 적용하여」. 『국제지역연구』, 21(5).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승신, 이현태,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7-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광성일, 이철원, 민지영, 제성훈, P. Kadochnikov, E. Gherman, E. Rogatnykh, A. Knobel, T. Aliev, A. Sokolyanskaya. 2015.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진. 2015. 『한-러시아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기업 러시아 진출방안』. 극동 러시아 투자진출 세미나 설명회자료. 기획재정부, KOTRA, 산업연구원.
- 제성훈, 강부균. 2013.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3-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 루코닌. 2014.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성훈. 2014.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외교』, 110호.
- 조영관. 2017.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영문 자료]

- Akerlof, George A. 1970.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3).
- Bevir, Mark. 2012. *Governanc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James D. J. 2013.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Russian-Japanese Relations." *Post-Soviet Affairs*, 29(3).
- EEF. 2019. "Business Programme for the Fifth Eastern Economic Forum." (Programme accurate as at September 4)
- Hofstede, Geert. 2001. *Culture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2nd Ed. Newbury Park.
- Jeong, Minhyeon. 2018. "Endogenous Financial Friction and Growth." Working Pape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Lucas, Robert. 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9, Issue 2.
- Park, Joungho, Boogyun Kang, and Jiyoung Min. 2018. "Recent Development of Russia - Japan Economic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World Economy Brief*, Vol. 8 No. 3. KIEP.
- Schmitz, Patrick W. 2001. "The Hold-Up Problem and Incomplete Contracts: A Survey of Recent Topics in Contract Theory." MPRA Working Paper.

- Shagina, Maria. 2019. "Sanctions in Japan-Russia Economic Relations: Impact and Adaption." *Focus Asia*.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June)
- SPIEF. 2019.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Programme." (Programme accurate as June 6)
- UNDP. 2014.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ng Governan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UNDP Discussion Paper.
- Williamson, Oliver 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3).

[논문 자료]

- Андреев Петр Сергеевич. 2013. "Россия-Вьетнам: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бщество: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No. 1.
-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2016a.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по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вразийс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юзом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ьетнам."
- _____. 2016b. "Обзор ключевых положений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вразийс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юзом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ьетнам."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2008.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 _____. 2019.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за 2018 год и задачах на 2019 год."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2018. "Декларация целе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условий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и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 Федоров Н. В. 2017. "Зон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ЕАЭС - Вьетнам: Итоги перв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Вестник ММА*.

[온라인 자료]

- 기획재정부(a). 『시사 경제용어사전』. <http://www.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검색일: 2019. 9. 3).
- _____(b). 2015. 「유라시아 경협 및 기업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 - 제1차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월 6일).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nxn8ycf7i8k7PO1ZW7rdy1Hy.node30?atchFileId=ATCH_OLD_00004093509&fileSn=461268 (검색일: 2019. 11. 3).
-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http://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131>(검색일: 2019. 11. 8).
- 「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 공동언론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17>(검색일: 2019. 11. 8).
- 「文대통령 · 푸틴, 한 · 유라시아 FTA 추진...교역액 年300억 달러로」. 2017. 『연합뉴스』. (9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6410001>(검색일: 2019. 11. 8).
- 「文대통령 “남북러 3각협력, 철도연결이 추진 가능성 가장 커”(종합)」. 2018. 『연합뉴스』. (6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00551001>(검색일: 2019. 11. 10).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lsEffInfoP.do?lsiSeq=196933#>(검색일: 2019. 11. 8).
- 「[신년기획] 자원개발 사업 주도할 전문기관 필요하다」. 2015. 『이투뉴스』. (1월 1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63> (검색일: 2019. 11. 21).
- 「신북방 경제협력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 2018. 산업통상자원부. (6월 25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0579&bbs_cd_n=81(검색일: 2019. 11. 10).
- 「신북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검색일: 2019. 8. 30).
- 외교부. 2018. 「제18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5월 18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2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19. 11. 8).

- 「[전문]한국-러시아 공동성명…남북러 철도 연결 공동연구」. 2018. 『아시아경제』. (6월 22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62223173535343> (검색일: 2019. 11. 10).
- 「정부, 러시아 정부정책 결정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2016. 『연합뉴스』. (3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304187500002>(검색일: 2019. 9. 3).
- 「정재호 의원 “한러 경제협력 금융지원 확대해야”」. 2017. 『연합인포맥스』. (7월 17일).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157>(검색일: 2019. 11. 5).
- 「제2차 한-러 협의회 개최 결과」. 201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월 14일). http://www.bukbang.go.kr/bukbang/issue_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23(검색일: 2019. 11. 8).
- 「中·러·인도, 서방국 중심 ‘SWIFT’ 대항마 키운다」. 2019. 『아시아경제』. (10월 30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3011120921425>(검색일: 2019. 9. 10).
- 「코트라, 러시아 현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오픈」. 2017. 『중앙일보』. (11월 24일). <https://news.joins.com/article/22146193>(검색일: 2019. 11. 10).
- 「푸틴 만난 시진핑 “中-러시아 관계, 어떤 변화에도 영향 받지 않을 것”」. 2019. 『동아닷컴』. (6월 6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06/95868059/1>(검색일: 2019. 8. 16).
- 「2018 한-러 교역동향」. 2019.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월 21일).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43/view.do?seq=13415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검색일: 2019. 11. 8).
- 「한국 투자자의 날」.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SuppprtSysDetail.do?supprt_sys_seq=392(검색일: 2019. 11. 10).
- 「한-러 지방협력포럼 폐막…양국 지방협력 발판 마련」. 2018. 『연합뉴스』. (11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9124100053>(검색일: 2019. 11. 10).
-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2013. 외교부. (12월 3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31161&pageIndex=2686&repCodeType=A&repCode=&startDate=2008-02-29&2019-03-23&srchWord=>(검색일:2019. 11. 3).

- 「한-러 30억달러 금융지원 협력, 어디다 쓰나」. 2013. 『머니투데이』. (11월 13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111317311624414>
 (검색일: 2019. 11. 5).
-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 내년 2월부터 운영」. 2015. 『머니투데이방송』. (12월 11일). <http://news.mtn.co.kr/v/2015121116015674498>(검색일: 2019. 11. 5).
- 「한러, 철도사업 공동개발·FTA 협상절차 추진 등 MOU 19건 체결」. 2018. 『연합뉴스』. (6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128700001>(검색일: 2019. 11. 10).
- 「한-러 협의회 출범...‘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가동」. 2018. 『연합뉴스』. (3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51223000003>(검색일: 2019. 11. 8).
- 「한-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142(검색일: 2019. 11. 10).
-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 외교부. (6월 17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53>(검색일: 2019. 11. 8).
-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08584>(검색일: 2019. 11. 10).
- 「한전, ‘한-러 전력계통 연결’ 추진...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 순항」. 2018. 『중앙일보』. (6월 24일). <https://news.joins.com/article/22742717>(검색일: 2019. 11. 8).
- “19th Meeting of Sino-Russian Education Cooperation Subcommittee held in Moscow.” 2019. *MINISTRY OF EDUC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16). http://en.moe.gov.cn/news/press_releases/201907/t20190717_390977.html(검색일: 2019. 8. 16).
- “Agreement on Establishing Joint Russian-Chinese Investment Fund Signed.” 2016. *RUSNANO*. (January 19). <https://en.rusnano.com/press-centre/news/20160119-rusnano-agreement-on-establishing-joint-russian-chinese-investment-fund-signed>(검색일: 2019. 9. 13).
- “China and Russia: partnership of strategic coordination.” https://www.fmprc.gov.cn/mfa_eng/ziliao_665539/3602_665543/3604_665547/t18028.shtml(검색일: 2019. 9. 13).
- “China and Russia Signs an MOU on Air Transport.” 2019.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July 30). <http://www.caac.gov.cn/en/GD>

- TPXW/201907/t20190730_197825.html(검색일: 2019. 8. 16).
- “China, Russia Agree to Speed Up Talks on Joint Helicopter Project - Minister.” 2018. *SPUTNIK*. (September 21). <https://sputniknews.com/world/201809211068219640-china-russia-helicopter/>(검색일: 2019. 8. 16).
- “China, Russia hold meeting on humanities cooperation.” 2018. *MINISTRY OF EDUC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31). http://en.moe.gov.cn/news/media_highlights/201810/t20181031_353246.html(검색일: 2019. 8. 16).
- “China, Russia set to double trade to US\$200 billion by 2024 with help of soybeans.”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27932/china-russia-set-double-trade-us200-billion-2024-help-soybeans> (검색일: 2019. 11. 6).
- DEInternational-AHK. <https://www.ahk.de/en/services/>(검색일: 2019. 11. 12).
- “Deutsch-Russische Initiative für Digitalisierung der Wirtschaft(GRID).” *Deutsch-Russische Auslandshandelskammer*. <https://russland.ahk.de/netzwerk/initiative-digitalisierung-grid/>(검색일: 2019. 9. 10).
- DEUTSCH-RUSSISCHES FORUM E.V. ГЕРМАНО-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https://www.deutsch-russisches-forum.de/ru/o-nas/peterburgskij-dialog/>(검색일: 2019. 9. 10).
- “EU extends sanctions on Russia over Ukraine.” 2018. *DW*. (December 13). <https://p.dw.com/p/3A4YU>(검색일: 2019. 11. 4).
- FIAC. <https://fiac.ru/>(검색일: 2019. 11. 7).
- “First China-Russia Think Tank Forum kicks off in Beijing.” 2018. *People’s Daily Online*. (May 31). <http://en.people.cn/n3/2018/0531/c90000-9466308.html>(검색일: 2019. 9. 13).
- “Harbin Bank At Forefront Of Sino-Russian Financial Cooperation.” 2018. *Global Finance*. (July 5). <https://www.gfmag.com/topics/sponsored-content/harbin-bank-forefront-sino-russian-financial-cooperation> (검색일: 2019. 9. 10).
-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https://www.mofa.go.jp/region/europe/russia/economy/jric.html> (검색일: 2019. 9. 16).

- “JOGMEC provides Equity Financing and Loan Guarantee for Mitsui’s participation in the Arctic LNG 2 Project and signed Share Purchase Agreement.” 2019. *JOGMEC*. (June 29). http://www.jogmec.go.jp/english/news/release/news_03_000009.html(검색일: 2019. 11. 10).
- “Leading Russian and Chinese companies to increase mutual investments.” 2018. *RDIF*. (September 11). https://rdif.ru/Eng_fullNews/3410/(검색일: 2019. 9. 11).
- “Loan for Acquisition of Interest in Arctic LNG 2 Project in Gydan Peninsula, Russia.” 2019. *JBIC*. (July 2).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19/0702-012320.html>(검색일: 2019. 11. 10).
- “Lokalisierung und Mittelstand.” 2016. *Ost-Ausschuss - Osteuropaverein der Deutschen Wirtschaft*. (October 31). https://www.oaev.de/de/SAG_Deutschland_Russland_Oktober_2016(검색일: 2019. 9. 10).
- “Memorandum XV Joint Meeting of the Japanese-Russian and Russian-Japanese Committees on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keidanren.or.jp/en/policy/2018/107.html>(검색일: 2019. 9. 4).
- “METI Holds the 6th Japan-Russia Meeting Concerning SME Cooperation.”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8/1210_002.html(검색일: 2019. 9. 16, 2019. 9. 22).
- “Mr.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Visited Russia.”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6/1108_01.html(검색일: 2019. 9. 22).
- OAOEV. <https://www.oaev.de/>(검색일: 2019. 11. 12).
- Pulsar Venture Capital. <http://pulsar.vc/index.php/about-us/>(검색일: 2019. 11. 21).
- President of Russia(a). 2019. “Press statements following Russian-Chinese talks.” (June 5).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672>(검색일: 2019. 8. 16).
- _____(b). 2013. “Press statements and answers to journalists’ questions following Russian-Japanese talks.” (April 29).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8000>(검색일: 2019. 9. 21).
- “RCIF, Suiyong Capital and Dazheng Investment Group launch the China-Russia Regional RMB Fund.” 2019. *RDIF*. (April 26). https://rdif.ru/Eng_fullNews/4052/(검색일: 2019. 9. 13).

- “RCIF and Tus-Holdings expand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the technology & innovation sector.” 2018. *RCIF*. (September). http://rcif.com/en/articles/articles_1537488000033.htm(검색일: 2019. 9. 13).
- “RDIF AND RCIF LAUNCH \$2BLN AGRICULTURAL INVESTMENT FUND.” 2015. *Russia-China Investment Fund(RCIF)*. (May 8). http://rcif.com/en/articles/articles_1431025200018.htm(검색일: 2019. 9. 13).
- ROTOBO, <http://www.rotobo.or.jp/about/guide.html>(검색일: 2019. 9. 4).
- “Russia and China discussed cooperation in Space.” 2019. *GLAVKOSMOS*. (April 29). <https://www.glavkosmos.com/en/144/>(검색일: 2019. 8. 16).
-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 2018.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RDIF)*. (June 8). https://rdif.ru/Eng_fullNews/3329/(검색일: 2019. 9. 13).
- “Russia and Japan launch joint \$1 billion fund to invest in healthcare, industrial and tech projects.” 2017. *East-West Digital News*. (September 11). <https://www.ewdn.com/2017/09/11/russia-and-japan-launch-joint-investment-fund-for-healthcare-industrial-and-tech-projects/>(검색일: 2019. 9. 2).
- “Russia and Japan Set Up a Joint Venture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in the Far East.” 2018. *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 (February 16). <https://investvostok.ru/en/news/1541/>(검색일: 2019. 9. 2).
- “Russia-China agricultural Fund is going to invest up to 10 bln USD into agricultural projects under the guidance of FEDF.” 2015. *Far East Development Fund*. (December 17). https://www.fondvostok.ru/en/press/press_release/russia-china-agricultural-fund-is-going-to-invest-up-to-10-bln-usd-into-agricultural-projects-under-/?sp_hrase_id=7438(검색일: 2019. 9. 13).
- Russia-China Investment Fund(RCIF). <http://rcif.com/en/index.htm>(검색일: 2019. 9. 13).
- “Russia, China, Set Up US\$1 Billion Technology Innovation Fund.” 2019. *Russia Briefing*. (July 4).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china-set-us-1-billion-technology-innovation-fund.html/>(검색일: 2019. 9. 13).

- “Russian and Japanese tech players and investors create business association.” 2019. *East-West Digital News*. (April 16). <https://www.ewdn.com/2019/04/16/russian-and-japanese-tech-players-and-investors-create-business-association-%EF%BB%BF/>(검색일: 2019. 9. 2).
- “Russian sovereign fund agrees \$3 billion high-tech investment partnerships with Middle East, Chinese players.” 2019. *East-West Digital News*. (June 11). <https://www.ewdn.com/2019/06/11/russian-sovereign-fund-agrees-3-billion-high-tech-investment-partnerships-with-middle-east-chinese-players/>(검색일: 2019. 9. 13).
- “Russia’s Leader and China’s Shenzhen Capital launch \$100 million tech fund.” 2018. *East-West Digital News*. (July 11). <https://www.ewdn.com/2018/07/11/russias-leader-and-chinas-shenzhen-capital-launch-100-million-tech-fund/>(검색일: 2019. 9. 13).
- “Sberbank signs agreement creating a platform to address current issues of Russian-Chinese financial relations at EXPO-2015 in Harbin.” 2015. *Sberbank*. (October 16). <https://www.sberbank.com/news-and-media/press-releases/article?newsID=dcde6ca3-fcd6-48c9-860a-3fd5ed3740a1&blockID=7®ionID=77&lang=en>(검색일: 2019. 9. 10).
- “Second Meeting of the Japan-Russia High-Level Working Group for Realizing the Eight-Point Cooperation Plan Held.”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8/0222_002.html(검색일: 2019. 9. 16).
- “Second Russian-Chinese Energy Business Forum to Be Held in June during SPIEF 2019.” <https://forumspb.com/en/news/news/second-russian-chinese-energy-business-forum-to-be-held-in-june-during-spief-2019/>(검색일: 2019. 9. 13).
- “Sino-Russian energy cooperation set to expand after meeting in Moscow.” 2018. *CHINADAILY*. (September 19). www.chinadaily.com.cn/a/201809/19/WS5ba1aad4a31033b4f4656dd3.html(검색일: 2019. 8. 16).
- “Sixth China-Russia Expo opens in Harbin.” 2019. *Chinadaily*. (June 15). <http://www.chinadaily.com.cn/a/201906/15/WS5d04a875a3103dbf14328668.html>(검색일: 2019. 9. 13).
- “S&T Subcommittee of China-Russia Regular Prime Ministers’ Meeting Holds 23rd Session in Harbin.” 2019. *MINISTRY OF SCIENCE AND*

-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19). http://en.most.gov.cn/eng/pressroom/201907/t20190719_147855.htm(검색일: 2019. 8. 16).
- “Strategische Arbeitsgruppe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tagt in Moskau.” 2018. *AHK-News*. (June 27). <https://russland.ahk.de/infothek/news/detail/strategische-arbeitsgruppe-fuer-wirtschaft-und-finanzen-tagt-in-moskau/>(검색일: 2019. 9. 10).
- “The 5th Meeting of China-Russia Subcommitte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Held in Dalian.”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31). http://english.agri.gov.cn/news/dqnf/201808/t20180831_296028.htm(검색일: 2019. 8. 16).
- “The 6th Meeting of the China-Russia Satellite Navigation Key Strategic Cooperation Project Committee Convened in Kazan, Russia.” 2019.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ugust 31). http://en.beidou.gov.cn/WHATSNEWS/201909/t20190905_18833.html(검색일: 2019. 8. 16).
- “The 21st Meeting of China-Russi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ub-Committee Held in Moscow.” 2018.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ptember 22).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significantnews/201809/20180902790523.shtml>(검색일: 2019. 8. 16).
- “The 23rd Session of Chinese-Russian Nuclear Subcommittee took place.” 2019. *ROSATOM*. (July 19). <https://www.rosatom.ru/en/press-centre/news/the-23rd-session-of-chinese-russian-nuclear-subcommittee-took-place/>(검색일: 2019. 8. 16).
- “VEB and Harbin Bank to create innovation support funds with target volume of up to USD 700 million.” 2017. *Russian Investment Forum*. (June 20). <https://rusinvestforum.org/en/news/veb-i-bank-kharbina-sozdadut-fondy-po-podderzhke-innovatsiy-s-tselevym-obemom-do-700-mln/>(검색일: 2019. 9. 13).
- “Xi Jinping: Russia and China staying in tune with the times.” 2019. *Tass*. (June 5). <https://tass.com/world/1061613>(검색일: 2019. 8. 19).
- 「第8回日・露・中央アジア交流促進会議の開催」. https://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4_002347.html(검색일: 2019. 11. 9).
- 「経団連について」. <https://www.keidanren.or.jp/profile/pro001.html>(검색일: 2019. 11. 9).

2019. 11. 9).
- 「ロシアのビジネス環境等に関するアンケート（2019年度）結果」.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19/068.html>(검색일: 2019. 11. 9).
- 「『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国際経済フォーラムに朝田日本ロシア経済委員長が参加』. 2018. 『週刊 経団連タイムス』. (6月 14日).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18/0614_03.html(검색일: 2019. 11. 9).
- 「日露貿易投資促進機構とは」 <http://www.jp-ru.org/kikotowa.htm>(검색일: 2019. 9. 11).
- 「日本側機構の活動開始に関する発表」. <http://www.jp-ru.org/press.htm>(검색일: 2019. 9. 11).
- 「日本センター事業」. https://www.mofa.go.jp/mofaj/area/russia/shien/j_center.html(검색일: 2019. 9. 11).
-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https://www.investvostok.ru/>(검색일: 2019. 9. 3).
- “Банк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Вьетнам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2017. *Банк России*. (August 23). <https://www.cbr.ru/Press/event/?id=1295>(검색일: 2019. 9. 16).
- “В Берлине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Россия-ФРГ.” 2016. *Риа новости*. (June 24). <https://ria.ru/20160624/1451203874.html>(검색일: 2019. 9. 10).
- “Вьетнам отменит пошлины на ввоз автомобилей ГАЗ, КаМАЗ и “Соллерс” из России.” https://www.dp.ru/a/2016/03/21/GAZ_Kamaz_i_Sollers/(검색일: 2019. 9. 16).
- “Время для драй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рманским бизнесом.” 2017.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October 12). <https://rg.ru/2017/10/12/putin-roobeshchal-nemeckim-biznesmenam-novye-vozmozhnosti.html>(검색일: 2019. 11. 4).
- “ВТБ продал банк «РПБ Москва».” 2015. *Ведомости*. (August 20). <https://www.vedomosti.ru/finance/news/2015/08/20/605636-vtb-prodal-vrb-moskva>(검색일 2019. 9. 16).
- Газпром экспорт. <http://www.gazpromexport.ru/>(검색일: 2019. 11. 19).
- “Германия.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и.” <http://www.ved.gov.ru/exportcountries/de/>(검색일: 2019. 11. 19).

- “Дания одобрила “Северный поток - 2”.” 2019. *DW*. (October 30).
<https://www.dw.com/ru/%D0%B4%D0%B0%D0%BD%D0%B8%D1%8F-%D0%BE%D0%B4%D0%BE%D0%B1%D1%80%D0%B8%D0%BB%D0%B0-%D1%81%D0%B5%D0%B2%D0%B5%D1%80%D0%BD%D1%8B%D0%B9-%D0%BF%D0%BE%D1%82%D0%BE%D0%BA-2/a-51049540>(검색일: 2019. 11. 12).
- “Заявление МИД России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о размещ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http://www.mid.ru/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349040(검색일: 2019. 11. 5).
-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2016. (September 21). <http://government.ru/news/24619/>(검색일: 2019. 9. 16).
- “Игорь Шувал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2017. (September 6). <http://government.ru/news/29185/>(검색일: 2019. 9. 16).
- ИННОПРОМ. <https://www.innoprom.com/>(검색일: 2019. 9. 3).
-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ВРБ. <https://web.archive.org/web/20160402080535/http://www.vrbank.com.vn/NewsShow.aspx?id=5&lang=rus>(검색일: 2019. 9. 16).
- “История немцев России: Немцы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IX - XVII веков.” <https://geschichte.rusdeutsch.ru/14/26/>(검색일: 2019. 11. 12).
- “Комитет Сената США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го потока 2”.” 2019. *Интерфакс*. (July 31). <https://www.interfax.ru/business/671113>(검색일: 2019. 9. 10).
- “Курт Волкер: спустя четыре года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ет нарушать Мин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2019. *VoA*. (February 12). <https://www.golos-ameriki.ru/a/minsk-agreement-fourth-anniversary/4783746.html>(검색일: 2019. 11. 12).
- “Лавров: РФ открыта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формат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Германией.” 2019. *TACC*. (July 19). <https://tass.ru/politika/6678967>(검색일: 2019. 9. 10).

- “Максим Аким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Вьетнам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2018. (October 29). <http://government.ru/news/34495/>(검색일: 2019. 9. 16).
-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 2017. *Риа но вости*. (May 2). <https://ria.ru/20170502/1493229839.html>(검색일:2019. 9. 1, 2019. 9. 10).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http://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foreignEconomicActivity/>(검색일: 2019. 9. 2).
- _____(b). Руковод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검색일: 2019. 9. 3).
- Минпромторг(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http://minpromtorg.gov.ru/activities/foreign_economic_affair/maps_world/(검색일: 2019. 10. 28).
- _____(b).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структура-Департаменты. <http://minpromtorg.gov.ru/ministry/organization/dep/>(검색일: 2019. 10. 28).
- “Немецкие лоббисты обеспокоены санкциями США за участие в “Северном потоке - 2”.” 2019. *DW*. (August 7). <https://www.dw.com/ru/немецкие-лоббисты-обеспокоены-санкциями-сша-за-участие-в-северном-потоке-2/a-49926542>(검색일: 2019. 9. 10).
- “«НОВАТЭК», Mitsui и JOGMEC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доли в проекте «Арктик СПГ 2».” 2019. *Arcticinfo*. (July 1).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NOVATEK_Mitsui_i_JOGMEC_podpisali_dogovor_kupli_prodazhi_doli_v_proekte_Arktik_SPG_2/(검색일: 2019. 9. 23).
-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ВРБ. <https://web.archive.org/web/20160402141000/http://www.vrbank.com.vn/NewsShow.aspx?id=3&lang=rus>(검색일: 2019. 9. 16).
- “О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й-Герман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2018. *Деловая Россия*. (May 31). <http://deloros67.ru/anonsy/mezhdunarodnyeo-zasedanii-rossijsko-germanskoj-rabochej-gruppy/>(검색일: 2019. 9. 10).
- “О проведении 16-го засе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й-Вьетнамской Рабочей гр

- уппы по межбанков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2018. *Банк России* и. (August 29). https://www.cbr.ru/today/pk_18642/20180829_Vietnam/(검색일: 2019. 9. 16).
- Открытые инновации. <https://openinnovations.ru/>(검색일: 2019. 9. 3).
-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검색일: 2019. 9. 10).
- ПМЭФ. <https://forumspb.com/?lang=ru>(검색일: 2019. 9. 3).
- Портал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a). <http://www.ved.gov.ru/>(검색일: 2019. 11. 3).
- _____(b). Страны мира. <http://www.ved.gov.ru/exportcountries/>(검색일: 2019. 9. 5).
- _____(c).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комиссии. http://www.ved.gov.ru/rus_export/non_financial_measures/institutional_arrangements/(검색일: 2019. 9. 5).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1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March 18). <http://government.ru/docs/902/>(검색일: 2019. 9. 1).
- _____.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April 15). <http://government.ru/docs/11933/>(검색일: 2019. 9. 1).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 Вьетнам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16. *Банк России*. (August 18). <http://cbr.ru/eng/press/event/?id=520>(검색일: 2019. 9. 16).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http://kremlin.ru/acts/bank/41451>(검색일: 2019. 10. 23).
- “Российская венчурная компания и японская Mizuho создадут инвестфонд.” 2019. *TASS*. (September 5). <https://tass.ru/ekonomika/6846557>(검색일: 2019. 9. 23).
- Российск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рум. <https://rusinvestforum.org/>(검색일: 2019. 9. 3).
- 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ортный центр. <https://www.exportcenter.ru/company/>(검색일: 2019. 9. 5, 2019. 11. 3).
-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https://rdif.ru/Partnership/>

(검색일: 2019. 9. 5).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ьетнам. <https://vietnam.mid.ru/rossijsko-v-etnamskie-otnosenia>(검색일: 2019. 9. 16).

“Россия и Бавария создали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17. *ИА RNS*. (March 17). <https://rns.online/economy/Rossiia-i-Bavariya-sozdali-rabochuyu-gruppu-po-razvitiyu-ekonomicheskogo-sotrudnichestva-2017-03-17/>(검색일: 2019. 9. 10).

“Россия и Германия обсуждают вопросы локализац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 2017. *Рамблер*. (October 2). https://news.rambler.ru/other/38051903/?utm_content=rnews&utm_medium=read_more&utm_source=copylink(검색일: 2019. 9. 10).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Германии.” 2018. *ИА Красная Весна*. (December 13). <https://rossaprimavera.ru/news/a92c84d1https://rossaprimavera.ru/news/a92c84d1>(검색일: 2019. 9. 10).

РСПП. <http://rspp.ru/about/inform/>(검색일: 2019. 11. 21).

“РФ и Вьетнам вложат \$500 млн в совместные несырьевые проекты.” 2017. *Известия*. (June 29). <https://iz.ru/612707/2017-06-29/rf-i-vietnam-vlozhat-500-mln-v-sovmestnye-nesyryevye-proekty>(검색일: 2019. 9. 16).

“РФ и Вьетнам согласовали более 20 крупных совместных инвестпрограмм.” 2017. *Мир перемен*. (June 29). <http://mirperemen.net/2017/06/rf-i-vietnam-soglasovali-bolee-20-krupnyx-sovmestnyx-investprogramm/>(검색일: 2019. 9. 16).

“РФП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Вьетнама создают Российско-вьетнамск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латформу.”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https://rdif.ru/fullNews/1666/>(검색일: 2019. 9. 16).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ЕАЭС - Вьетнам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2016. *ТАСС*. (October 5). <https://tass.ru/ekonomika/3679048>(검색일: 2019. 9. 16).

-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ся.” <http://ludinovskiy.ru/index.php?page=1&w=2&id=7049>(검색일: 2019. 11. 19).
- “Союз немецкой экономики.” 1999.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April 27). <https://www.kommersant.ru/doc/15416>(검색일: 2019. 11. 19).
- “СПИК 2.0. Как изменятся предмет, порядок заключения и льготы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онтрактам?” <https://www.eg-online.ru/article/398317/>(검색일: 2019. 11. 19).
- “Стратегия партнёрства: почему Вьетнам ищет сближения и с Россией, и с США.” 2017. *RT*. (June 29). <https://russian.rt.com/world/article/404117-vietnam-vizit-rossiya-sblizheniye>(검색일: 2019. 9. 16).
-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нешние связи. <https://tpprf.ru/ru/vneshnie-svyazy/>(검색일: 2019. 9. 5).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8 декабря 2003 г. N 164-ФЗ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00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December 18). <https://rg.ru/2003/12/18/vneshtorg-dok.html>(검색일: 2019. 10. 23).
-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s://www.fondvostok.ru/about/>(검색일: 2019. 10. 23).
- “Что такое Мин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2016. *Сноб*. (March 25). <https://snob.ru/selected/entry/106263/>(검색일: 2019. 11. 19).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Вьетнам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Валдай». <http://ru.valdaiclub.com/multi-media/infographics/ekonomika-rossiya-vietnam/>(검색일: 2019. 9. 16).
- “Эксперт рассказал, как Германия отстояла "Северный поток — 2”.” 2019. *Риа новости*. (April 30). <https://ria.ru/20190430/1553166977.html>(검색일: 2019. 9. 10).
- “ЕС продлит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так как не видит прогресса в выполнении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2018.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December 13). <https://www.currenttime.tv/a/eu-russia-sanctions-minsk/29654841.html>(검색일: 2019. 11. 19).
- “1-е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бавар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2017. *Efwab*. (October 17). <https://efawb.ru/news/view/481>(검색일: 2019. 9. 10).
- “10-12 июля 2018 года в В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

- urger-dialog.ru/home/novosti/1596-10-12-iyulya-2018-goda-v-vene-sostoyalos-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foruma-peterburgskij-dialog.html(검색일: 2019. 9. 10).
- “11-14 марта 2014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530-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1.html>(검색일: 2019. 9. 10).
- “18 июня 2017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их групп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логическ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1466-18-iyunya-2017-goda-v-moskve-sostoyalos-sovmestnoe-zasedanie-rabochikh-grupp-ekonomika-i-ekologicheskaya-modernizatsiya-foruma-peterburgskij-dialog.html>(검색일: 2019. 9. 10).
- “19-22 ма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870-19-22-maya-2015g-sostoyalos-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v-g-petropavlovsk-kamchatskij.html>(검색일: 2019. 9. 10).
- “22-24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в Мюнхен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1295-22-24-sentyabrya-2016-goda-v-g-myunkhen-sostoyalos-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html>(검색일: 2019. 9. 10).
- “25 сентября 2015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978-25-sentyabrya-2015g-sostoyalos-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html>(검색일: 2019. 9. 10).
- “25-27 сентября 2014 года в Герм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Форума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http://petersburger-dialog.ru/home/novosti/626-25-27-sentyabrya-2014-goda-v-germanii-sostoyalos-zasedanie-rabochej-gruppy-ekonomika.html>(검색일: 2019. 9. 10).

[DB 자료]

CEIC Database.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19. 11. 8).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 9. 19, 2019. 11. 21).

Банк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го сектора. https://www.cbr.ru/statistics/macro_itm/svs/(검색일: 2020. 2. 6).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s://www.gks.ru/>(검색일: 2019. 9. 19).

[회의 및 면담자료]

백용훈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 (2019. 11. 6).

염동호 한신대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5, 서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관계자 면담 내용(2019. 10. 30, 도쿄).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 내용. 「러시아·중국 경제관계 평가 및 전망」. KIEP
전문가풀 세미나(2017. 6. 9, 서울).

최민희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차장 면담 내용(2019. 10. 23, 모스크바).

최준식 리연방 칼루가주 경제고문 면담 내용(2019. 10. 21, 모스크바).

한상민 한림대학교 교수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25).

Liu Huaqin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유라시아연구소
장 면담 내용(2019. 10. 28, 베이징).

Wang Jinzhao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부장 면담 내용(2019. 10. 28, 베이징).

Zhang Tingting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박사 발표 내용.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역할 및 평가」.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8, 베이징).

Bychkova Daria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업무 담당 발표 내용. 「러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거버넌스」.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1. 6, 서울).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정보연구소 소장 권한대행 비공개
발표 내용.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전략적 경제협력의 특징」.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25, 모스크바).

Vladimir Mazyrin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아세안센터장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9. 10. 30, 모스크바).

러시아 고등경제대 유럽경제학과 교수 비공개 면담 내용(2019. 10. 29, 모스크바).
러·독상공회의회소 前직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간담회(2019. 10. 31,
상트페테르부르크).

Executive Summa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Focusing on Russia

Joungho Park, Minhyeon Jeong, Boogyun Kang, Dongyeon Jeong, Cho Rong Kim,
Sung Hoon Jeh, Sergey Lukonin, and Ekaterina Zaklyazminskaya

Preparing for the next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is a true starting point for Korea's future national strategy of building a “bridging nation that connects the continent with the sea.” In order to achieve this national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that can effectively promote a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with Russia. As in Russia the government plays a particularly influential role, creating strong ties through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s meetings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t the private level can be a useful approach to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pter 2 presents our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key role of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In particular, while paying attention to transaction costs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level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we attempted to make theoretical definitions of search and monitoring costs, which are the sources of transaction costs. Ultimately, good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defined as a series of institutional systems that effectively lower transaction costs.

In Chapter 3, an in-depth study of Russia's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was conducted. First we present the direc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based on the Russian government's foreign economic strategy, and discuss promising directions for promoting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Korea, Germany, Japan, China, and Vietnam). The Russian government has sought to expand its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bilateral relations with major partner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rapidly emerging in the global economy, Russia has diversified its trade structure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execut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Far East and Siberia. Russia has also given priority to reactivating its investment cooperation with Vietnam, which it has enjoy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since the Soviet Union era, and Germany, with which it established close relations during the post-Cold War unification process.

In Chapter 4 we analyze various cases of economic governance in four major countries (Germany, Japan, China and Vietnam). Each of these countries are common in that they share regional and strategic interests with Russia. While Germany and Japan are participating i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China and Vietnam are not. China and Germany have established a strong economic governance platform as Russia's first and second largest trading and import partners in the area of energy resources. In addition, Vietnam has been cooperating with Russia since the Soviet Union era and has maintained close ties with Russia to present

day based on solid mutual trust. While Japan remains a participant i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s undergo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Russia, nevertheless it has been one of Russia's major partner countries for Far East development and Arctic energy cooperation projects.

Chapter 5 provides an overall review of Korea's economic cooperation policy and governance. In September 2017, through a 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3rd Eastern Economic Forum General Assembly held in Vladivostok,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ized its New Northern Poli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set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s the primary goal of the New Northern Policy, also adopting the 9-Bridge Strategy to promote cooperative tasks in nine sectors. However, as we prepare for the 30th year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in 2020, it will be essential to strive for more substance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such, it is time for more fundamental concerns about Korea's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with Russia.

In relation to these concerns, the opin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on Korea's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offer the following potential conclus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economic cooperative bodies establis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point out several entities that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and identify the most efficient and necessary bodies, as well as institutions tha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econd, in the area of public-private and private economic cooperation bodies, we identify institutions that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institutions that should be reorganized and institutions tha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ird, in regard to the

various support systems to promote Korea-Russia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we identify those that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or require fundamental improvement in their operations, and support systems tha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Chapter 6,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present six ways to improve Korea's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with Russia.

박정호(朴正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전임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現, E-mail: joungho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공저, 2017)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공저, 2018) 외

정민현(鄭民鉉)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공저, 2019)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2019) 외

강부균(姜扶均)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g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공저, 2017)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공저, 2018) 외

정동연(鄭東妍)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dyjeong@kiep.go.kr)

김초롱(金 초 룡)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법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crkim@kiep.go.kr)

제성훈(諸 成 勳)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現, E-mail: shjeh@hufs.ac.kr)

저서 및 논문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6)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공저, 2019) 외

세르게이 루코닌(Sergey Lukon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경제학 박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중국센터장

(現, E-mail: sergeylukonin@mail.ru)

저서 및 논문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2016)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공저, 2018) 외

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Ekaterina Zaklyazminskaya)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경제학 박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ekaterina.zakl@gmail.com)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야: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권율 · 정지선 · 허운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김은미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현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19-11 원청-하청간 거래 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 · 강구상 · 권혁주 · 문성만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박정호 · 정민현 · 강부균 · 정동연 · 김초롱 · 제성훈 ·
세르게이 루코닌 · 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 윤여준 · 권혁주 · 정민철 · 김유리 · 황운중 ·
김경훈 · 김원기

-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정영식 · 김정곤 · 한형민 · 정재완 · 이정미 · 김제국 · 윤지현
-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김규판 · 강구상 · 김종혁 · 오태현 · 이현진 · 손원주
-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김현수 · 강민지 · 이정은 · 이용규
-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구경현 · 오수현 · 박혜리 · 김민성 · 황운중
-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조문희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엄준현
-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훈 · 김홍원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걸
-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현상백 · 이효진 · 조고운 · 오윤미
-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덕룡 · 이동은 · 이진희
-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안성배 · 한민수 · 김수빈 · 이진희
-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중

■ 2018년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박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중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병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율가 쿠즈네초바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전자상거래·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테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 김민성 · 안택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평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재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운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18-27 EU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 이명현 · 한홍열 · 주상영 · 정준호 · Martin Falk
- 18-28 EU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 김홍중 · 오태현 · 이현진
- 18-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 박성훈 · 안세화 · 정세원 · 김다현 · 김근효
- 18-30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 남수중 · 왕윤중 · 박순찬 · 박승찬 · 조정원 · 김정인 · 최종석 · 오대원 · 유정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I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Governance: Focusing on Russia

Joungho Park, Minhyeon Jeong, Boogyun Kang, Dongyeon Jeong, Cho Rong Kim, Sung Hoon Jeh, Sergey Lukonin, and Ekaterina Zaklyazminskaya

이 연구는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대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 내실화, 즉 새로운 대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9 788932 217444

ISBN 978-89-322-1744-4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